

연구보고 2012-18

2013~201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장명림 황성온 김미나

머 리 말

우리나라 유아교육 재정 규모가 2005년 이후부터 연평균 18%이상씩 증가하였고,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게 100% 유아학비·보육료 지급, 종일반 운영 유치원 확대되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질 개선이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취학전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이어서 2013년 3월부터는 3, 4세 누리과정까지 확대·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협력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여, 저출산 시대에 보다 질 높은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최근 도입된 중요한 정책의 현장 착근은 물론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사회 협력·지속가능 발전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국정 아젠다를 고려하고, 미래 사회 교육 패러다임 및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유아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하고 바람직한 유아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2013~2017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소요 예산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올바르게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2
II. 유아교육 현황	15
1. 유아교육 일반 현황	15
2. 유아교육 정책 사업 및 예산	20
3. 유아교육 주요 정책	25
4. 요약 및 시사점	41
III. 미래 사회 변화 및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43
1. 미래 사회 및 교육 환경 변화	43
2.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52
3. 요약 및 시사점	62
IV. 유아교육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4
1. 지역별, 기관유형별 이용 차이	64
2.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미흡	69
3. 재정 투자 및 재정 지원 차이	71
4. 기관 설립유형별 교사 배경 및 근무여건 차이	73
5. 소득계층별 차이 및 지원 문제	76
6. 유아교육 지원체계 한계	80
7.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로 인한 통합적 발전의 한계	82
8. 요약 및 시사점	87
V. 유아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90
1. 유아교육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인식	91
2. 유아학비 지원 정책	93

3. 유아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100
4. 유아교육 질적 수준 개선 방법	104
5. 조기 교육격차 관련 지원	109
6.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110
7.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114
8. 요약 및 시사점	117
VI.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120
1. 유아교육 발전 방향	121
2. 유아교육 정책 과제	121
3. 재정 소요 추정	129
4. 정책 제언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40
부록	141
부록 1. 질문지(전문가용)	143
부록 2. 질문지(학부모용)	155

표 차례

〈표 II-1- 1〉 지역 및 설립별 유치원 수(2011)	16
〈표 II-1- 2〉 연령 및 지역별 유치원 원아 수(2011)	17
〈표 II-1- 3〉 설립별 유치원 교사 수(2011)	18
〈표 II-1- 4〉 자격별 유치원 교사 수(2011)	18
〈표 II-1- 5〉 시·도별 5세 무상교육비 지원율(2011)	19
〈표 II-1- 6〉 시·도별 차등교육비 지원율(2010)	20
〈표 II-2- 1〉 유아교육 정책 사업별 세부사업	21
〈표 II-2- 2〉 유아교육·보육 예산(2005~2012)	21
〈표 II-2- 3〉 2011년 유아교육 예산	23
〈표 II-2- 4〉 유아학비 지원 집행액(2010년 결산)	24
〈표 II-2- 5〉 연령별 유치원 취원아 수(2010)	24
〈표 II-2- 6〉 유아학비 지원율(2009, 2010)	24
〈표 II-2- 7〉 대상별 유아학비 지원 단가 및 지원 총액(2011)	25
〈표 II-3- 1〉 유아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역사(1922~2012)	26
〈표 II-3- 2〉 2012년 이후의 유아교육법 개정 현황	27
〈표 II-3- 3〉 교육공무원법 개정 현황	29
〈표 II-3- 4〉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정책 분야 및 핵심 과제	30
〈표 II-3- 5〉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현황	31
〈표 II-3- 6〉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33
〈표 II-3- 7〉 연도별 소요 예산(안)	35
〈표 II-3- 8〉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37
〈표 II-3- 9〉 현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계획	37
〈표 II-3-10〉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38
〈표 III-1- 1〉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인구변화 관련)	44
〈표 III-1- 2〉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정치변화 관련)	44
〈표 III-1- 3〉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경제변화 관련)	45
〈표 III-1- 4〉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사회변화 관련)	46
〈표 III-1- 5〉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과학기술변화 관련)	47

〈표 III-1-6〉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가치관변화 관련)	47
〈표 III-1-7〉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48
〈표 III-1-8〉 만 3-5세 유아 수 예측 추계(2010~2020)	50
〈표 III-1-9〉 유치원 원아, 교사 및 유치원 수 미래 추계(2011~2021)	50
〈표 III-2-1〉 UNESCO의 한국 유아교육·보육 통합 안	59
〈표 IV-1-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10)	65
〈표 IV-1-2〉 시·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2011)	65
〈표 IV-1-3〉 지역별, 설립별 유치원 수(2011)	66
〈표 IV-1-4〉 전체 취원 대상 만 5세 유아의 공·사립유치원 취원율	67
〈표 IV-1-5〉 지역별, 유형별 유치원의 문제점	67
〈표 IV-1-6〉 공립·사립 유치원간 분담 비율(2011)	68
〈표 IV-1-7〉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2007~2011)	69
〈표 IV-1-8〉 서비스 이용자 선호 시설	69
〈표 IV-2-1〉 OECD 국가의 유아교육 재정 투자 비교(2011)	70
〈표 IV-2-2〉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70
〈표 IV-3-1〉 시·도별 유아예산 현황(2010)	71
〈표 IV-3-2〉 교사 1인당 연수지원비(2010)	72
〈표 IV-3-3〉 연도별 유아 1인당 교육예산	73
〈표 IV-3-4〉 유아교육재정 개요(2010)	73
〈표 IV-4-1〉 학위취득별 유치원 교사 현황(2011)	74
〈표 IV-4-2〉 경력연도별 유치원 교사 수(2011)	74
〈표 IV-4-3〉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	75
〈표 IV-4-4〉 유치원 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	75
〈표 IV-5-1〉 유아교육기관 이용과 사교육 이용현황	76
〈표 IV-5-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의 차이 및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	77
〈표 IV-5-3〉 월 평균 보육료·유아학비 및 추가 납부액 차이	78
〈표 IV-5-4〉 걱정되는 영유아 발달 영역	80
〈표 IV-5-5〉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한 문화활동 경험 유무	80
〈표 IV-6-1〉 유아교육진흥원 현황 및 이용률	81
〈표 IV-7-1〉 유아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행정적)	85

〈표 IV-7- 2〉 유아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교사 인력)	86
〈표 V-1- 1〉 의견조사 참여자 특성(전문가)	90
〈표 V-1- 2〉 의견조사 참여자 특성(학부모)	90
〈표 V-1- 3〉 유아교육 정책 과제별 우선순위(1순위)	92
〈표 V-1- 4〉 정책 과제별 추진시기에 대한 의견(전문가)	93
〈표 V-2- 1〉 누리과정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전문가)	94
〈표 V-2- 2〉 누리과정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학부모)	94
〈표 V-2- 3〉 적정 유아학비에 대한 의견(전문가)	95
〈표 V-2- 4〉 적정 유아학비에 대한 의견(학부모)	95
〈표 V-2- 5〉 가구소득 대비 적정 유아학비(방과후 포함)부담에 대한 의견(전문가) ..	96
〈표 V-2- 6〉 가구소득 대비 적정 유아학비(방과후 포함)부담에 대한 의견(학부모) ..	97
〈표 V-2- 7〉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추가비용지원에 대한 의견(전문가)	97
〈표 V-2- 8〉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추가비용지원에 대한 의견(학부모)	98
〈표 V-2- 9〉 방과 후 과정 차등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전문가)	99
〈표 V-2-10〉 유아학비 차등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학부모)	99
〈표 V-3- 1〉 국·공립유치원 적정 취원아 분담율에 대한 의견(전문가)	100
〈표 V-3- 2〉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육성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101
〈표 V-3- 3〉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	102
〈표 V-3- 4〉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학부모) ..	102
〈표 V-3- 5〉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지원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103
〈표 V-3- 6〉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지원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학부모)	104
〈표 V-4- 1〉 교사 지원 정책 우선순위(1+2순위)에 대한 의견(전문가)	104
〈표 V-4- 2〉 누리과정 담당교사 양성기간에 대한 의견(전문가)	105
〈표 V-4- 3〉 누리과정 담당교사 양성기간에 대한 의견(학부모)	105
〈표 V-4- 4〉 사립유치원 교사의 적정 급여에 대한 의견(전문가)	106
〈표 V-4- 5〉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	107
〈표 V-4- 6〉 누리과정 질관리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	108
〈표 V-4- 7〉 방과 후 과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	108
〈표 V-5- 1〉 조기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109
〈표 V-5- 2〉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	110
〈표 V-6- 1〉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111

〈표 V-6-2〉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112
〈표 V-6-3〉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113
〈표 V-6-4〉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학부모)	113
〈표 V-7-1〉 취학전 연령 단계별 체계화 방식에 대한 의견(전문가)	114
〈표 V-7-2〉 취학전 연령 단계별 체계화 방식에 대한 의견(학부모)	114
〈표 V-7-3〉 취학전 연령 단계별 바람직한 관할부처에 대한 의견(전문가)	115
〈표 V-7-4〉 취학전 연령 단계별 바람직한 관할부처에 대한 의견(학부모)	115
〈표 V-7-5〉 유아교육·보육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전문가)	116
〈표 V-7-6〉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견(전문가)	117
〈표 VI-2-1〉 유아교육 중장기 정책 영역 및 정책 과제 요약표	122
〈표 VI-2-2〉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126
〈표 VI-3-1〉 유아교육 발전 세부내용 및 재정소요 제시 항목	130
〈표 VI-3-2〉 신규 추가 정책 과제의 재정 소요 추정안	133

그림 차례

[그림 II-3-1] 만 5세 공통과정과 기존 정책의 비교	34
[그림 II-3-2]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	36
[그림 II-3-3]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 화면	39
[그림 III-2-1] OECD 주요국가의 교육과정 틀	53
[그림 III-2-2]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의 단계적 통합 과정	57
[그림 IV-5-1]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최종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79
[그림 IV-7-1] 유아교육·보육 전달체계	83
[그림 VI-1-1]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과제 도출 절차	12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특히,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선정·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내용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아교육 일반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 주요 정책의 특성과 과제를 분석함.
 - 둘째,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 환경 변화를 전망해 보고, 외국의 유아교육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역별·기관유형별 유아교육 기관 이용 차이,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미흡, 재정 투자 및 여건 차이 등으로 검토함.
 - 넷째, 유아교육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를 개발함.
 - 다섯째,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1차 마련한 유아교육 정책 과제의 적합성을 검토함.
 - 여섯째, 세부 정책 과제별 단·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추가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액을 추정함.

다. 연구 방법

- 국외 문헌연구, 정책토론회, 자문회의, 의견조사, 재정 소요예산 추정함.

2. 유아교육 현황

가. 유아교육 일반 현황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은 총 8,424개이며, 이 중 국·공립유치원은 4,502개, 사립유치원은 3,922개임. 유치원 교사는 총 38,662명이며, 국립유치원에 18명(0.05%), 공립유치원에 9,221명(23.85%), 사립유치원에 29,423명(76.1%)의 교사가 근무함.

나. 유아교육 정책 사업 및 예산

- 유아교육 예산이 연평균 18%이상씩 증감하는 것으로 파악됨. '교직원 인건비'와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사용됨.

다. 유아교육 주요 정책

-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됨.
-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고 공통 적용함.
-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할 것임.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내용이 포함됨.

3. 미래 사회 변화 및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가. 미래 교육적 이슈 및 유아교육 고려사항

- 미래 교육체제는 개방성, 다원화, 다양화의 패러다임 하에 개인의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 환경과 핵심 역량 내용을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해야 함.
- 세계민주시민의 기초 역량과 공동체 의식 배양함. 모두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소외계층 및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취학 전 유아 수 미래전망

- 유치원의 만 3-5세 원아 수는 2011년 대비 2021년에 12.45% 감소, 교원 수는 30,114명으로 감소, 유치원 수는 12.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임.

다. 해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1) 유아교육 국제 동향

- 만 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제도 즉, 공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취학직전 1년의 교육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음.
-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의 유아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2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만 2.5세 또는 3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 틀을 갖추고 있음.

2) OECD 권고사항

- 자녀 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함.
- 가정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평등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벤치마킹 필요함.
-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균등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5세 미만 유아를 위한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일원화 체제)로 통합하는 방향이 고려되어야 함.

3) UNESCO 권고사항

- 먼저 내용·개념이 통합되고 뒤따라 구조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되어야 함.
- 유아교육·보육의 재 개념화 및 재구조화가 지향되어야 함.
- 유아교육·보육의 통합보다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호 교류 및 이동 통로 개방되어야 함.
- 지자체 수준에서 서비스 간의 협력(예: 영차 프로젝트) 중요함.
- 다양한 혜택과 교육을 통한 부모·가족 지원 중요함.
- 공평한 출발을 위한 취약계층 배려 정책 중요함.

4. 유아교육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지역별, 기관유형별 이용 차이

- 만 3세는 어린이집 취원율이, 만 5세는 유치원 취원율이 더 높음.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읍면지역에, 사립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기관수를 제외한 학급 수, 교원 수, 원아 수의 공사립 분담 비율이 균형적이지 못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나.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미흡

- GDP 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정부의 공적 자원 지원을 받는 유아 비율이 49.7%로, OECD 평균 79.7%의 62% 수준에 지나지 않음.

다. 재정 투자 및 재정 지원 차이

- 지역별 총 교육예산 대비 유아교육예산 편차가 존재함. 경기, 경남은 4.2%를 차지하는 반면, 서울은 2.1%임.
-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액 지역 편차가 있으며, 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비 차이가 나타나고, 유아 1인당 교육비는 2010년 기준 2,785천원이며, 유아 1인당 보육 예산은 4,207천원이며, 유아교육비와 보육비의 정부 분담 비율 차이가 있음. 유아교육의 경우 40.9%, 보육은 63.7%로임.

라. 기관 설립유형별 교사 배경 및 근무여건 차이

- 공립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졸자가 52.5%, 사립은 31%이며, 공립유치원은 15~25년 경력교사가 61.1%, 사립은 5년 미만이 전체의 60.1%임. 국립유치원 교사는

월 평균 약 357만원, 공립은 약 330만원, 사립은 166만원의 급여를 받음.

마. 소득계층별 차이 및 지원 문제

- 유아 99.8%가 사교육 이용하며, 유아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 부담 비율이 높으며, 저소득층은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며 일부는 비용 부담이 기관 미이용의 이유가 되기도 함.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들이 가장 걱정되는 자녀의 발달 영역으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꼽았으며, 가정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남.

바. 유아교육 지원체계 한계

-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총 12개의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으며, 4개의 체험교육원이 있음.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중심기관 필요하며, 국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능동적·전문적 지원 필요함.

사.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로 인한 통합적 발전의 한계

-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 수준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제한 및 행·재정적 지원의 비효율성 및 유아교육·보육의 법적·행정적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차이
- 동일 지역내 기관장들은 제한된 대상 유아수(중복되는 만 3-5세)를 놓고 원아 모집시에 불필요한 경쟁, 교육계와 보육계간의 갈등 관계 지속

5. 유아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 교육현장 및 학계 전문가 57인, 학부모 86인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하였고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전문가는 현행 유아학비 지원 금액 및 향후 계획 지지함.
 - 전문가는 유아학비는 가구 소득의 10%이내, 학부모는 5% 이내 적절하다고 응답되었으며, 기본 누리과정은 무상으로,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는 소득별 차등지원 적절하다고 응답됨.
 - 교원의 수업준비 시간 확보 및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 제고, 양성기간 4

년제로, 일원화된 교사자격 필요하다고 응답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청 장학지도 시행 및 누리과정 운영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과 후 과정 기본 운영 지침 필요하다고 응답됨
- 국·공립 유치원의 적정 취원아 분담률은 50%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 수요 신규 발생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설립을 주장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우선 제공과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의 단설 및 3학급 이상 확대 필요하다고 응답됨.
- 사립 유치원 평가결과가 국가재정지원과 연계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되었고, 유치원 평가의 지속적 추진 및 결과 공개와 활용에 대해 전문가 및 학부모모두 찬성함. 유치원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컨설턴트 표준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의 체계화 또한 전문가의 98.2%가 찬성함.
- 조기발달지연 유아 지원단(가칭) 구성이 필요하며, 조기 발달 지연아의 욕구에 맞추어 개별 지도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요구됨.
- 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종합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였으며, 지역교육청별 지역 유아교육 지원센터 설치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역 유아교육 지원센터에서의 부모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동의하였고,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기능 강화,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격 인증제(가칭) 도입을 찬성함.
- 만 5세 누리과정 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87.7%가 취학직전 1년간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상승,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성 보장 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89.5%가 찬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항목에 전문가의 96.5%가 찬성함.

6. 유아교육 발전방향과 정책 과제

가. 유아교육 발전 방향

- 유아교육 기회 제공의 보편성과 균등성 확보

-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 확보
- 유아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 해소
- 유아교육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협력 지향

나. 유아교육 정책 과제

1)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유아학비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
-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 기존과정외의 방과후과정 및 추가 비용은 소득기준 차등 지원
 - 자녀교육비 부담을 가구소득의 5~10% 이내로 유지

2)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관리·지원강화

-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원아 분담율을 35%까지 확대
 - 유아교육 수요 신규발생 지역에 공립유치원 신설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 도입
 - 공공성 확보, 표준교육비 준수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의 30%까지 지원
-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 유치원 평가 지속 추진, 결과를 국가 재정 지원과 연계
 - 유치원 컨설팅 지원 강화

3)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유아교사 양성기간을 4년제로 제고
 - 교사가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 전담교사 및 행정인력 배치·지원
 -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공립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
 -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 누리과정 운영 인적·물적 요건 강화
 - 방과후과정의 기본 운영 지침 제시
 - 누리과정 담당 교사 심화 연수 실시
 - 운영시간 및 학급구성 형태별 누리과정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관리·감독 및 컨설팅장학 지원 강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 적용 누리과정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4)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조기 교육격차 해소
 - 유아기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및 '조기 발달지연유아 지원단(가칭)' 구성·운영
 - 발달지연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지속 추진
-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계층가정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유치원의 취약계층가정 유아 대상 종합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5)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 정부의 전달체계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의 조직과 인력 확대
-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확대
- 유아정책연구소의 국책연구기관 역할 강화
 -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 유·보 전문가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 유치원에서는 가정과 연계,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 실시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가 부모 함께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유아교육 기부체제 구축 및 기부사업 활성화
-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 대중매체 통한 올바른 유아교육 대국민 홍보
 - EBS 교육방송의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 기능 강화
 -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자격인증제(가칭) 도입

6)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 취학전 교육·보육의 체계화
 - 0-5세 연계 과정내에서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체계화
- 누리과정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 누리과정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합동 질관리 강화
 - 관련 부처 합동으로 '누리과정 추진 TF' 구성·운영

다. 재정 소요 추정(안)

- 향후 신규 추가 정책 과제의 재정 소요 예산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 업 명	총소요액(억원)
1)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29,925
2) 국·공립 유치원 확충	5,550
3)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지원	4,080
4)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 담당 전문 인력	170
▪ 자료 지원비	700
계	40,425

라. 정책 제언

- 첫째, 신규 정책의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및 실시 과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함.
- 둘째, 현장 적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부처의 전달체계와 유아 교육 지원 기관들 간의 협력과 역할을 분담이 필요함.
- 셋째, 시·도간의 정책 실행 및 성과 면에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넷째,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함.
- 다섯째,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여섯째, 정부의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흡수·발전시켜야 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이후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연평균 18%이상 증가하였고, 만 5세 자녀를 둔 가구의 100% 무상교육 실시, 종일반 운영 유치원 확대(전체 유치원의 95%) 및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아학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도시지역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유치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여전히 증가하는 등의 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동안 학계, 공·사립유치원 교원,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하여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취학전 교육·보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취학 전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2013년 3월부터는 3, 4세 누리과정까지 확대·도입할 예정이다.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 대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조기에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아기부터 질 높은 국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차기 정부는 최근 이와 같은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의 현장 착근은 물론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즉, 향후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이며, 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사회 통합이나 지속가능 발전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국정 아젠다를 고려하고, 미래 사회 교육 패러다임 및 국외 유아교

육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유아교육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하고 바람직한 유아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2013~2017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첫째, 유아교육 일반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 주요 정책의 특성과 과제를 분석한다.

둘째,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 환경 변화를 전망해 보고, 외국의 유아교육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역별·기관유형별 유아교육기관 이용 차이,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미흡, 재정 투자 및 여건 차이, 설립유형별 교사 배정 및 근무 여건 차이, 사교육비 부담 및 소득계층별 차이, 유아교육 지원체계 미흡,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문제 측면에서 검토한다.

넷째, 유아교육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및 영역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를 개발한다.

다섯째, 1차 마련한 유아교육 정책 과제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여섯째, 정책 과제별 연차별 추진 목표 및 일정을 제시하고, 재정 소요액을 추정한다.

3. 연구 방법

가.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수집·분석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론적 배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기본 통계 및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일반 현황 자료
- 최근 유아교육 정책 자료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5세 누리과정, 3-5세 누리과정 정책 등
- 미래 사회 변화 전망과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
-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자료 분석
 -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 정책 동향
 - UNESCO의 유아교육 정책 동향
-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자료

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학계 교수, 교원, 전문직) 및 학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목적: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아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
- 대상: 유아교육 교수, 교원, 전문직, 학부모
- 시기: 2012년 9월

다.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팀이 1차적으로 마련한 유아교육 발전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원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주제: 유아교육 중장기 과제: 2013~2017
- 일시: 2012년 9월 20일(목), 14:30~17: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 참석자: 원내외 발표자, 토론자 및 관련 전문가 20여명

정책과제 적합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최종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다.

라. 의견조사 실시

정책토론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중

요도 및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목적: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적합성 검토
- 기간: 2012년 10월 중
- 대상: 교육 현장 전문가(원장, 원감)와 학계 전문가(교수, 강사) 57명, 유치원 학부모 86명
- 방법: 전문가 및 학부모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마. 재정 소요 추정

유아교육 발전 정책 과제 중 기존의 재정 소요액외에 추가로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소요 예산액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II. 유아교육 현황

제2장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재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1절은 유아교육의 일반 통계 현황, 제2절은 유아교육 정책사업 및 관련 예산, 제3절은 유아교육에서의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절은 앞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과 더불어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1. 유아교육 일반 현황

가. 유치원 현황

제일 먼저 전국의 유치원 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에 따라서 유치원수를 설립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 <표 II-1-1>과 같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은 총 8,424개이며, 이 중 국·공립유치원은 4,502개, 사립유치원은 3,922개로 국·공립유치원이 유치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의 경우 병설은 4,353개인 반면 단설은 146개로 병설이 공립 전체 중 9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의 경우 법인은 455개, 개인은 3,450개, 군부대는 17개로 개인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16개 시·도 중 경기도 내에 가장 많은 유치원(1,986개)이 있으며, 다음이 서울(857개), 경북(696개), 경남(688개)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109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공·사립 유치원 개원 수를 비교한 결과, 시 지역에서는 공립유치원 수가 사립보다 많았으며, 도 지역에서는 반대로 사립유치원의 수가 공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지역 및 설립별 유치원 수(2011)

단위: 개원

	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단설	병설	소계	법인		민간
							학교 법인	기타 법인	
계	8,424	3	4,499	146	4,353	3,922	75	380	3,467
대도시	2,467	0	637	37	600	1,830	50	149	1,631
중소도시	2,940	1	1,354	66	1,288	1,585	18	144	1,423
읍면지역	2,624	2	2,123	41	2,082	499	7	84	408
도서벽지	393	0	385	2	383	8	0	3	5
서울	857	0	140	11	129	717	21	70	626
부산	365	0	58	7	51	307	10	29	268
대구	322	0	115	1	114	207	8	19	180
인천	381	0	132	6	126	249	1	10	238
광주	258	0	115	6	109	143	5	11	127
대전	239	0	87	4	83	152	5	9	138
울산	185	0	78	4	74	107	0	6	101
경기	1,986	0	1,026	26	1,000	960	5	60	895
강원	393	1	294	9	285	98	1	20	77
충북	344	1	258	11	247	85	0	19	66
충남	532	1	396	13	383	135	3	21	111
전북	516	0	361	12	349	155	1	18	136
전남	553	0	444	12	432	109	3	18	88
경북	696	0	476	9	467	220	8	46	166
경남	688	0	433	15	418	255	1	13	241
제주	109	0	86	0	86	23	3	11	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나. 연령별 유치원 원아 현황

다음으로 연령별 유치원 원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1년을 기점으로, 유치원에 취원 중인 유아수를 연령 및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전체 564,834명의 유아가 유치원에 취원하였으며, 만 3세는 133,986명, 만 4세는 196,602명, 만 5세 이상은 234,246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원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원아 수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230,802명)와 중소도시(242,023명)의 전체 취원아 수가 높았으며 이에 비하여 읍면지역(87,237명)과 도서벽지(4,772명)의 취원아 수는 적었다.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150,966명)의 취원아 수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81,237명), 경남

(45,297명), 부산(38,310명)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역에서 만 5세 이상의 유치원 취원아 수가 만 3, 4세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1-2〉 연령 및 지역별 유치원 원아 수(2011)

단위: 명

	계	3세	4세	5세 이상
계	564,834	133,986	196,602	234,246
대도시	230,802	54,778	82,002	94,022
중소도시	242,023	57,020	83,338	101,665
읍면지역	87,237	20,897	29,707	36,633
도서벽지	4,772	1,291	1,555	1,926
서울	81,237	20,759	28,722	31,756
부산	38,310	9,694	13,833	14,783
대구	28,669	4,632	10,300	13,737
인천	34,592	8,202	12,099	14,291
광주	18,549	5,067	6,322	7,160
대전	20,874	4,599	7,435	8,840
울산	16,225	3,330	5,962	6,933
경기	150,966	35,053	52,047	63,866
강원	14,226	3,309	4,594	6,323
충북	15,317	3,797	5,233	6,287
충남	24,095	5,841	8,390	9,864
전북	21,057	6,304	6,987	7,766
전남	17,854	5,073	5,948	6,833
경북	32,719	7,168	11,616	13,935
경남	45,297	10,665	15,913	18,719
제주	4,847	493	1,201	3,153

주: 취원대상 아동수는 각 지역 만3세~5세인구수임.

취원율 = 취원아수/취원대상 아동수 x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DB.

다. 연령별 유치원 교사 현황

유치원 및 원아 수에 이어서, 유치원 교사 수를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II-1-3>과 같다. 2011년을 기준으로 유치원 교사는 총 38,662명이며, 국립유치원에 18명(0.05%), 공립유치원에 9,221명(23.85%), 사립유치원에 29,423명(76.1%)의 교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설립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립유치원 교사(76.1%)가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약 3배가량 교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설립별 유치원 교사 수(2011)

단위: 명(%)

계	국립	공립	사립
38,662	18	9,221	29,423
(100.0)	(0.05)	(23.85)	(76.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DB.

자격별로 유치원 교사 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1-4>로, 원장은 총 3,834명, 원감은 1,235명이며, 1급 정교사는 10,552명, 2급 정교사는 22,702명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원장은 총 198명으로 사립 3,636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이나, 원감은 원장에 비해 적은 차이를 보였다. 1급 정교사 수를 비교한 결과 국·공립(6,431명)이 사립(4,212명)에 비해서 많았으나, 2급 정교사의 경우 공립은 1,851명, 사립은 20,851명으로 사립유치원에 2급 정교사가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4〉 자격별 유치원 교사 수(2011)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원감	1급	2급	준교사	보건교사	기타
				정교사	정교사			
계	38,662	3,834	1,235	10,552	22,702	24	3	40
국립	18	1	2	12	0	0	0	0
공립	9,221	197	465	6,419	1,851	2	1	25
사립	29,423	3,636	768	4,121	20,851	22	2	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DB.

라. 유아학비 지원 현황

유치원, 원아, 교사 수에 대한 일반적 분석에 이어, 2012년도부터 시행된 만 5세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도별 지원총액, 지원아 수, 지원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는 <표 II-1-5>와 같다.

만 5세 유아학비 지원아 수에 따라 시·도별 총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지원아 수를 먼저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29,472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17,149명), 서울(12,474명), 강원(11,8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치원 취원아 수가 서울이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표 II-1-2 참조),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아수는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5세 유아들 중 유아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영어학원이나 유사 유아학원에 등록하는 것

으로 추측될 수 있다. 만 5세 유아학비 지원을 평균은 53%로, 부산이 65.2%로 16개 시·도 중 제일 높은 지역이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61.6%), 경북(61.3%), 광주와 경남(60.1%)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 시·도별 5세 무상교육비 지원율(2011)

단위: 백만원, 명, %

	5세 무상교육비 지원액			지원아 수			5세 취원 유아수	5세 무상교육비 지원율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전체	217,587	16,488	201,099	150,476	40,344	110,100	233,724	53.0
서울	22,916	1,018	21,898	12,474	1,652	10,822	31,722	39.3
부산	22,587	568	22,019	9,611	727	8,884	14,740	65.2
대구	16,959	787	16,172	10,432	2,584	7,848	13,708	76.1
인천	15,280	1,287	13,993	8,776	2,081	6,663	14,237	61.6
광주	7,664	523	7,141	4,295	926	3,369	7,151	60.1
대전	9,716	491	9,225	5,092	737	4,355	8,822	57.7
울산	6,107	230	5,877	8,392	1,355	7,037	6,925	49.7
경기 ¹⁾	53,239	5,386	47,853	29,472	8,381	21,091	63,745	46.2
강원	4,734	871	3,863	11,832	5,283	6,549	6,312	41.2
충북	4,674	719	3,955	3,493	1,593	1,900	6,276	55.7
충남	6,652	399	6,253	17,149	5,814	11,335	9,845	47.8
전북	6,101	248	5,853	4,097	854	3,243	7,749	52.9
전남	5,348	1,031	4,317	3,908	1,891	2,017	6,808	57.4
경북	14,009	1,245	12,764	8,418	2,279	6,139	13,882	61.3
경남	19,271	1,367	17,904	11,211	3,319	7,892	18,659	60.1
제주	2,330	318	2,012	1,824	868	956	3,143	58.0

주: 1) 경기의 경우, 종일반비 지원액 포함됨(무상교육비와 중복되는 지원이 있음).

2) 5세 무상교육비 지원율 = (5세 무상교육비 지원아 수 / 총 5세 취원아 수) x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5세 무상교육비 지원액 및 지원아 수)

시·도별 만 3, 4세 차등교육비 지원액, 지원아수, 지원율을 살펴보면 <표 II-1-6>과 같다. 지원아수에 따라 시·도별 총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지원아수를 먼저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 충남이 4,26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3,918명), 경남(2,554명), 전남(2,1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 3, 4세 차등교육비 지원율 평균은 51.3%로 만 5세 53%와 비슷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78.4%)의 차등교육비 지원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71.3%), 부산(68.3%), 대전(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시·도별 차등교육비 지원율(2010)

단위: 백만원, 명, %

	3·4세 차등교육비 지원액			지원아 수			3·4세 취원 유아수	차등교육비 지원율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전체	11,145	368,637	379,782	27,114	189,325	218,250	330,588	51.3
서울	679	39,724	40,403	1,229	21,050	22,279	49,481	45.0
부산	440	31,197	31,637	708	15,363	16,071	23,527	68.3
대구	290	22,286	22,576	1,925	6,110	8,035	14,932	53.8
인천	668	26,674	27,342	1,084	13,024	15,919	20,301	78.4
광주	368	14,576	14,944	668	6,700	7,368	11,389	64.7
대전	338	15,708	16,046	497	7,323	7,820	12,034	65.0
울산	154	10,376	10,530	894	10,743	11,637	9,292	56.5
경기 ¹⁾	2,839	102,974	105,813	1,910	20,647	22,557	87,100	25.9
강원	621	8,432	9,053	3,918	13,625	17,543	7,903	63.1
충북	948	8,031	8,979	1,909	3,705	5,614	9,030	62.2
충남	393	13,097	13,490	4,261	21,595	25,856	14,231	53.2
전북	339	12,552	12,891	1,261	6,234	7,495	13,291	56.4
전남	1,168	9,427	10,595	2,186	4,258	6,444	11,021	58.5
경북	931	22,248	23,179	1,851	23,027	24,878	18,784	71.3
경남	909	29,750	30,659	2,554	15,194	17,748	26,578	66.8
제주	60	1,585	1,645	259	727	986	1,694	58.2

주: 1) 경기의 경우, 종일반비 지원액 포함됨(차등교육비와 중복되는 지원이 있음).

2) 차등교육비 지원율 =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아수/총 3,4세 취원아수) x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3,4세 차등교육비 지원액 및 지원아 수)

2. 유아교육 정책 사업 및 예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교직원 운용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2-1 참조). 각 유아교육 정책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나뉘며, 각 단위사업은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교육 정책 사업에 필요한 유아교육 예산 규모는 <표 II-2-2>와 같다. 2005년에는 유아교육 예산이 약 6,378억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1조 9,239억으로 연평균 18%이상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1〉 유아교육 정책 사업별 세부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직원운용 지원	공립	교원인건비	정규교직원인건비, 기타정규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 인건비	기간제(시간제)교사인건비, 기타비정규직원인건비
	사립	교원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단기대체교사지원, 교육역량제고사업
교육활동 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교구교재구입비, 교육용로봇지원(R-Learning), 세대간지혜 나눔사업(종일제교육과정지원), 기타교육과정개발운영비
	학력신장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희망유아교육사), 기타학력신장사업비
	교원역량강화		교원평가운영비, 기타교원역량강화사업비
	수업지원 장학활동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운영비, 유치원종합컨설팅단운영비,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평가사업비, 기타수업지원 장학활동비
유아교육비 지원	학비지원		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 만3·4세아차등교육비지원, 두자녀 이상교육비지원, 저소득층유아종일반비지원, 부대경비(카드수수료, 금융조회통보비),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비
	급식지원		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사업비
	유아교육진흥		종일제보조인력(3세대하모니)지원, 종일제유치원운영비지원, 야간돌봄전담유치원운영비,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운영비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사업비, 기타사립유치원재정지원사업비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신설비, 적정규모공립유치원육성(통합병설), 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공립병설유치원환경개선비, 종일제유치원환경개선비, 공립단설유치원급식시설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시설비

출처: 김은설 외(2010). 2010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2〉 유아교육·보육 예산(2005~2012)

단위: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추정)
유아교육	637,795	824,220	947,754	1,012,089	1,235,852	1,529,272	1,923,903	2,804,103
보육	1,327,300	1,723,600	2,286,100	2,997,800	3,588,600	4,289,000	5,018,600	6,130,452
계	1,965,095	2,547,820	3,233,854	4,009,889	4,824,452	5,818,272	6,942,503	8,934,555

주: 보육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방정부의 별도 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2012년 유아교육예산은 2011년 예산에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추가소요액을 합한 최소액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9-2010 유아교육연차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각 년도.

유아교육·보육 총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총 6조 9,425억원이며, 2012년도 추정예산은 8조 9345억원으로,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0.79% 수준이다. 2011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1조 9920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다음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2012년도부터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이 되므로 이에 약 8,800억원 이상의 예산증액, 둘째, 만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약 1조 1,000억원 이상 증액으로 추정된다. 2012년도 추정 예산은 8조 9,345억원으로, 보육의 지방정부의 특색(특수시책)사업비(약 5,66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9조 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는 GDP 대비 0.85%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2013년도 유아교육·보육 총 예산을 추정하면 총 10조 5,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 대비 0.94% 수준이다. 2013년부터 유아교육에서는 만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2년 대비 1조 2,000억원이 증가하며, 보육은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소요액 순증가액은 4,00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2년에 비해(현재 8,000억원) 보육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 6,500억원 추가 소요도 예상된다.

OECD 취학전 유아교육·보육 투자 금액의 평균은 GDP 대비 0.5%이며, 1%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3년도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GDP 대비 0.94%로 추정되므로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넘었으나, 권장선인 1%를 향해서는 조금 모자란 수치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보육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사업으로의 예산확대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의 정책 사업별 지원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2-3 참조). 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인 '교직원운용지원' 정책 사업이 전체 예산의 4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학비, 급식비 및 종일제 지원비 지원인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사업이 총 예산의 41.3%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는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사업'이 13.9%, 장학이나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활동 지원'이 2.4%이었다. 즉 대부분의 유아교육 예산이 '교직원 인건비'와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3> 2011년 유아교육 예산

단위: 백만원

지역	교직원 운용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계
총합계	815,144	46,987	795,008	266,764	1,923,903
비율	42.4%	2.4%	41.3%	13.9%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학년도 유아교육예산. 내부자료.
출처: 김은영 외(2011). 2011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다음으로 유아교육 사업의 예산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수행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인 사업 수행 및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

즉, 유아교육 예산 재원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어지고 100%에 가까운 예산이 모두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도세 전입금,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추가적으로 시·도세 전입금과, 담배소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전입금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일반전입금이 포함된다.

유아교육 정책 사업 중 유아교육비 지원, 그 중 가장 중요한 단위사업인 ‘유아학비지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학비지원’의 경우 ‘바우처’ 방식을 통해 해당 유아의 몫으로 직접 유치원에 지급되고, 정부는 대상과 지원금액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학부모의 실질적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지원 단가를 해마다 인상하고 있으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 II-2-4>는 2010년 유아학비 지원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로, 유아학비 지원 총액은 526,456백만원이고, 이는 2009년 452,402백만원에 비해 74,054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유아학비 지원은 만 5세아, 만 3, 4세아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종일반 지원 또한 12.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6.2%)를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2-4〉 유아학비 지원 집행액(2010년 결산)

단위: 백만원, %						
지역	만5세아	만3·4세아	두자녀 이상	종일반비	기타	계
계	212,301	208,462	32,726	66,527	6,440	526,456
비율	40.3	39.6	6.2	12.6	1.2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출처: 김은영 외(2011). 2011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다음은 유아학비 지원율에 대해서 앞 절(표 II-1-5, II-1-6)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율에 앞선 2010년 기준 전체 취원아 수는 다음과 같다(표 II-2-5 참조). 총 538,587명이 취원하였으며, 이 중 만 3세는 111,482명, 만 4세는 181,441명(만 3-4세 292,923명), 만 5세 유아는 245,664명이다.

〈표 II-2-5〉 연령별 유치원 취원아 수(2010)

단위: 명, %			
연령	전체(A)	취원아 수(B)	취원율(B/A)
만3세아	493,452	111,482	22.6
만4세아	448,200	181,441	40.5
만5세아	435,281	245,664	56.4
계	1,376,933	538,587	39.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유치원 현황(2010년 4월 기준).

2010년 전체 유아학비 수혜자는 95.7%이지만, 종일반비 지원을 제외하면 65.6%가 되며, 만 5세의 경우 전체 취원아 중 57.1%(140,254명)에 해당되는 유아가 지원받았으며, 만 3, 4세의 경우 72.8%(213,324명)에 해당하는 유아들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6 참조).

〈표 II-2-6〉 유아학비 지원율(2009, 2010)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
	만3세	만4세	만5세	계	만3,4세	만5세	계	
취원아수	100,406	185,195	251,760	537,361	292,923	245,664	538,587	△1,226
지원아수	56,604	96,901	134,216	287,721	213,324	140,254	353,578	△65,857
지원비율	56.4	52.3	53.3	53.5	72.8	57.1	65.6	△12.1

자료: 2010년 유아학비 지원현황. 교과부 내부 자료.

출처: 김은영 외(2011). 2011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율은 2009년 53.5%에서 2010년 65.6%로, 전년도 대비 12.1%나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09년 하반기부터 학비 지원 대상을 소득 50%에서 7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둘째아 지원을 첫째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맞벌이 소득산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201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표 II-2-7>과 같으며, 유아학비 지원 총금액은 총 6,395억원이다. 이 금액은 2010년 대비 1,242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지원단가 3% 수준 인상과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 유아 지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2011년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만 3, 4세아 지원이 3,0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는 전체 금액의 47.4%정도이며, 그 다음은 만 5세아(33.8%), 종일반 순(16.3%)으로 높다.

<표 II-2-7> 대상별 유아학비 지원 단가 및 지원 총액(2011)

단위: 원, %

대상	소득수준	지원율	연령	월 지원단가		지원총액 (추정)	지원총액 비율
				국공립	사립		
만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100%	5세	59,000	177,000	2,158억	33.8%
만3·4세아	소득하위 70%이하	100%	만3세	59,000	197,000	3,031억	47.4%
			만4세	59,000	177,000		
다문화·난민	전체	100%	만3세	59,000	197,000	163억	2.5%
			만4,5세	59,000	177,000		
종일반	소득하위 70%이하	100%	만3-5세	30,000	50,000	1,043억	16.3%
계						6,395억	100.0%

자료: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출처: 김은영 외(2011). 2011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3. 유아교육 주요 정책

가. 유아교육 변천사

우리나라 유아교육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역사를 통하여 정책의 흐름 및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표 II-3-1>과 같다.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1922년 ‘조선교육령’ 제정을 통해 최초로 유치원에 관한 법적 규정이 탄생되었다.

1949년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이 학교로 정의 내려졌으며, 1982년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으로 인하여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규정되었다. 1997년에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이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제정되었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다. 그 후 1998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이 포함되었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초·중등교육법'의 유아교육 관련 내용이 '유아교육법'에 이관되었다.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II-3-1〉 유아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역사(1922~2012)

법률명(정책명)	제개정(발표일)	주요내용
조선교육령	1922	○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규정 - 1910년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 설립 * 경성유치원(1913),이화유치원(1914),중앙유치원(1916) 등
교육법	1949.12.31 제정	○ 유치원을 학교로 정의
유아교육진흥법	1982.12.31 제정	○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초·중등교육법	1997.12.13. 제정	○ 교육법 폐지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제정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 명시
유아교육진흥법	1998. 9.17 개정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 포함
유아교육법	2004. 1.29 제정	○ 유아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의 유아교육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기본법 마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 명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3. 20)

그 후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5대 분야, 25개 유아교육 선진화 과제가 추진되었고, 그 후 2년 뒤인 2011년에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 발표로 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고, 공통과정이 적용되었다.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2년 1월에 '3-4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계획이 발표되어,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이 만 3-4세 유아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2012년 2월 27일 ‘유아교육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법 개정은 2009년 말에 발표되었던 유아교육 선진화 과정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13년부터 만 3, 4세 유아에게 확대될 누리과정의 법적 뒷받침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새로 법제화되었다(표 II-3-2 참조).

〈표 II-3-2〉 2012년 이후의 유아교육법 개정 현황

조문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과정이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로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과정을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정립하여 기본 교육과정 내실화 	'12.3.21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흥원의 역할이 교재개발 및 유치원교원연수 등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12.3.21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수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도록 개선 	'12.9.22
제17조의 2, 제34조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 수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생활기록 및 건강 검진에 관한 자료 제공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 부과 	'12.3.21
제19조의2 (유아교육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유아교육정보에 대한 전산화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교육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 	'13.3.1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참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유치원 구성원의 참여 확대 	'12.9.1
제19조의7, 제19조의8 (유치원회계의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유치원회계 설치 법적 근거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유치원회계 관리 도모 	'13.3.1

(표 II-3-2 계속)

조문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제24조 (무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교육 대상을 취학 직전 3년으로 확대하고, 무상교육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과부장관이 고시 	'13.3.1
제28조, 제34조 (보조금의 반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교육비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교육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3.3.1
제28조의 2, 제32조, 제35조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대상 학원 등 유치원 외의 시설에서 유치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재 수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12.9.22

2013년부터 유아무상교육,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 비용을 고시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학부모가 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유치원 회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되었으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더불어 '유치원'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폐쇄 및 과태료 부과 제도가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징역, 벌금을 내리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가 용이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반일제, 시간연장 등의 종일제 개념이 '방과 후 과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방과 후 과정에서 하는 특성화 활동을 기본 과정에서 운영할 시 행정지도 및 처분이 가능해졌다.

'유아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교육공무원법' 역시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의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은 <표 II-3-3>과 같다.

〈표 II-3-3〉 교육공무원법 개정 현황

조문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제29조의 2 (교장 등의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유치원 원장은 교육감이 임용 ▪ 국·공립유치원 원장 임기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유치원 원장도 교장과 같이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유치원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여 원장의 책무성 강화 	'13.3.1
제29조의 3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에 의한 원장 임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유치원 원장 공모제를 도입하여 유능한 인재의 원장 임용 기회 확대 ▪ 공모원장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인사자료로 활용 	'13.3.1

이처럼 국·공립유치원장 임기제가 도입되고, 공모제 병행 추진, 원로교사제 도입활용, 공모 원장 평가제가 마련되었다. 초등학교 교장과 동일한 4년 임기 보장, 퇴직전 임기 만료시 원로교사로서의 활동 보장, 원장자격을 소지한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종전의 초빙형 교장 공모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상에서 유아교육 변천사와 유아교육 정책 동향에 대하여 개괄한 데 이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5세 누리과정 정책, 3·4세 누리과정 정책과 최근 법개정을 완료한 주요 정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라는 비전하에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12. 8).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학계,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선진화 TF를 구성·운영(09.7~10)하여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0년 1월에 국책연구기관인 유아정책연구소에 ‘유아교육선진화 사업지원단’을 설치하였고, 2012년 현재까지

관련 정책 연구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초기의 선진화 추진 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및 핵심 과제는 <표 II-3-4>와 같다.

<표 II-3-4>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정책 분야 및 핵심 과제

정책 분야	핵심 과제
I. 유아학비 부담경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②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③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④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⑤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II.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②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④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
III.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③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④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 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IV. 우수 교원 배치·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 ③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④ 우수 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⑤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V.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③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 ④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우리나라는 그 동안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이었다.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유아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선진화 작업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동안 재정투명

성 등이 문제가 되어 왔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과 책무성·투명성을 강력하게 연계함으로써 학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립유치원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도록 한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공립과 사립간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2011년 12월~2012년 3월)을 계기로 과제별 추진 내용 및 향후 집행계획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2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인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실적 점검결과」를 발간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과제 등 일부과제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기타 3개 과제는 분리 및 통·폐합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실적 점검결과」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의 ②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과제는 ② -1.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② -2.유치원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나뉘어졌으며, II의 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 과제는 ⑤ -1. 5년 단위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⑤ -2.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과제로 나뉘어져서 총 과제 개수가 25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표 II-3-5 참조).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거나 법제화로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기대되는 과제(정상추진)는 27개 중 19개, 당초 계획 중 일부내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나 일부내용은 추진이 미흡한 과제(보통)는 6개, 법제화 미흡 및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과제(미흡)는 2개로 분석되었다.

〈표 II-3-5〉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현황

정책분야	핵심 과제	추진현황	비고
I. 유아 학비 부담 경감	①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정상추진	누리과정도입
	②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정상추진 (과제변경)	교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확대
	③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보통	정상추진 및 미흡
	④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미흡	법제화 미흡
	⑤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정상추진	법적근거 마련

(표 II-3-5 계속)

정책분야	핵심 과제	추진현황	비고
II. 선진 유아 교육 제도 구축	①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정상추진	법적근거 마련
	② -1.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보통	정책연구추진 중
	② -2. 유치원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수수료 일부지원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정상추진	법적근거 마련
	④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정상추진	2주기 평가진행
	⑤ -1. 5년 단위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정상추진	법적근거 마련
⑤ -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계속 발간 중		
III. 미래 지향적 교육 과정 운영	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정상추진	누리과정 도입
	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정상추진	연차적 운영 확대
	③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상추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④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	보통	활성화 필요
	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정상추진	계획대로 추진
IV. 우수 교원 배치·활용	①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보통	정상추진 및 검토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	정상추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③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정상추진	단계적 실시 중
	④ 우수 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정상추진	우수교사 선발·운영
	⑤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정상추진 (과제변경)	법적근거 마련
V. 유아 교육 지원 체계 강화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법적근거 마련
	②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정상추진 (과제변경)	법적근거 마련
	③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	미흡	법제화 미흡
	④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보통	기관 간 역할분담 미흡
	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정상추진	다양한 홍보 추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실(유아교육과) 내부자료,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실적 점검결과 (2012.4.2).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6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흡수·통합하여 발전될 예정이다(표 II-3-6 참조).

〈표 II-3-6〉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구분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분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분야(안)
주요 정책 분야	I. 유아학비 부담경감	I. 유아교육 기회 확대
	II.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II. 유치원 운영 효율화
	III.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III.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IV. 우수 교원 배치·활용	IV.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V.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V.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정부는 2011년 5월 2일에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¹⁾」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모든 만 5세 유아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보호자)에 대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5세 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2011년에는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5세 누리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뤘었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를 위한 공통과정이 도입되었다. 「5세 누리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된다. 이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

1) 정부는 전국민 대상으로 만 5세 공통과정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 ‘5세 누리과정’을 정책 명칭으로 정한 바 있음(2011년 7월 14일 보도자료).

이집의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게 된다. 2011년에는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 금액은 2012년 월 2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2013년에서 2014년까지는 매년 2만원씩 증액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3만원씩 증액하여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만 5세아 교육·보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며, 2011년까지 만 5세아의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 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방과 후 과정)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의 제도와 '만 5세 공통과정'을 비교하면 [그림 II-3-1]과 같다.

구분	2012년 이전	2012년 3월 만 5세 공통과정 시행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보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그림 II-3-1] 만 5세 공통과정과 기존 정책의 비교

이에 따라 정부는 만5세 지원 대상 100%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를 하고, 지원 대상은 '12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만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기존 만5세아 보육료 예산 약 2,000억 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5세 누리과정 추진을 위한 연도별 소요 예산(안)은 다음 <표 II-3-7>과 같다.

<표 II-3-7> 연도별 소요 예산(안)

단위 : 억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교육	교부금	2,482	2,586	5,392	5,482	5,611	6,509	6,647
	국 고	1,316	1,012	-	-	-	-	-
보육	지방비	1,375	1,036	-	-	-	-	-
	교부금	-	-	5,996	6,087	6,218	7,204	7,344
	소 계	2,691	2,048	5,996	6,087	6,218	7,204	7,344
교부금계		2,482	2,586	11,388	11,569	11,829	13,713	13,991
총 계		5,173	4,634	11,388	11,569	11,829	13,713	13,991

주: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년 35.3조원 → '12년 전망 38.4조원 내외)으로 소요예산 충당 가능

라.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

'유아교육 선진화' 및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2년 1월에 발표된 '3, 4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금년 1월 18일, 금년 3월부터 도입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있는 교과부의 '2012년 업무보고'와 2012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협력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3-4세 누리과정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 3-4세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5개 영역 중심의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협력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공통과정 적용, 지원 단가, 재원 부담, 기관 관리 체제는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다.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를 표로 정리하면 [그림 II-3-2]와 같다.

구분	현행	'13년 3월
기관	교육·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 교육과정)	만 5세 : 만 4세 : 만 3세 : 만 0-2세 5세 : 4세 : 3세 : 누리 : 누리 : 누리 : 과정 : 과정 : 과정 : -
유치원 (교과부)		
어린이집 (복지부)	표준보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2세/2세미만)	(교과부·복지부 공동) : 0-1세/2세 표준보육 과정 (복지부)

[그림 II-3-2]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

현재 만 3-4세 유아에 대하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비를 지원하여 육아 비용에 대한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것도 이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2013년부터 만 3-4세를 둔 가정의 보호자에게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2012년 현재 만 3-4세아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전 계층)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 2년간은 기존의 국·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을 정리하면 <표II-3-8>과 같다.

〈표 II-3-8〉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단위: 억원

재원 부담	'12	'13	'14	'15
▪ 국비 + 지방비 (‘12년 대비)	7,747	7,747 ¹⁾ (-)	4,510 ²⁾ (△3,237)	- (△7,74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년 대비)	4,964	16,781 (11,817)	22,930 (17,966)	30,836 (25,872)
합 계	12,711	24,528	27,440	30,836

주: 1) '12년 기준 3·4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2) '12년 기준 3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1. 18)

유아교육 주요 정책을 연도별로 요약하면 <표 II-3-9>와 같다. 우리나라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계획은 년도에 의해 총 3단계로 나뉘며,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주요 정책 중 만 5세 누리과정, 만 3, 4세 누리과정의 도입이 단계마다 하나씩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9〉 현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계획

구 분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1단계 (~11년)	▪ 지원 대상 지속 확대 * ('08) 차상위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 '09. 7월 양육수당 도입 ▪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 ('10) 24개월 미만, 10만원 → ('11) 36개월 미만, 10~20만원
2단계 ('12년)	▪ 5세 누리과정 및 0-2세 유아교육·보육 지원 확대	▪ 장애아동에 대해 취학전 (84개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3단계 ('13년)	▪ 3·4세 누리과정 도입	▪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소득하위 70%)

마.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2011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4월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와 같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공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 4월 20일에는 「교

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음(7항목 18범위)²⁾(표Ⅱ-3-10 참조).

〈표 Ⅱ-3-10〉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가. 유치원 규칙	전체	수시	수시
	나. 유치원 교지(校地)·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1회	2월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수·원아수	전체	연1회	10월
	나. 직위·자격별 교원현황	전체	연1회	10월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2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전체	연1회	2월
	다.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현황	전체	연1회	2월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일체)	전체	연2회	2월 8월
	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전체	각 연1회	5월(예산) 8월(결산)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처리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나. 원아 건강검진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다. 환경위생관리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전체	연1회	10월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전체	수시	수시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평가	전체	연1회	2월
	나. 사무직원 현황	전체	연1회	10월
	다. 통학차량 운영 현황	전체	연1회	10월

시행령에서 유치원 최초의 정보공시를 2012년 9월에 하는 것으로 정한 바, 2012년 9월 29일에 전국 8,376개 국·공·사립유치원이 5종의 정보를 입력 완료하였다. 5종의 정보는 정시 2종(유치원 규칙,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수시 3종(유

2) 이후 유치원 평가에서는 정보공시제와 동일한 자료는 생략 및 축소하여 유치원의 평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치원 회계 예산서, 유치원 원비 현황, 유치원 회계 결산서)이며, 각 유치원의 정보는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일반 국민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II-3-3]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 화면

2012년 10월 27일에는 10월 공시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연령별 학급수·원아수 등 9종의 정시 항목과 2종의 수시항목 수정사항 등 11종을 입력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이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와 유아교육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 4월 27일에 시행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과부장관이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 교과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치원 평가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교과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교과부는 2012년 7월부터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교과부 담당자 등으

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수립 TF'와 정책연구진을 구성하여 유아교육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 무상교육 확대, 운영위원회 도입 등

2012년 3월 21일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 선진화 과제 추진과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로 구분되던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에도 금년 9월부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국·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칙, 유치원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의 원장은 위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 등 유치원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가 설치되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금년 9월 22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청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인가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이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고, 무상교육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과부장관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아. 국·공립유치원장 임기·공모제 도입

2012년 3월 21일에는 「유아교육법」 외에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3월에 국·공립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와 공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장은 한번 원장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유치원장

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유치원장 공모제를 통해서도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유치원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치원 교원의 전문직 진입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국·공립 유치원 교원 인사 보직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유아교육 일반 현황과 주요 정책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은 총 8,424개이며, 이 중 국·공립유치원은 4,502개, 사립유치원은 3,922개로 국·공립유치원이 유치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병설유치원은 공립의 95.8%이며, 개인유치원은 사립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원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76.1%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만 5세 유아학비 지원율은 53%이며, 지원이는 경기지역이 29,472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17,149명), 서울(12,474명), 강원(11,832명) 순으로 많았다. 만 3, 4세 차등교육비 지원율 평균은 51.3%로, 인천(78.4%)의 차등교육비 지원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71.3%), 부산(68.3%), 대전(6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 2005년도 유아교육 예산은 약 6,378억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1조 9,239억으로 연평균 18%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아교육 사업은 크게 네 가지(교직원 운용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로 구분되며, 유아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교직원 인건비(42.4%)'와 '유아교육비 지원(41.3%)' 정책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나, 2013년도 유아교육·보육 총 예산은 GDP 대비 0.94%로 예상되며, 이는 OECD 권장 수준인 1%에 거의 도달하는 수준이므로 유아교육·보육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아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유아교

육 선진화가 발표되면서 5대 분야, 25개 유아교육 선진화 과제가 추진되었고, 그 후 2년 뒤인 2011년에 '5세 누리과정' 발표로 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고, 공통과정이 적용되었다. 그 후 1년 뒤인 2012년 초에 '3-4세 누리과정'이 발표되고,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만 3-4세 유아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기로 결정되었다.

2009년부터 착수하여 2012년까지 시행된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은 선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긴밀한 업무 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발표와 동시에 단기정책들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 '유아교육선진화사업지원단'이 구성·설치되어 주요 정책연구를 총괄 추진하며 선진화 정책을 지원해 왔다. 단,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미흡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거나 정책 추진 여건을 더욱 보강(정책 보완, 법제화, 재정 투자, 홍보 및 인식 제고 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 2013년부터는 매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 바, 선진화 정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이 5개년 계획에 흡수·통합되어 발전해나갈 전망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3, 4세 까지 누리과정에 확대됨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재정투자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또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지역별, 기관유형별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 취학전 교육 출발점 불평등, 학부모의 학비부담 등)이 많은 부분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현재의 지원 금액으로는 완전한 무상교육에 이르기 어려우며,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관리·감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Ⅲ. 미래 사회 변화 및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제3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1절은 미래 사회 및 교육 환경 변화, 제2절은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3절은 앞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미래 사회 및 교육 환경 변화

가. 미래 교육적 이슈 및 유아교육 고려사항

한국 유아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2020년에 예상되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 이슈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본 보고서의 연구자에 의해 '○'으로 표시됨)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 사회의 교육적 이슈는 크게 6개 분야로, 이는 인구변화·정치변화·경제변화·사회변화·과학기술변화·가치관변화 트렌드에 따른 교육적 이슈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1-1>에서 <표 III-1-6>까지와 같다.

먼저, 인구변화와 교육적 이슈를 살펴보면 저출산이 2020년에도 지속되므로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노동력이 감소되고 또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므로 창의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강화'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과제와 '교육 인프라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II-1-1〉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인구변화 관련)

구분	2010	2020	교육적 이슈	유아교육 고려사항
인구 변화와 교육적 이슈	저출산	저출산 지속	• 유아교육의 질	○
	인구감소	인구감소 문제 심화 - 노동력 감소 - 잠재성장률 하락 - 사회적 지출 증가	• 국가 인재 개발 전략	○
			• 인구의 질 강화	
			• 대학 경쟁력 강화	
			• 노동력의 질 강화	
	고령화	고령화 심화	• 고급 두뇌 유치	
			• 베이비부머 활용 대책	
학생수 감소	학생수 감소 심각	• 평생교육		
		• 노인교육		
		• 교육여건 개선	○	
		• 교육인프라 수급 불균형	○	
		• 대학 구조조정		

주: 일부 내용을 발췌한 후, 유아교육에서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한 표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다음으로 정치변화에 따른 미래 한국의 교육적 이슈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글로벌화가 심화되므로 이에 따라 유아교육도 '국제이해교육'과 '국제적 균형감각'을 고려하여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함을 알 수 있다(표 III-1-2 참조). 교사 양성 및 연수교육부터 교사가 국제적 감각을 끊임없이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함과 더불어 유아의 교육과정에서도 국제관계와 글로벌 현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게다가 다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개방성과 포용력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적 측면에서 '통일준비·사회통합·평화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정치변화 관련)

구분	2010	2020	교육적 이슈	유아교육 고려사항
정치변화 트렌드와 교육적 이슈	국제관계와 글로벌화	글로벌화 심화	• 국제이해교육	○
			• 국제적 균형 감각	
			• Global Citizenship	○
			• 교육분야 국제교류협력 확대	
			• 교육시장 개방	

(표 III-1-2 계속)

구분	2010	2020	교육적 이슈	유아교육 고려사항
정치변화 트렌드와 교육적 이슈	아시아의 부상 (중국, 인도)	미국, 선진국 영향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전문가 양성 (선진국 편중 극복) • 고급 인재 유치 	
	다문화 사회	다문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교육 • 사회적 자본 축적 (개방성, 포용성) 	○
	북한의 변화	-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추진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완만한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준비 교육 • 통일 역량 교육 • 사회통합 교육 • 평화교육 	○

주: 일부 내용을 발췌한 후, 유아교육에서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한 표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이어서 경제변화에 따른 미래 한국의 교육적 이슈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도 ‘글로벌 창의 인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한국 역시 GDP 3~4만 달러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므로 ‘직업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표 III-1-3 참조). 즉 미래에는 지금의 직업 다양성을 뛰어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기에, 유아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줄 필요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III-1-3〉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경제변화 관련)

구분	2010	2020	교육적 이슈	유아교육 고려사항
경제변화 트렌드와 교육적 이슈	글로벌 경제시대	글로벌 경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창의인재 • 국제전문가 양성 	○
	GDP 2만 달러	GDP 3~4만 달러 (선진국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다양화 • 직업 진로 교육 	○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 중심	- 신 서비스 산업 (IT+서비스 산업) - 신 제조업(IT+제조업) - 융복합 산업 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 인재 • 서비스 인재 • 소프트 파워 	
	잠재성장률 안정적	잠재성장률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의 질 • 고등 인적자원의 개발 	

주: 일부 내용을 발췌한 후, 유아교육에서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한 표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다음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한국의 교육적 이슈를 살펴보면(표 III-1-4 참조), 2020년에는 새로운 사회 위험요소(New Social Risk)가 작용하면서, 유아교육에서는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육 불평등 및 형평성' 및 '공생발전'에서의 교육적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양적으로 성장하던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개발'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의 질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기에 '사회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갈등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및 '신뢰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 교육'의 내용이 유아교육 미래 정책에도 반영 되어야 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표 III-1-4〉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사회변화 관련)

구분	2010	2020	교육적 이슈	유아교육 고려사항
사회변화 트렌드와 교육적 이슈	Social Risk	New Social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복지 • 교육 정의 	○
	양극화	양극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양극화 해소 • 교육 불평등 및 형평성 • 공생발전 	○
	양적 성장사회	질적 성숙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개발 	○
교육적 이슈	낮은 Social Quality	Social Quality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질을 높이는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시민의식 교육 	

주: 일부 내용을 발췌한 후, 유아교육에서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한 표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이어서 과학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한국의 교육적 이슈를 살펴보면(표 III-1-5 참조), 2020년에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유아교육에서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E-learning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점차 스마트·네트워크 사회가 강화되기 때문에 '스마트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또한 점차적으로 부드러운 힘(soft power)과 지

식의 힘(knowledge power)이 이끄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이런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반드시 고려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5〉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과학기술변화 관련)

구분	2010	2020	교육적 이슈	유아교육 고려사항
과학 기술변화 트렌드와	web 2.0	web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4.0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학습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지성과 학습생태계 e-learning 활성화 	○
교육적 이슈	스마트, 네트워크 사회 시작	스마트, 네트워크 사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교육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교육 	○
	hard power	soft power, knowledge 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인재 지식 엘리트 	○

주: 일부 내용을 발췌한 후, 유아교육에서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한 표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한국의 교육적 이슈를 살펴보면(표 III-1-6 참조), 2020년에는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동시에 탈 권위주의와 다원주의가 심화될 것이므로, 유아교육에서도 ‘가치관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표 III-1-6〉 2020년 한국 유아교육의 이슈(가치관변화 관련)

구분	2010	2020	교육적 이슈	유아교육 고려사항
가치관 변화 트렌드와	전통적 가치관 약화	- 개인주의 심화 - 탈 권위주의 심화 - 다원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관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 	○
교육적 이슈	물질주의	탈 물질주의 (행복, 정의와 공정성,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시민의식 교육 	

주: 일부 내용을 발췌한 후, 유아교육에서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한 표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나.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020년 미래 한국의 교육적 이슈 전망 분석에 이어서, 현행 교육체제(산업사회)에서 미래 교육체제(지식기반사회)의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성격, 교육 영역·대상·장소·기관·목표·내용·방법·수단·운영·구조·행정에 따라 예측한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현행 교육체제(산업사회)	미래 교육체제(지식기반사회)
성격	폐쇄적 교육체제	개방적 교육체제
교육 영역	학교교육 중심	평생교육 중심
교육 대상	학생(청소년) 위주	전 인구(생애주기)
교육 장소	학교 중심	학교·가정·직장·사회 등
교육 기관	학교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교육 목표	지식의 전수	지식의 전수, 창출 및 활용
교육 내용	전통적 지식, 교과 중심	다원적·확산적 교육내용
교육 방법	획일적 집단수업 중심	개별화 수업, 사이버 수업
교육 수단	off-line	off-line, on-line
교육 운영	교육자 중심	학습자 요구 중시
교육 구조	학교조직	다원적 네트워크
교육 행정	중앙집권화, 획일적 통제	지방분권화, 다양한 자율화

자료: 김영철 외(2006b; 한지원 외, 2008 재인용)

미래교육을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 실천전략을 연구한 한지원 등(2008)에 따르면 미래사회는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지식기반사회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육의 변화, 교육인구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교육에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가 병행하여 전개됨에 따라 종전까지 선진국의 위치를 누려왔던 국가들이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하거나 큰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지식과 정보가 국경의 벽 없이 무제한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통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지원 등(2008)은 기존의 지식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으며, 이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공유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과 지식 활동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사람'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학자 토플러의 전망과 같이 힘의 원천이 지식이 됨에 따라 지식이 개인이나 국가의 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 또한 지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지식사회에 필요한 활동에 적극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기능도 단순한 지식전수에 그치지 않고 지식의 창출과 활용 기능까지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의 재구조화와 교육방법의 쇄신 등을 포함한 교육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 또한 지식사회의 인재양성이 시작되는 첫 교육과정이니만큼 유아교육의 내용, 교육체계, 교육의 목표 등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국가교육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 진미석(2008)에 따르면, 지구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출현, 지식기반형 성장 전략의 중요성 부각,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출산·고령화·다문화 사회 변화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는 교육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적자원 양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확보하고 초기인적자원양성에서부터 전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유아기 교육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새 정부의 국가비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다시금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진미석(2008)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국민들은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과학기술발전이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며,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개발 및 인재개발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재강국·창의인재·선진과학을 통하여 녹색성장국가를 이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창의와 선진, 자율과 다양, 신뢰와 통합을 비전으로 선정되어 계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 취학 전 유아 수 미래 전망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이슈 및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에 이어서 한국 유아교육의 일반적 현황(만 3-5세 유아 수, 교원 수, 유치원 수)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434천명이었으나, 2030년 348천명, 2050년에는 226천명으로 예측된다. 이는 2005년 438천명의 절반 수준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시·도별 유소년 인구(0-14세)의 구성비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통계청, 2007). 유아교육의 대상 연령인 만 3-5세 유아 수의 예측 추계 분석 결과는 <표 III-1-8>과 같다. 2020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만 3-5세 유아 수는 1,376,933명에서 1,221,885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결국 2010년과는 달리 2020년에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유아 수가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8> 만 3-5세 유아 수 예측 추계(2010~2020)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376,933	1,408,983	1,407,158	1,384,292	1,363,891	1,354,025	1,309,805	1,287,859	1,265,354	1,243,060	1,221,885
3세	493,452	466,308	445,731	470,671	445,919	439,003	431,477	423,860	416,379	409,066	402,571
4세	448,200	494,091	466,912	446,309	471,281	443,337	436,463	428,982	421,412	413,975	406,706
5세	435,281	448,583	494,514	467,312	446,691	471,684	441,865	435,016	427,562	420,019	412,608

유아 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앞으로 약 10년 후 유치원 원아 수, 교원 수 및 유치원 수를 예측해 본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유치원의 만 3-5세 원아 수는 2011년 521,911명에서 2021년 456,935명으로 2011년 대비 12.45%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교원 수 역시 2011년 34,397명에서 2021년 30,114명으로 감소하고, 유치원 수도 8,132개원에서 2021년 7,120개원으로 12.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9> 유치원 원아, 교사 및 유치원 수 미래 추계(2011~2021)

단위: 천명,%

연도	원아 수		교원 수		유치원 수	
	원아 수	증감률	교원 수	증감률	유치원 수	증감률
2011	521,911	-	34,397	-	8,132	-
2012	521,989	0.01	34,402	0.01	8,133	0.01
2013	517,766	-0.79	34,124	-0.79	8,068	-0.79
2014	512,095	-1.88	33,750	-1.88	7,979	-1.88
2015	505,258	-3.19	33,299	-3.19	7,873	-3.19

(표 III-1-9 계속)

연도	원아 수		교원 수		유치원 수	
	원아 수	증감률	교원 수	증감률	유치원 수	증감률
2016	497,463	-4.68	32,785	-4.68	7,751	-4.68
2017	489,129	-6.28	32,236	-6.28	7,621	-6.28
2018	480,581	-7.92	31,673	-7.92	7,488	-7.92
2019	472,114	-9.54	31,115	-9.54	7,356	-9.54
2020	464,071	-11.08	30,585	-11.08	7,231	-11.08
2021	456,935	-12.45	30,114	-12.45	7,120	-12.45

주: 3-5세 대상, 원아수는 2009년 취원율 39.51% 반영함. 교원수는 2009년 교원당 원아수 15.17명 기준, 2009년 유치원당 원아수 64.18명 반영함.

자료: 통계청(2005), 전국 장래인구 추계.

정부는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하였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은 크게 보육료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인프라(서비스)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자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출산의 원인들을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증가, 육아지원인프라 미흡, 일-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등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연구가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혼여성들이 출산·양육과정에서 겪은 개별적인 사건(event)에 한정하고 있었다는 점과는 현저히 다른 점이다.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노동시장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교육-고용-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의 흐름이 조장되어 있으며 이는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시스템 내지 메커니즘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이면서 사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나, 적어도 당분간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후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혼과 만산의 위험(risk)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고위험 임신,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해법으로 자녀 양육비용지원, 육아인프라 확충, 일-가정 양립 제고 등도 매우 중요하나 저출산·고령화가 보다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이삼식 외, 2010a).

2. 국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가. 유아교육 국제 동향

유아교육의 국제 동향은 크게 4가지로, 그 중 첫 번째는 만 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제도 즉, 공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다. 프랑스의 경우 영·유아 공교육형의 국가로, 1886년부터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만 5세의 취원율은 약 100%에 도달하였다. 또한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주지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경우 초등학교 K-학년형이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만 5세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만 5세 무상교육 혜택을 약 90%이다. 교육과정 및 교원정책은 유아교육에서 운영하되, 초등학교 내에 편제하고 있다. 일본은 유아교육·보육 협력기관 추진형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보육 동시 제공(06)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취학전 교육 강화형 국가로, 국가 미래인재정책 추진을 위한 취학전 교육강화 정책을 발표(10)하고, 3년 안에 1만명의 유치원 원장과 주요 교사 교육, 5년 안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교사 연수 실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취학직전 1년의 교육에 대한 엄격한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K학년제를 도입함과 더불어, 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유아들의 취학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 번째는,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의 유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들은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의 유아 연령을 5세에서부터 2세로 확대하여 전략적 투자를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아교육비 공공부담률이 높다. 200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평균 79.7%이었으며, 유아교육 제도 및 교육과정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핀란드는 90.6%, 프랑스는 94.0%, 영국은 86.1%의 비용을 정부가 공공부담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정부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한국의 경우 49.7%,

일본은 43.8%이라는 점에서 OECD 회원국 평균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만 2.5세 또는 3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 틀/framework)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III-2-1 참조).

Age	Standards/curriculum for Care Standards/curriculum for Education and/or Education and Care. No standard curriculum is in place for the specified age group. Compulsory schooling								
	0	1	2	3	4	5	6	7	
Australia	Belonging, Being, Becoming -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Compulsory schooling		
Denmark	Preschool curriculum Læreplanen							Compulsory schooling	
Finland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		Compulsory schooling
France			2.5y National curriculum for école maternelle		Compulsory schooling				
Germany (Hamburg)	Hamburger Bildungsempfehlungen für die Bildung und Erziehung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up to 18		
Germany (Hessen)	Bildungs- und Erziehungsplans für Kinder von 0 bis 10 Jahren in Hessen						up to 18		
Ireland	Early Childhood Curriculum Framework: Aistear								
Japan				Course of Study for Kindergarten			Compulsory schooling		
Korea				National curriculum for kindergarten		Nuri Curriculum		Compulsory schooling	
	Standardized childcare curriculum						Compulsory schooling		
New Zealand	Te Whāriki								
Norway				Framework Plan for the Content and Tasks of Kindergartens			Compulsory schooling		
United Kingdom (England)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Compulsory schooling			
United Kingdom (Scotland)	Pre-birth to three - staff guidelines			Curriculum for Excellence		up to 18			

출처: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2011.

[그림 III-2-1] OECD 주요국가의 교육과정 틀

한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각기 다른 부처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리하는 '분리' 시스템 내에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 또는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과정 틀을 제공하지만, 이에 반하여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과 같이 한 부처에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들은 0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의 단일 교육과정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일부 국가(독일의 2개 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초등교육에서 더 나아가 만 10세, 15세 또는 18세까지 유아교육과정과 연결된 단일 체제의 교육과정 틀을 구

성, 아동의 연속적인 발달 및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OECD의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 틀(framework)을 개발 및 실행할 때, 교육과정의 목표, 구성 및 내용에 대하여 정의 (Defining goals and content)를 내리고, 아동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연계(Curriculum alignment for continuous child development)를 고려하며, 교육과정 틀을 전달하고 확산(Dissemination and communication about the framework)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실행(Effective implementation)시키도록 애쓰며, 교육과정과 연결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 (Systematic evaluation and assessment)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OECD, 2012).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관련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교육과정의 틀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OECD의 권고 사항³⁾

최근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사안들 중, 유아교육과 보육에 해당하는 권고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OECD, 2011b).

첫째,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필수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적절한 인구 수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최근 몇년간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였다. 2009년 출산이 가능한 20-44세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더(또는 아예)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부담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에 미치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곧 출산율 저하로 이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제도에서의 가계 부담을 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절 인구수 유지에도 도움을 주며,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3) 최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용, 소득분배와 빈곤, 양성 평등과 출산율(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보장(공공연금, 장기요양보호 및 보건의료), 교육 형평성 개선, 창업·중소기업 활성화 및 미소금융제도, 치솟는 사회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한국의 세계 개혁)의 7개 영역에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음(OECD, 2011b).

램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곧 인재양성과 사회통합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질의 유아보육·교육 프로그램은 이를 접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이후 이루어지는 학습에서도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사회로의 보상 측면이 강하다. 특히 유아보육·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자극을 훨씬 덜 받게 되는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OECD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아교육 관련 교육 형평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낮은 비용의 우수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통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는 우리나라 정부의 유아교육 관련 공공지출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만3-5세 유아의 8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정부의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30%가 낮은 저조한 수준이다(2007년 기준, 3-4세에 투입되는 공공비용 79.7%, 한국 49.7%). 즉,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자원 중 민간이 담당하는 부문이 절반으로, OECD 국가들의 민간 담당 비율이 2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고, 취약계층 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공 지출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하위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유아교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아동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을 소득기준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매월 17만7천원(163달러)에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공지출비율은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OECD는 우리나라가 교육 평등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가정의 유아 교육·보육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벨기에·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만 3세 이상 유아에게 최소한 주당 20시간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이외에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다 어린 아동에게는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당 20시간의 무상 유아교육 외 추가 교육시간에 대한 소득 조사 기반의 보조금을 맞벌이 부부에게 지급하는 뉴질랜드의 최근 사례를 우리 정부가 참고할 만하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드 유아교육과 보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도 유아교육·보육비용을 가구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이하로 제한(첫 아이 3%, 둘째 아이 2%, 셋째 아이 1%)하면서 부모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넷째, OECD는 우리나라 정부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OECD 회원국가 중 상당수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든 보육시설에 다니든, 모든 유아들의 조기교육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통합 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채택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스웨덴에서는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새로운 교육과정 기본 틀을 현재 실시하면서 조기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다섯째, OECD는 우리나라 정부가 5세 미만 유아를 위한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일원화 체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80년대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원화 체제로의 통합은 사회적 목표, 규정, 재정, 교사인력구조, 교육과정과 평가, 부모부담금, 운영시간 등에 있어 일관된 정책 및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아의 경험 연계를 확장시키고 서비스의 공적관리를 향상시켜 초기투자 대비 효과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으로의 일원화가 이루어진 경우 3세미만 아이와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법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초기에 복지에서 완전히 통합된 후 교육으로 이전시켰으며, 그 결과 서비스 접근성, 예비학교 교육과정의 소개, 재정제도, 교사교육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게다가 처음부터 교육으로의 일원화를 이루어낸 뉴질랜드의 경우, 미취학 연령의 모든 유아들을 위한 공공재정과 교육과정, 노동력 조직에서의 발달을 이루었으며, 다양성을 갖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교육을 포괄적 돌봄과 행복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로, OECD는 교육과정, 관리 및 감독, 재정지원 측면에서 뉴질랜드의 통합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하였다(그림 III-2-2 참조). 모든 서비스의 공동시스템으로의 접근성, 공동 교육과정과 규정, 공동 재정 시스템, 그리고 핵심 직업군으로서의 하나의 인력시스템을 포함하므로, 구조적 변화는 명백한 근거, 방향,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1단계	국가수준 영유아 교육과정의 통합 (보육시설에 대한 장학 실시 포함)
2단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통일
3단계	부처 간 행정 업무 이전 (교육부 내 보육업무 담당 신설)
4단계	교사 자격제도 통합 (교사 양성과정, 자격, 연수, 급여 동일화)

[그림 III-2-2]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의 단계적 통합 과정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각 국가들도 그들의 정치·문화·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육아지원체제를 갖추고 변화해 오고 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간 이원화된 육아지원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운영에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비와 보육료 차이, 교사 인건비 및 근무시간 차이, 전달체계 및 관리·감독 차이, 관련 지원체계의 기관 및 인력 차이, 재정 지원 차이, 동일연령(만 3-5세) 유아 부모들에게 기관 선택시 불필요한 혼란 가중, 동일 정책의 다른 전달체계 및 시행방법으로 야기되는 혼동(예. 유아학비 지원 아이즐거운카드,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제한된 대상 유아수(중복되는 만 3-5세) 관련 원아 모집시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계와 보육계 간의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및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협력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커진 시점에서, 육아지원체제의 개혁(일원화 체제)에 당위성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OECD의 권고사항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다. UNESCO의 권고 사항⁴⁾

1) 유아교육·보육 통합

UNESCO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및 체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문무경·서문희, 2012). 첫째, 먼저 내용·개념이 통합되고

4) 최근 UNESCO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조정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국제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조정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뒤따라 구조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유아의 생애 발달적 측면과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내용·개념적 통합이 구조의 일원화 혹은 이원화의 통합 고려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또한 구조적 통합을 해석할 때에도 분리 혹은 통합의 이원적 논의보다는 통합의 정도(수준) 문제로 해석해야한다는 조언하였다.

둘째,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를 권고하였다. 연령별 분리를 하되 만 0-2세의 지적발달의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하여 자칫 보육서비스에 교육서비스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셋째, 유아교육·보육의 재 개념화 및 재구조화가 지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아이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교육의 대상이지만 만 3세부터 읽고 쓰고 셈하기 등 학교 준비를 강조하는 교육이 아닌, 영유아기 시절부터 자기조절기술 습득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유기체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육은 교육의 보조적 추가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과 동시에 보육 없이는 교육이 완성될 수 없다는 불가분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특히 만 0-2세 영아들은 사회·정서·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경험하고 있기에 높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즉, 통합은 돌봄과 다른 서비스들 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정립해주는 '강력하고 동등한 파트너 쉽'이라는 개념 정의에 있어 변화 수용이 필요한 것이다(표 III-2-1 참조). 다시 말해 교육은 유아의 발달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서비스와 정책들과의 긴밀하고도 협조적인 관계를 위한 확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유아교육·보육의 통합보다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질 향상을 통한 잠재적 이익이 행정개혁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비용절감보다 그 효과가 더 크다고 UNESCO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 향상을 위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며 게다가 교사의 길 제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는 누리과정 연수뿐만 아니라 교사 재교육 및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질 평가 및 관리 감독을 위한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표 III-2-1 참조).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호 교류와 이동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상호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동 및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서비스 질 관리·양성과정·현직 연수·시설설치 기준 등에서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맞추어 양쪽이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표 III-2-1 참조). 누리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 (예: 공통과정 정교화, 공동 교사연수 실시 및 공동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의 더 큰 조정과 통합을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지자체 수준에서 서비스 간의 협력(예: 영차 프로젝트)을 권고하였다(표 III-2-1 참조).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역학관계에서 수월한 대안이 아닐 수 있으나, 지역 주민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조정 또는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 단위 유아교육·보육 협력과 통합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작은 행정구역차원에서 양적인 부분의 협력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초·중등 교육행정인력의 잉여를 취학 전 유아교육기관 행정인력으로 전환하여 만 0-5세 아동의 1인당 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혜택과 교육을 통한 부모·가족 지원을 권고하였다. 자녀의 생애 첫 1년간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하는 진정한 육아휴직 정책이 필요하므로, 직접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공공 보건서비스뿐 아니라 공공 육아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해결과 여성노동 참여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여덟째, 공평한 출발을 위한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권고하였다. 급증하는 이민인구 가정의 대부분이 교육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그들 자녀에게 조기 투자함으로써, 우수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할 수 있기에 훗날 인재양성 및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 아동의 91%가 유아교육기관 이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9%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대책이 미흡하여 일부 극빈층 자녀와 관련하여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III-2-1〉 UNESCO의 한국 유아교육·보육 통합 안

통합 안	고려사항 및 내용
현행 이원화 체제의 조정	- 한 쪽의 체제를 다른 체제 아래 두는 것보다 양 체제 모두를 어느 한쪽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양 체제의 차이 인정해야 함
연령별 분할체제	- 유아기는 인지적으로 좁게 정의된 교육보다 광의로 정의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시기임을 고려해야 함 - 연령구분 이원화는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 0-2세는 복지부; 3-5세는 교과부 (2) 오전 기본과정은 교과부, 오후 방과 후 돌봄은 복지부 (3) 0-4세는 복지부, 5세는 교과부

(표 III-2-1 계속)

통합 안	고려사항 및 내용
단일부처 아래 서비스 통합	- 주요목표가 정책의 주안점이 되며 그 목표의 현실화에 전념해야 함 - 0-5세 교과부 또는 복지부
새로운 중앙부처 아래 서비스 통합	- 두 부처가 공동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행·재정을 관장하는 것에 충분한 자율성이 부여되면 정책개발이나 합의에 이르는 비용 절감 됨 - 현 이원화 체제 인력과 다른 재원들의 최대 활용으로, 더 통합적인 목표로 함께 이끌어 가야 함 - 0-5세 제3의 부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을 통한 통합	- 국가 정책, 체제, 규정, 평가, 관리 면에서 중앙 수준 유지 필요 - 지방 부처의 분권화와 지방 정책, 조직과 관리 사이에 실제적인 권력 이양 필요 - 충분한 재정 할당 필요

자료: 문무경 외(2012). 유네스코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조정 국제비교연구. 유아정책연구소.

2) 취학전 교육단계 표준 고려

가) 주요 특징

최근 유네스코(UNESCO)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교육체계와 단계를 총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단계를 제시하면서 초기 아동교육을 2개 단계로 구분하는 ISCED 2011 개정안을 채택하였다(UNESCO, 2011). 이번 개정안에 설명되어 있는 취학전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특징과 기준에 대한 UNESCO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 프로그램 또한 이런 국제적 기준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UNESCO가 제정한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ISCED level 0” 단계는 0세부터 취학전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0-2세 연령 범위의 어린 아동을 위한(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이며, 후자는 3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는 때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ISCED 02)이다.

ISCED level 0 또는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조기 인지, 신체, 사회 및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맥락의 외부에서 조직화된 가르침(instruction)을 어린 아동이 접하게 하기 위

해서 전형적인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으로 설계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둘째, ISCED level 0은 방향성이 포함된 교육 요소를 지녔으며, 즉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회·정서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학업 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키며, 초등교육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ISCED level 0 프로그램이 반드시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물리적 환경에서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아동은 교사의 지도 아래 창의적인 활동 및 놀이기반의 일반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 하면서 배울 수 있다.

ISCED level 0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리는데,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evelopment), 놀이 학교(play school), 리셉션(reception), 예비 초등(pre-primary), 유아원(pre-school) 또는 유아교육(educación inicial)이라고 불린다. Crèches, day-care centres, nurseries 또는 guarderías⁵⁾ 등의 탁아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아래에서 지정한 ISCED level 0의 분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7가지 기준

ISCED level 0(early childhood education/ pre-primary education)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기준(주요기준 4개, 부수적 기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요기준은 ‘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유아교육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 프로그램은 학습 환경에서 유아에게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고, 언어가 풍부해야 하며,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 및 언어습득에 중점을 둔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환경이 교사의 보호감독(supervision), 영양 및 건강 등의 보육만을 제공할 시 ISCED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어서 예비 초등교육(pre-primary education) 프로그램의 경우 유아가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기술이 증진되며, 논리와 추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며, 스스로 사고과정을 통해 말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5) 모두 day care center를 뜻함.

두 번째 주요기준은 학교를 기반으로 둔 기관이나 여러 명의 유아를 위해 조직화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주요기준은 해당 연령 유아의 나이 적합성으로, 유아교육 발달 프로그램은 0-2세, 예비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3세부터 ISCED 1이 시작될 때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네 번째 주요기준은 프로그램의 강도(intensity)와 기간(duration)으로 적어도 하루 2시간에 상당해야 하며 1년 중 100일에 상당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이어서 부수적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는 교사의 질적 요소로 교육학적(pedagogical) 자격 요건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규제 체계의 존재로, 다시 말해 당국(예, 교육부, 관련 부서)에 의해 발급되거나 인정되는 참조 또는 규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규제 체계는 지표(guidelines), 표준(standards) 또는 어린 유아에게 제공되는 학습기회를 설명하는 지침(instructions)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는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의 일환은 아니라는 점이다. ISCED level 0은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의 첫 단계나 그 기간 안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과 연결지어 ISCED level 0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3. 요약 및 시사점

미래 교육체제는 개방성, 다원화, 다양화의 패러다임하에 개인의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 환경과 핵심 역량 내용을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민주시민의 기초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소외계층 및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상 연령도 만 5세에서 3세, 2세까지 낮추고 있는 경향이다. OECD는 한국에 대한 권고문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더욱 늘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세까지 확대할 것과 주당 20시간의 무상교육과 함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첫째아, 둘

째아, 셋째아 각각 가구소득의 3%, 2%, 1% 수준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교육격차 해소에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였다.

UNESCO는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권고문에서 내용·개념이 통합되고 뒤따라 구조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통합의 이원적 논의보다는 통합의 정도(수준) 문제로 해석해야 하며,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와 유아교육·보육의 재개념화 및 재구조화가 지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보다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호 교류와 이동 통로가 개방되어야 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서비스 간의 협력 및 다양한 혜택과 교육을 통한 부모·가족 지원과 공평한 출발을 위한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권고하였다.

IV. 유아교육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4장에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총 7가지 분야(지역별 기관 유형별 이용에서의 차이, 유아교육의 공적 투자 미흡, 교육 재정의 차이, 기관 설립유형별 교사 배경 및 근무여건 차이, 소득계층별 차이 및 지원 문제, 유아교육 지원 체계의 한계,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로 인한 협력적 발전의 한계)로 나뉘어 살펴보고 있다.

1. 지역별, 기관유형별 이용 차이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차이

2010년을 기준으로,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전체 이용 경향을 살펴보면, 유아 연령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1>에 의하면, 만 3세는 어린이집 취원율 49.7%로 유치원(22.6%)보다 높았으며, 만 4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약 40%로 비슷하였고, 만 5세의 경우 유치원 취원율이 56.4%로 어린이집(34.5%)에 비해 더 높았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기관 이용도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 3-5세 취원 대상아의 약 81%(221,496명)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9%인 26만 여명은 교육·보육 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명하는 조사를 통하여 취원을 개선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6) 2012년 3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합산 취원율이 87.2%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식 통계 집계기 아니므로 인용하지 않음.

〈표 IV-1-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10)

단위: 명, %

연령	취원 대상아 수1)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률	
		유치원2)		어린이집3)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21,496	19.0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자료: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차이에 이어서, 시·도별에 따라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IV-1-2 참조). 전체적으로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지역은 유치원 취원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보육시설의 취원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V-1-2〉 시·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2011)

단위: 명

시·도별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취원율			
	3세	4세	5세	전체	3세	4세	5세	전체
계	27.9	41.7	53.0	40.6	56.7	38.8	34.9	43.8
서울	24.0	34.2	40.5	32.6	49.9	36.5	37.6	41.5
부산	36.2	52.8	60.1	49.4	51.0	29.4	30.2	37.1
대구	21.4	48.0	66.8	45.0	69.5	36.0	24.6	43.8
인천	30.1	45.4	57.7	44.0	53.9	34.8	29.0	39.6
광주	33.3	41.7	50.1	41.6	63.9	47.0	45.6	52.3
대전	29.7	48.3	60.9	46.0	56.1	33.7	26.3	39.0
울산	28.6	52.7	65.9	48.4	58.5	27.6	21.2	36.3
경기	26.9	40.6	53.2	39.9	51.3	36.0	27.3	38.5
강원	25.1	34.8	49.8	36.4	69.4	54.1	46.8	56.9
충북	25.4	35.6	45.6	35.3	69.5	52.1	48.4	56.9
충남	27.7	40.7	51.4	39.6	62.6	47.1	40.4	50.3
강원	25.1	34.8	49.8	36.4	69.4	54.1	46.8	56.9
충북	25.4	35.6	45.6	35.3	69.5	52.1	48.4	56.9
충남	27.7	40.7	51.4	39.6	62.6	47.1	40.4	50.3
전북	37.4	42.0	48.6	42.6	59.0	48.2	55.9	54.4
전남	30.7	36.7	44.7	37.2	65.9	53.8	52.2	57.5

(표 IV-1-2 계속)

시·도별	유치원 취원율				어린이집 취원율			
	3세	4세	5세	전체	3세	4세	5세	전체
계	27.9	41.7	53.0	40.6	56.7	38.8	34.9	43.8
경북	30.7	50.9	64.9	48.4	63.9	39.1	35.4	46.5
경남	32.0	49.1	62.6	47.3	58.8	35.3	31.2	42.2
제주	8.2	19.7	54.1	27.0	89.7	71.4	42.7	68.2

주: 1) 유치원은 201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고, 보육시설은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2) 취원대상아 수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2011. 12. 31) 이용.

3) 유치원 5세 취원 아동 수는 5,6,7세를 아동 수를 모두 포함한 총합.

4) 보육시설 5세 취원 아동 수는 만 5세, 만 6세이상 아동 수는 모두 포함한 총합.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DB (2011. 4).

2)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1. 12. 31).

3)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2011. 12. 31).

나. 지역별 유치원 분포와 이용 차이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유치원 분포 및 이용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분포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읍면지역에, 사립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 경험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을 보인다(표 IV-1-3 참조). 도시지역에는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이 부족하므로 교육비가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유치원 선택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장명립, 2012).

〈표 IV-1-3〉 지역별, 설립별 유치원 수(2011)

구분	단위 : 개										
	계	국립	공립			계	사립			개인	군부대
			계	단설	병설		법인	소계	학교법인		
계	8,424	3	4,499	146	4,353	3,922	455	75	380	3,450	17
대도시	2,467	0	637	37	600	1830	199	50	149	1,624	7
중소도시	2,940	1	1,354	66	1,288	1,585	162	18	144	1,418	5
농어촌	3,017	2	2,508	43	2,465	507	94	7	87	408	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통계청(2011. 4).

특히,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 비용은 도시지역 중산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고소득층은 영어·특기교육 때문에 고가의 사립유치원 또는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육아정책개발센터(2008)의 연구에 따르면 월 소득 200~399만원 구간이 교육비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4〉 전체 취원 대상 만 5세 유아의 공·사립유치원 취원율

구분	단위 : %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취원율 소계
대도시	9.2	40.5	49.7
중소도시	17.0	36.2	53.2
농어촌	28.4	23.6	52.0

출처: 교육통계연보(2010)

특히, <표 IV-1-4>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10명 이하의 학급이 52%에 달하여 보다 충실한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유아단계에서의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표 IV-1-5>는 지역별, 유형별 유치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도시는 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공립의 신·증설의 한계가 있으며, 병설유치원 중 원감의 미배정인 곳이 많아 유아교육의 전문성 취약이 문제점이다. 게다가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중·상위계층 가정의 유아들은 영어학원으로 유출되며, 하위계층은 보육시설 등으로 유출되는 문제점 및 특기·적성교육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 농·어촌 공립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소인수 학급으로 교육력이 저하되며 차량운행 제한으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장학 전문 인력 부족 및 교사 배치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농·어촌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취원 대상아 수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 구조가 악화되고, 낮은 자본력으로 인하여 시설환경 개선이 미흡하며, 체험학습장 등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었다.

〈표 IV-1-5〉 지역별, 유형별 유치원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도시	공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 수요 대비 공급 절대 부족 •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공립 신·증설 한계 • 병설유치원 원감 미배정으로 유아교육 전문성 취약

(표 IV-1-5계속)

구 분		문제점
도 시	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학원 등으로 중·상위계층 가정 유아 유출 • 보육시설 등으로 하위계층 가정 유아 유출 - 지자체의 보육시설 편중 지원(예, 서울형 어린이집) • 특기·적성교육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	공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소인수 학급(10명 이하)으로 교육력 저하 • 차량운행 제한으로 원아 모집에 한계 • 장학 전문 인력 부족 및 교사배치의 비효율성
	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취원 대상아 감소로 재정 구조 악화 • 낮은 자본력으로 시설환경 개선 미흡 • 체험학습장 등 유아교육 인프라 부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선진화 도입 계획. 내부자료.

다. 높은 사립기관 의존도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 기관수를 제외한 학급 수, 교원 수, 원아 수의 공사립 분담 비율이 균형적이지 못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6 참조). 공·사립 유치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8,424개로서 국공립이 4,502개, 사립이 3,922개이나, 원아 수 분담비율은 국공립은 22.3%(126,095명) 사립은 77.7%(438,739명) 수준으로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다.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관계로 결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 IV-1-6〉 공립·사립 유치원간 분담 비율(2011)

구 분	단위: 개, 명(%)		
	국·공립	사립	전 체
원수	4,502(53.4)	3,922(46.6)	8,424(100.0)
학급수	7,273(27.4)	19,253(72.6)	26,526(100.0)
교원수	9,239(23.9)	29,423(76.1)	38,662(100.0)
원아수(3,4,5세)	126,095(22.3)	438,739(77.7)	564,834(100.0)
원아수(5세)	74,729(32.0)	158,995(68.0)	233,724(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통계청(2011. 4).

게다가, 최근 5년 동안 국공립유치원 수와 학급 수, 원아 수는 조금씩이나마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표 IV-1-7 참조).

〈표 IV-1-7〉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2007~2011)

단위: 개원, 개, 명, %

구분	국·공립 유치원			
	유치원수	학급 수	원아 수	이용률
2007	4,448	6,646	118,422	8.1
2008	4,483	6,789	119,128	8.5
2009	4,493	6,887	125,536	9.3
2010	4,501	7,129	126,577	9.7
2011	4,502	7,279	126,095	7.4

주: 1) 유치원 수, 학급 수, 원아 수는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함.

2)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연차보고서 자료를 이용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경기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 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자녀가 다니기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을 경우, 1순위 응답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이 40.5%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비슷한 수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39.0%)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중복응답의 경우에도 국공립 유치원의 선호도가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서비스 이용자 선호 시설

단위: %

구분	1순위 응답	중복응답
국공립 유치원	40.5	74.3
국공립 어린이집	39.0	64.8
민간 유치원	7.3	27.3
민간 어린이집	7.0	18.0
직장 어린이집	6.0	14.8
기타	0.3	0.5

주: 사례 수는 400명임.

자료: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2012.5).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인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실태조사' 내용을 발췌 이용함).

2.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미흡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IV-2-1>에 따르면, 유아 1인당 평균 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 평균인 6,210달러의 68% 수준이다. 또한 GDP 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 또한 정부의 공적 재원 지원을 받는 유아 비율은 49.7%로 OECD 평균 79.7%의 6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표 IV-2-1〉 OECD 국가의 유아교육 재정 투자 비교(2011)

구 분	학생 1인당 연간 유아교육비지출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PPP)환산액) (2008)	GDP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 (2008)	공적 비용 투입 기관 비율(%) (2007)
한국	4,281	0.2	49.7
덴마크	6,382	0.7	81.2
프랑스	5,787	0.7	94.0
독일	6,887	0.5	72.8
일본	4,711	0.2	43.8
스웨덴	6,519	0.7	100.0
영국	7,119	0.3	86.1
미국	10,070	0.4	77.8
OECD 국가평균	6,210	0.5	79.7

자료: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1.에 근거하여 OECD 전체 국가 자료 중 한국을 포함한 8개국 데이터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 단, 공적 비용 투입 기관 비율은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0.의 데이터임.

우리나라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초등·중등·고등교육 단계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유아교육단계는 OECD 평균보다 낮다고 검토되었다. <표 IV-2-2>에 의하면, 초등·중등교육 단계는 OECD 평균(3.7%)보다 0.5%p 높은 4.2%이나 유아교육단계는 OECD 평균(0.51%)보다 0.33%p 낮은 0.18%이다. 그리고 유아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해 보면 OECD 국가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구분	단위: %											
	전체 교육단계			유아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한국	7.5	4.7	2.8	0.19	0.09	0.10	4.2	3.4	0.8	2.6	0.6	1.9
OECD평균	5.9	5.0	0.9	0.51	0.44	0.07	3.7	3.5	0.3	1.5	1.0	0.5

자료: OECD(2011b).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3. 재정 투자 및 재정 지원 차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재정의 미흡함에 이어서, 유아교육 재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역에 따라 교육 재정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간 재정 지원액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가. 지역별(시·도별) 교육 재정의 차이

우선 지역별 총 교육예산 대비 유아교육 예산에서 편차가 심한 것이 발견되었다(표 IV-3-1 참조). 경기, 경남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 4.2%를 차지하는 반면, 서울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2.1% 수준이다. 16개 시·도별 유아 1인당 연간 교육예산(2010)은 최고 5.5백만원(경남)에서 최저 1.8백만원(서울)으로 무려 3.7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7개의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는 전체 평균인 약 2.8백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일반비 지원액 비율에 있어서도 경기, 충남, 광주에 10%에 미치지 못하며, 대전과 경북은 각각 18.1%, 17.8%에 달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액은 경기, 서울, 전남과 같이 지원 수준이 높은 지역부터 전혀 지원이 없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시·도별 유아예산 현황(2010)

단위: 백만원, 천원, %

지역	유아교육 예산집행액 (백만원)	총교육예산 대비 유아 교육예산 (%)	지자체 유아교육지원액 (천원)	유아 1인당 연간 교육예산 (백만원)	종일반 지원액 (백만원, %)	교사 1인당 연수 지원액 (천원)
전체	1,500,018	3.5	72,236,280	2.89	178,711 (11.9%)	129.4
서울	139,121	2.1	7,470,554	1.8	15,443 (11.1%)	17.4
부산	84,012	3.0	2,475,618	2.3	12,612 (15.0%)	102.7
대구	60,259	3.1	132,000	2.2	8,834 (14.7%)	143.0
인천	78,854	3.4	2,150,751	2.4	9,579 (12.2%)	28.5
광주	47,386	3.5	522,729	2.8	4,106 (8.7%)	167.9
대전	47,600	3.6	232,000	2.3	8,634 (18.1%)	83.2
울산	36,093	3.2	271,200	2.3	4,981 (13.8%)	149.1

7) 김병주(2012. 4). 유아교육·보육 격차의 문제와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 정책포럼의 주제발표(미래사회와 공생을 위한 육아정책의 선진화 방안, 장명립)에 대한 토론의 일부임.

(표 IV-3-1계속)

지역	유아교육 예산집행액 (백만원)	총교육예산 대비 유아 교육예산 (%)	지자체 유아교육지원액 (천원)	유아 1인당 연간 교육예산 (백만원)	종일반 지원액 (백만원, %)	교사 1인당 연수 지원액 (천원)
전체	1,500,018	3.5	72,236,280	2.89	178,711 (11.9%)	129.4
경기	360,667	4.2	49,362,383	2.5	21,324 (5.9%)	108.8
강원	67,118	3.6	287,794	4.7	8,647 (12.9%)	423.6
충북	63,397	3.9	183,280	4.2	10,108 (16.4%)	39.4
충남	75,282	3.3	567,700	3.3	6,085 (8.0%)	72.4
전북	76,256	3.5	125,209	3.9	11,432 (15.0%)	14.9
전남	97,481	3.9	3,845,601	5.5	13,764 (14.1%)	181.1
경북	119,770	4.2	1,639,905	3.7	21,286 (17.8%)	323.4
경남	129,396	4.1	2,960,556	2.9	19,261 (14.9%)	328.4
제주	17,326	2.6	0	3.7	2,615 (15.1%)	213.2

주: 종일반비 지원액= 종일반비+종일제 환경개선비+종일제보조인력지원비+종일제운영지원비
 종일반 지원액 비율=(종일반비 지원액/유아교육 예산집행액)x100

유아교육 예산이 어어, 지역별로 교사 1인당 연수비 편차가 심했다. 2010년 기준 교사 1인당 평균 연수비는 129,400원인데, 시·도별로는 강원, 경북, 경남은 300,000원이 넘는 반면, 서울, 전북, 인천은 30,000원으로 지역 간 차이가 컸다 (표 IV-3-2 참조).

〈표 IV-3-2〉 교사 1인당 연수지원비(2010)

단위: 천원, (명, %)

유아교육 예산	교원연수 지원예산	유아교육 예산 대비 교원 연수지원비 예산 비율	교원 수 (명)	교사 1인당 연수 예산
1,500,018,000	4,718,995	31.5 (%)	36,461 (명)	129.4

자료: 경기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나.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재정 지원 차이

지역별 교육 예산 차이에 이어, 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비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유아교육 예산을 유아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2,785천원이며 이는 2005년과 대비하여 140%가 증가한 금액이다(표 IV-3-3 참조).

〈표 IV-3-3〉 연도별 유아 1인당 교육예산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 교육예산	1,510	1,750	1,882	2,300	2,785

단위: 천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이와 비교하여, 유아 1인당 보육 예산은 2010년 기준 4,207천원이며, 2005년 대비 145%가 증가한 것으로, 유아 1인당 교육비(2,785원)에 비해 1,422천원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유아교육비와 보육비의 정부 부담 비율이 차이가 난다. 유아교육과 보육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교육비와 보육료를 추산하여 보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유아교육의 경우 40.9%, 보육은 63.7%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은 2조 5,291억원 중 정부부담액이 1조 348억원(40.9%)이나, 보육은 6조 4,346억원 중 정부부담액이 4조 1,032억원(63.7%)으로 보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표 IV-3-4 참조). 게다가 유아교육·보육 총 지출비용은 GDP 대비 0.62%(2010)이며, 2005년도 0.2%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OECD에서 권장하는 1%에 비하여 여전히 0.38%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IV-3-4〉 유아교육재정 개요(2010)

항 목	비용 수준/비율	비 고
유아교육 총 예산	1,529,272백만원	보육 총 예산 4,943,503백만원의 31%
유아 1인당 연간 유아교육예산	2,785천원	1인당 보육예산 4,207천원
정부부담비율	40.9%	보육의 경우 63.7%
GDP 대비 유아교육지출비율	0.2%	보육지출비율 0.42%

4. 기관 설립유형별 교사 배경 및 근무여건 차이

제 4절은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른 교사의 배경 및 근무여건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IV-4-1>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유형별로 교사의 학력 차이가 발생하였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졸자가 52.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31%로 공립(52.5%)에 비하여 4년제 대졸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2, 3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립은 11.6%인 반면, 사립은 60.8%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력이 사립보다 높았다.

〈표 IV-4-1〉 학위취득별 유치원 교사 현황(2011)

단위: 명 (%)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고졸	24	0 (0)	9 (0.01)	15 (0.1)
2년제 대졸	7,250	1 (5.6)	928 (10.1)	6,321 (21.5)
3년제 대졸	11,709	0 (0)	137 (1.5)	11,572 (39.3)
4년제 대졸	13,973	4 (22.2)	4,837 (52.5)	9,132 (31.0)
대학원 석사졸	5,429	13 (72.2)	3,266 (35.4)	2,150 (7.3)
계	38,662	18 (100.0)	9,221 (100.0)	29,423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교사의 경력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IV-4-2>에 의하면, 국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2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전체의 61.1%이며,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초임부터 30년 경력의 교사까지 분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4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5년 미만 교사가 전체의 60.1%로 국·공립에 비해서 15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경력연도별 유치원 교사 수(2011)

단위: 명, (%)

구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5년 미만	18,955	3 (16.7)	1,263 (13.7)	17,689 (60.1)
5년 이상~10년 미만	8,380	1 (5.6)	2,069 (22.4)	6,310 (21.4)
10년 이상~15년 미만	3,678	1 (5.6)	1,169 (12.7)	2,508 (8.5)
15년 이상~20년 미만	2,098	5 (27.8)	818 (8.9)	1,275 (0.4)
20년 이상~25년 미만	2,980	6 (33.3)	2,131 (23.1)	843 (2.9)
25년 이상~30년 미만	1,972	2 (11.1)	1,544 (16.9)	426 (1.4)
30년 이상~35년 미만	408	0 (0)	210 (2.3)	198 (0.7)
35년 이상~	191	0 (0)	17 (0.2)	174 (0.6)
총계	38,662	18 (100.0)	9,221 (100.0)	29,423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학력과 경력에 이어, 유치원 교사의 월 평균 급여가 기관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유치원 교사는 평균 약 357만원, 공립유치원 교사는 약 330만원 이었으나(표 IV-4-3 참조), 사립유치원 교사는 약 166만원으로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월급과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초임 연봉의 경우, 국공립 교사는 2,367만원, 사립 교사는 1,451만원으로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다. 전체 유치원 교사의 76%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하여 이로 인하여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4-3〉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

단위: 만원

근무기관	국립 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평균
월 급여	357.3	330.6	166.3	207.4

주: 교사의 학력과 경력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4년제 졸업자와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자료: 1) 육아정책연구소(2012. 9. 1). 육아정책 Brief- 영유아 교사의 근무여건을 진단한다.

<표 1> 참고.

2)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설립, 지역, 직위별 급여 현황(2012년 12월 기준). 유아교육과 내부자료.

학력, 경력, 월급에 이어, 유치원 교사의 일일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일일 평균 13.4시간인 반면, 사립은 17.5시간으로 사립유치원 교사가 일일 평균 약 4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4 참조).

〈표 IV-4-4〉 유치원 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 : 분 ,(시간)

설립유형별 일일 근무시간 평균		일일 근무시간 평균			출근시간 평균			퇴근시간 평균		
국공립	사립	주중	주중야간 근무 시	주말	주중	주중야간 근무 시	주말	주중	주중야간 근무 시	주말
13.7(시간)	17.5(시간)	9:54	2:18	5:36	8:11	17:40	8:04	18:02	19:58	14:41

주: 설립유형별 일일 근무시간 평균 관련 내용은 김은영 외(2011) 보고서를 이용함.

자료: 1)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2012.5).

2) 김은영 외(2011).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운영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 교사의 경우 주중 평균 9시간 54분, 주중 야간 근무 시에는 2시간 18분의 근무시간이 추가되고, 주말에는 평균 5시간 36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근로기준 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5). 과중한 근무시간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수업 준비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근무시간에 대한 조절이 시급히 필요하다.

5. 소득계층별 차이 및 지원 문제

제5절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및 소득계층별 차이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 사교육비 부담 및 소득계층별 차이

만 3세 이상 취학전 유아가 있는 전국 2천 52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307가구(91.3%)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2,521가구(99.8%)인 반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가구는 단 6가구(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1 참조).

〈표 IV-5-1〉 유아교육기관 이용과 사교육 이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이용	미이용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 정규프로그램)	2,307(91.3%)	220(8.7%)
유아 사교육(유치원 및 보육시설 특별활동, 학원, 개별교육 및 학습지, 기타 교육)	2,521(99.8%)	6(0.2%)
전체	2,527(100%)	

자료: 차성현 외 6인(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단계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유아 99.8%, 초등생 88.8%, 중학생 74.6%, 고등학생 55.0%로 유아의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차성현 외, 2010; 강영애, 2008). 유아가 지출하는 유아교육기관 월평균 교육비는 328,500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404,000원으로 이중 사교육비는 약 163,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대비 유아 사교

육비 지출 규모는 5.1%로 유아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2 참조).

〈표 IV-5-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의 차이 및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월평균 사교육비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	
	사례수 (100%)	사교육비	사례수 (100%)	사교육비 비율
유아수	1명	2,059	2,052	4.59(4.82)
	2~3명	310	309	8.45(7.16)
월평균 소득	199만원이하	151	151	6.17(7.76)
	200~299만원	637	637	5.24(5.15)
	300~399만원	870	870	5.36(5.38)
	400~499만원	393	393	4.42(4.78)
	500만원이상	307	307	4.41(4.70)

자료: 차성현 외 6인(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나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학원은 21.0%이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어, 미술, 음악 등 정규과정 외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20%와 24.5% 이었으며, 학원 종류는 체육(30.1%), 음악(23.9%), 미술(22.9%), 영어(14.3%)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도 영어학원 등과의 치열한 모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외부강사에 의한 영어, 예체능 등 특기·적성 교육 실시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최근에는 오후의 특별활동이 아닌 오전 기본정규 수업시간부터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며, 이러한 특별활동은 대부분 각각 단절된 활동으로 실시되므로 유치원 기본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유아교육의 핵심인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은 유치원의 모든 운영비를 학부모가 납입하는 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민간 기관들이 유사기관과 경쟁적으로 원아 확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유아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의 경우 74.3% '적당하다' 또는 '부담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9%와 9.8%로 나타났다(차성현 외, 2010).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유아교육 완전 무상 공교육화를 위해 예산 및 법적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 문제

1) 저소득층 가정 및 유아 추가 지원 필요

저소득이나 빈곤 개념은 상대적이므로 보편적 정책 하에서는 여전히 소득 격차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아학비·보육료 전액 지원 속에서도 실제 저소득층은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서의 추가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며 이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누리과정 정책으로 기본교육과정비용에 대한 부담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지만 특별활동 등 기타 추가비용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부담으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보육료·교육비와 지원단가간의 격차와 특별활동 등 기타 추가 비용 부담이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 이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 지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IV-5-3〉 월 평균 보육료·유아학비 및 추가 납부액 차이

단위: 천원(명)

구분	전액 면제 대상				일반 대상				총계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전체	4.3	40.7	44.4	87.7	292.3	51.6	249.5	95.3	123.1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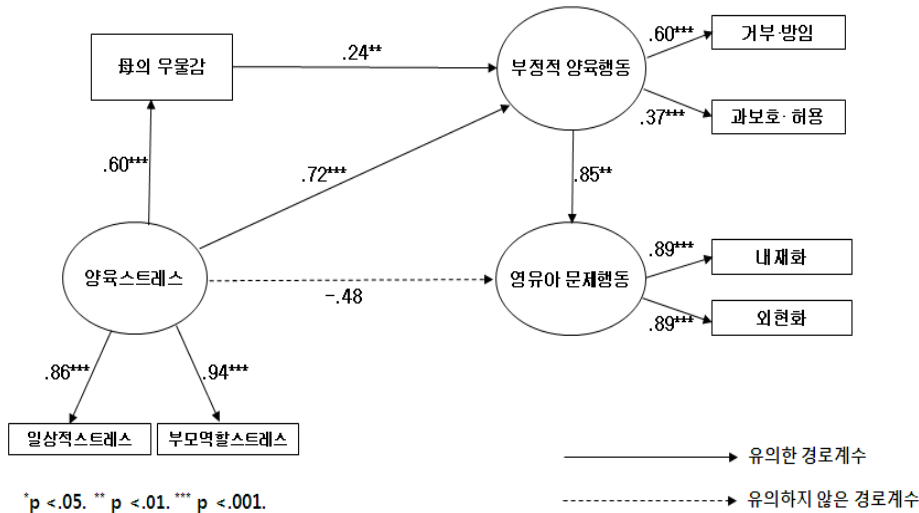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 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 3월부터는 3-5세 누리과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유아들의 취학전 출발점 평등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전면 시행으로 사실상 취학전 의무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초등학교 이전 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교육 격차의 해소 및 예방 정책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2)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시급

[그림 IV-5-1]에 의하면,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들이 대부분으로,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모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곧 '영·유아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그림 IV-5-1 참조). 저소득층가정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 취약환경에 놓이

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 지원과 함께 부모의 정신건강 및 양육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 장명립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 소

[그림 IV-5-1]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최종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3)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필요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들이 가장 걱정되는 자녀의 발달 영역으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꼽았으며, 가정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난다(장명립 외, 2009).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양(두)부모가정 부모는 사회성발달이 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서발달이 17.3%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정서발달 28.6%, 사회성발달과 신체발달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정서발달과 언어발달을 걱정하는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의 언어발달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도조사 결과). 이처럼 취약계층의 가정유형에 맞춘 정부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표 IV-5-4〉 걱정되는 영유아 발달 영역

단위: %(명)

구분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없음	계(명)	$\chi^2(df)$
전체	13.4	12.0	7.1	18.2	20.2	29.2	100.0(665)	
가족유형별								
양부모	13.5	12.0	6.7	20.0	17.3	30.5	100.0(475)	18.82(10)*
한부모	15.0	10.0	6.4	15.0	28.6	25.0	100.0(140)	
조손	-	33.3	8.3	8.3	33.3	16.7	100.0(12)	

자료: 장명립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장명립 외, 2009),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임. 조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저소득 밀집 지역의 정부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부모 669명임.

* $p < .05$.

또한 취약계층 가정에서 영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이나 문화체험 등의 경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조손가정이 가장 열악함을 알 수 있다(장명립 외, 2009).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가정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V-5-5〉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한 문화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양부모	한부모	조손	$\chi^2(df)$
도서관에 간 경험	유	35.3	32.2	8.3	4.09(2)
	무	64.7	67.8	91.7	
인형극, 뮤지컬 관람경험	유	26.1	24.5	-	4.27(2)
	무	73.9	75.5	100.0	
미술관, 박물관, 고궁방문 경험	유	24.8	15.4	-	9.12(2)*
	무	75.2	84.6	100.0	
놀이공원, 동물원에 간 경험	유	57.6	44.8	8.3	22.82(2)***
	무	42.4	55.2	91.7	

자료: 장명립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장명립 외, 2009),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임. 조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저소득 밀집 지역의 정부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부모 669명임.

* $p < .05$, *** $p < .001$.

6. 유아교육 지원체계 한계

1)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유아교육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총 12개의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으며, 4개의 체험교육원이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까지 대전, 전남, 제주 지역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할 예정이나, 부산, 경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유아교육 진흥원과 체험교육원 중 한 곳의 기관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 이용률을 살펴보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광주, 대구, 인천, 울산, 충북, 충남을 제외하고, 지역간에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부산에서 유아들의 인프라 시설 활용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규모상 전체 유아 수 대비 1일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점에서 인프라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 개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IV-6-1〉 유아교육진흥원 현황 및 이용률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전체
유아교육진흥원	1	1	1	1*	1	1	1*	1	1*	1	1	1*	12
체험 교육원	-	1	-	-	-	-	1	-	-	-	1	1	4
유아 이용률	101.6	108.0	-	-	-	-	16.6	24.9	-	-	3.4	42.7	49.5

- 주: 1) 유치원 100년 특별기획 유치원교육 박람회 유아교육진흥원 홍보 자료(2010)에서 유아이용 현황.
 2) 유아 이용률 = (이용유아/취원유아 수) x 100
 3) 광주, 대구, 인천, 울산, 충북, 충남은 2010년 9월 이후 개원으로 조사 시점에서 연간 이용률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외함.
 4) *은 2012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한 곳임(대구, 경기, 충북, 전북).
 5) 경기와 전북의 유아 이용률은 체험교육원만을 고려한 것임.
 자료: 경기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1). 2010 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를 이용하여 보완.

2) 육아정책연구소의 국책연구기관 역할 강화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6년간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 위탁을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배경에는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전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 목적은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

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2005. 12월 설립).

유아교육·보육 관련 법령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보육개발원)에 의하면,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의 2개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두 기관의 기능 및 목적의 유사·중복 문제와 운영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설립의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제118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2005.8.17)」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부설센터 방식으로 설립·운영하기로 의결되었고, 2008년 2월 보육업무의 부처이관으로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해각서 체결 자동 폐지 상태가 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정책 전력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분담 필요, 사·도 유아교육진흥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중심기관 필요, 국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능동적·전문적 지원 필요,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른 공교육·보육 통합 정책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이다.

7.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로 인한 통합적 발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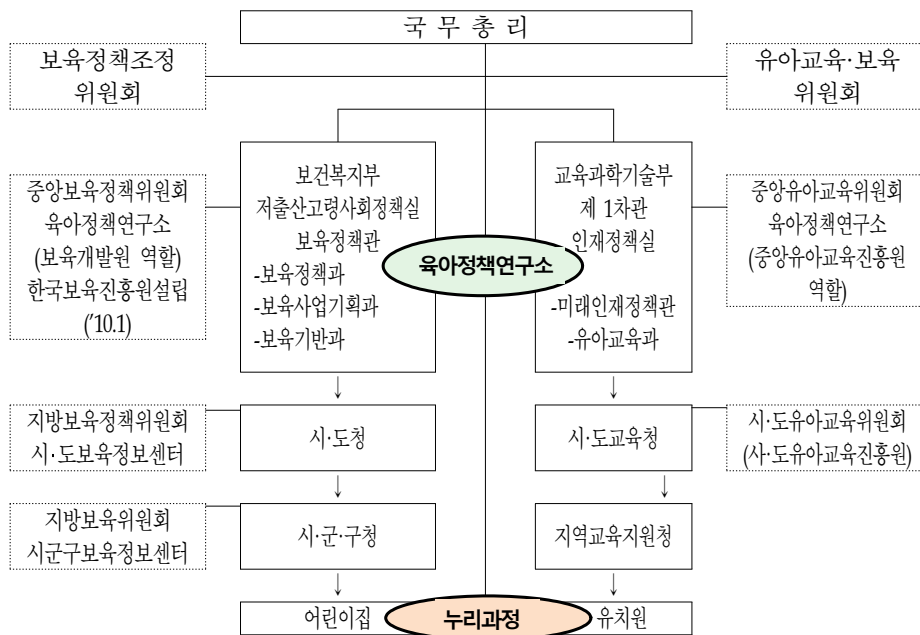
가. 이원화된 관리·전달 체계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 수준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제한 및 행·재정적 지원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동일해 지고,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두 기관이 교육내용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지고 있으나, 두 기관의 법적·행정적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 교육비와 보육료의 차이, 교사 인건비 및 근무시간 차이, 전달체계 및 관리·감독에서의

차이, 관련 지원체계의 기관 및 인력 차이 등이 있다(그림 IV-7-1 참조).

두 기관에 중복되는 동일 연령(만 3-5세) 유아 부모들에게 기관선택시에 불필요한 혼란 가중되며, 동일 정책의 다른 전달체계 및 시행방법으로 혼동(예: 유아 학비 지원 아이즐거운카드,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을 일으키고 있다. 동일 지역내 기관장들은 제한된 대상 유아 수(중복되는 만 3-5세)를 놓고 원아 모집 시에 불필요한 경쟁, 교육계와 보육계간의 갈등 관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과정 및 학비지원 재원은 통합되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3년 3-5세 누리과정 전면 확대 도입 이후, 기관 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아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 IV-7-1] 유아교육·보육 전달체계

교육·보육내용의 통합과정인 누리과정 시행 이후,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과정의 효율적 전달 및 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강화 및 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나. 기존 통합방안

1) 행정적 측면의 통합방안들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들은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어 여러 가지 통합의 안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 통합방안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은설, 조혜주, 이보라, 2011).

첫째는, 단일부처 복수기관 체제로, 교육부가 기존의 유치원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맡게 되는 형식의 통합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 유형들이 자신들의 장점이 되는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부모들의 선택권도 넓으면서,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는, 단일부처 단일기관 체제로,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분할할 수 없는 일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업무를 관할하는 형식이다.

셋째는, 연령별로 이원화 체제로, 영아에 대해서는 충실한 보호를, 그리고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보다 교육적인 성격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 모형의 다양한 방식 중 우리나라 통합 투진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해 전문가, 교사, 부모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단일부처 단일기관 체제가 가장 지지가 높았고 그 다음이 단일부처 복수기관 체제형이 선호되었다. 어느 형태의 통합이든지 어느 한 쪽의 희생이 따르는 통합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쪽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의 통합, 그리고 국가가 취업모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우선해야함에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러한 통합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형태는 단일부처 복수기관 체제로 여겨진다 (김은설 외, 2011).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IV-7-1〉 유아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행정적)

사안	추진 전략
장학제도 확대	- 보육 장학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어린이집 장학 추진
이용시간별 비용책정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과 연장/야간까지 구분하여 비용 책정
비용 지원 기준 시간	- 어린이집도 기본 시간에 한한 지원 - 유치원 지원비에 급식 포함
비용 규제	- 유치원에도 기본 시간에 대한 교육비 기준 제시
연간 일정 차이	- 두 기관 동일하게 3월 1일 시작
법규와 절차 논의	- 장관급 회담과 협의
행정업무 일원화	- 교육부에 '영유아교육국' 설립하고 그 아래 '유아교육과'와 '영유아보육과(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지원과 등)를 같이 두어야 함
운영의 복수체제 유지	- 유치원은 만 3-5세 대상의 일일 5-6시간 기본 교육과정 진행하는 반일제 + 방과후 운영기관 - 어린이집은 0-5세 대상의 전일제기관으로 취업모가정 대상 원칙으로 오전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재정업무의 일원화	- 보육관련 재정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 보육과에서 담당 - 현행 지자체와 국고에서의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영유아보육과에서 관리
국공립 교사 지위 일원화	-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는 각 지자체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이 되어야 함
보육료 지원의 일원화 및 차등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영유아의 반일제 부분에 대해서나 보육료 지원, 종일반과 연장시간은 부모부담. 즉 5세는 무상, 이하 연령은 기준보육료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혹은 무상지원)이 적용됨. -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종일반비 지원

그 밖에, 유아교육의 지원인력인 전문직 공무원 집단이 교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질적 측면의 도움과 보육이 가진 시설에 대한 행정적 관리·지원의 우월한 측면이 통합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하겠다.

2) 교사 인력측면의 통합방안들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국가수준에서 일원화된 보육·교육과정의 동일한 서비스

와 내용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장의 교직원과 수요자 학부모, 관련 기관에서는 누리과정시행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즉, 교사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어, 유아교육·보육 인력 통합의 구체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윤경, 문무경, 원종욱, 김재원(2011)은 구체적으로 양성과정과 자격체계, 보수의 측면에서 유보인력통합에의 실행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7-2〉 유아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교사 인력)

사안	추진 전략
유보자격	- 신규교사와 기존교사의 협력교사로의 자격 전환 및 취득이 안정화 되는 5년 이내에 단계적 실시
최소학력	- 4년제 대졸자
신규교사의 자격	- 통합교사자격 취득 후 새로운 통합교사 자격제도와 보수체계 및 복무기준의 적용을 받는 교사
기존 교사의 자격전환	- 1안: 기존 유보교사가 국가시험 통해 통합교사1급 자격 취득 (영유아기 유보인력의 완전통합 기초한 역할통합론) - 2안: 상호보완된 교과목과 교직이수의 통합보수교육과정 (교사의 교육·보육, 영·유아기 역할직무와 자격의 차별화와 다변화 피하는 역할구분론)
양성교과목 및 학점수	- 60학점 이상의 최소 5단계 이상의 공통과정 + 72학점의 선택교과목 확장(5년내) + 81학점의 세부전공제 도입, 확장 및 조정(10년 이후)
임금	- 통합영유아교사의 임금상향조정(초등교원대비 100%) - 신규호봉표 마련(연공과 경력에 의한 호봉표를 넘어서 자율연봉으로의 전환도 가능)
승급 및 보수교육	- 1안: 기존 교사의 자격과 경력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합교사 신규 교과시험을 자비부담으로 응시하여 승급, 단 온라인교육은 정부에서 무료지원, 오프라인교육은 자비부담. - 2안: 최종학력, 전공여부, 경력연한, 자격급, 이수학점 등을 고려한 매트릭스 구조의 보수교육과정 이수료 무검정 승급, 정부지원과 자비부담으로 보수교육이수
통합교사의 자격체계	- 2급-1급-선임-원감-원장의 최하 5단계 이상 구성
학력연한 단일화	- 고졸 학력 및 온라인, 교육원 졸업의 배출 경로의 순차적 제한, 교사 지원 인력 양성 경로로의 전환
영유아기 교사자격구분	- 영아기와 유아기 직무 순환이 원활하도록 주임교사 이후 원감과 원장의 상위급 취득이 어려운 경우, 자격 재검정 시스템으로 실질적 처우 향상

그 밖에, 상호 경력 및 자격 인정, 영유아기 교사자격구분, 학과중심제, 교사 처우 대 전문성 향상의 우선선결과제, 5세 누리과정과 인력통합의 연계 등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세부과제들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통합 영유아교사의 사회적 인식 제고, 전문성 향상, 동기화되는 보수체계와 직무, 자격체계와 양성 과정이 확립된다면 (1안의) 차후 1급 국가시험의 존속 여부와, (2안의) 보수교육의 지속적인 확대, 적용 안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8.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총 7가지 분야로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관유형별 유치원의 분포 및 이용 격차로, 유아연령에 따라 유치원 이용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공·사립이 지역에 따라 분포되는 경우가 달랐다. 공립유치원은 읍면지역에 사립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농·어촌 공립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소인수 학급으로 교육력이 저하되며 차량운행 제한으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학 전문 인력 부족 및 교사 배치의 비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검토되었다. 또한 농·어촌 사립유치원의 경우, 취원 대상아 수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 구조가 악화되고, 낮은 자본력으로 인하여 시설환경 개선이 미흡하며, 체험학습장 등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검토되었다.

둘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미흡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투자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적 재원 지원을 받는 유아 비율이 49.7%로 OECD 평균 79.7%의 62%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재정의 차이로, 지역별로 유아교육 예산 및 유아 1인당 연간 교육 예산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종일반비 지원액 비율과 교사 1인당 연수비에서도 지역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 1인당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금액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교사의 학력, 경험, 급여, 근무시간에서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자 교사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더 많았으며, 경력이 긴 교사들 역시 공립유치원에서 많이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더 적었으며, 근무시간도 약 4시간 정도 공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계층별 차이 및 지원문제로, 누리과정 정책으로 기본교육과정비용에 대한 부담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지만 특별활동 등 기타 추가비용에 대한 양육자들의 부담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의 유아 중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부모 중 84.3%가 유아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 양극화 및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본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 지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양육 취약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신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 지원과 함께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양육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섯째, 유아교육 지원체계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로, 우리나라 유아교육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최근에 개원을 앞둔 곳이 있지만, 16개 시·도별로 각 1개로 그 수는 적으며, 유아체험교육원의 경우 진흥원보다도 적다. 인프라 시설 중, 규모가 작아 1일 수용 가능 유아 인원 수가 적어 이용률이 낮아지는 곳도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시점에서 인프라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 개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 위탁을 법적 근거에 의거한 명료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곱 째,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이 시행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의 교육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있으나, 법적,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복되는 동일연령(만 3-5세) 부모들의 기관선택시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며, 동일 정책의 다른 전달체계 및 시행방법으로 혼동을 겪고 있다. 또한 제한된 대상 유아수로 인한 두 기관의 원아 모집의 경쟁 등, 교육계와 보육계간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 모형의 다양한 방식 중 우리나라 통합 추진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단

일부처 단일기관 체제가 거론되었고, 그 다음으로 단일부처 복수기관 체제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형태의 통합이든지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후 유·보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누리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보통합 관리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들간의 통합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기관들간의 역할 강화와 업무 분담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V. 유아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본 장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및 유치원에 자녀가 재원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유아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의 중요도 및 적합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전문가는 교육 현장 전문가(원장, 원감)와 학계 전문가(교수, 강사)로 구분하였고, 전문가와 학부모에게 사용된 질문지는 유아교육의 현황 및 정책 방안에 대한 중요성 여부를 4점 척도, 선다형, 자유응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의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V-1-1>, <표 V-1-2>와 같다.

<표 V-1-1> 의견조사 참여자 특성(전문가)

단위 : %, 명

구분		계(%)
전체		100.0(57)
성별	남자	3.5(2)
	여자	96.5(55)
근무기관소재지	대도시	70.2(40)
	중소도시	22.8(13)
	읍면지역	7.0(4)
직업	유치원 교원(원장/원감)	63.2(36)
	학계(교수, 강사)	36.8(21)
유치원 교원 근무기관 유형	국, 공립	58.3(21)
	사립	41.7(15)

<표 V-1-2> 의견조사 참여자 특성(학부모)

단위 : %(명)

구분		계(수)
전체		100.0(86)
자녀재원 기관유형	공립	46.5(40)
	사립	53.5(46)
거주지	대도시(광역시 이상)	44.2(38)
	중소도시	39.5(34)
	읍면 지역	16.3(14)

(표 V-1-2 계속)

구분		계(수)
전체		100.0(86)
학력	고졸	4.7(4)
	전문대졸	16.3(14)
	4년제 대졸	62.8(54)
	대학원 이상	16.3(14)
직업	상업·자영업	1.2(1)
	공장근로자	1.2(1)
	사무직근로자	52.3(45)
	서비스직근로자	8.1(7)
	전문직종사자	20.9(18)
	기타	16.3(14)
가구소득	100~199만원	7.0(6)
	200~299만원	20.9(18)
	300~399만원	24.4(21)
	400~499만원	26.7(23)
	500만원 이상	20.9(18)

1. 유아교육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인식

전문가에게 총 15개의 유아교육 정책 과제(표 V-1-4 참조)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②의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에 22.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①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에 21.1%, ③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와 ④의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방향에 각각 12.3%로 응답되었다(표 V-1-3 참조).

전문가의 직업과 종사하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정책 중요도를 다르게 응답하였는데, 유치원 교원의 경우 ①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31.4%)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학계전문가의 경우 ②의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33.3%)를 1순위로 응답하였다. 국공립 유치원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한 ①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52.4%)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사립 유치원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경우 ②의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33.3%)를 1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V-1-3〉 유아교육 정책 과제별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전체	21.1	22.8	12.3	12.3	8.8	8.8	7.0	3.5	3.5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22.5	20.0	10.0	10.0	10.0	7.5	5.0	5.0	100(40)
	중소도시	15.4	38.5	15.4	15.4	7.7	0.0	7.7	0.0	100(13)
	읍면지역	25.0	0.0	25.0	25.0	0.0	25.0	0.0	0.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31.4	14.3	14.3	11.4	8.6	2.9	11.4	2.9	100(36)
	학계전문가	4.8	33.3	9.5	14.3	9.5	19.0	0.0	4.8	100(21)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52.4	4.8	23.8	4.8	4.8	0.0	0.0	4.8	100(21)
	사립	0.0	33.3	0.0	20.0	13.3	0.0	26.7	6.7	100(15)

주: ①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②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③ 취학 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④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⑤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제고, ⑥ 유아교육·보육의 재구조화 지향, ⑦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⑧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⑨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15가지 유아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에 이어, 유아교육 정책 과제 별 추진시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표 V-1-4>와 같다. 추진시기에 대하여 전문가는 차기정부 추진 과제(5년 이내)와 지속 추진 과제(10년 이내) 중 하나를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차기정부 추진 과제(5년 이내)로 8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정책 과제는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로 나타났다.

차기정부 추진 과제(5년 이내)로 60~79%의 응답률을 보인 정책 과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조기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유아교육 지원센터 및 체험 시설 확대’, ‘유아교육·보육의 재구조화 지향’으로 나타났으며, 60% 미만의 응답률을 보인 정책 과제는 ‘기본 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로 응답되었다.

<표 V-1-4> 정책 과제별 추진시기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

발전 방향	정책 과제	추진시기	
		차기정부 추진 과제 (5년 이내)	지속 추진과제 (10년 이내)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1)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86.0	14.0
	2)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26.3	73.7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관리· 지원강화	1)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66.7	33.3
	2)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68.4	31.6
	3)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80.7	19.3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1)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94.7	5.3
	2)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93.0	7.0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조기 교육격차 해소	63.2	36.8
	2)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68.4	31.6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54.4	45.6
	2)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 시설 확대	70.2	29.8
	3)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50.9	49.1
	4)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86.0	14.0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1)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89.5	10.5
	2) 유아교육·보육의 재구조화 지향	68.4	31.6

2. 유아학비 지원 정책

가.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표 V-2-1>은 정부의 누리과정 관련 유아학비 지원 금액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그 결과, 전문가의 68.4%는 현 정부의 지원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1.6%는 유아학비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유아학비 지원금 증액에 관한 문항에서는 학계 전문가 및 사립 유치원

교원들이 유아학비 지원금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2-1〉 누리과정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정부 지원 계획 유지	유아학비 증액 필요	계(수)
전체		68.4	31.6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70.0	30.0	100(40)
	중소도시	61.5	38.5	100(13)
	읍면지역	75.0	2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74.3	25.7	100((36)
	학계전문가	57.1	42.9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81.0	19.0	100((21)
	사립	66.7	33.3	100((15)

이어서 학부모에게 동일한 의견을 물은 결과, 45.3%가 정부의 지원 계획 유지, 54.7%는 유아학비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에 비해 정부 지원 계획 유지에 대한 응답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표 V-2-2 참조). 학부모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 계획 유지에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 정부 지원 계획 유지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 계획 유지 응답률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표 V-2-2〉 누리과정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정부 지원 계획 유지	유아학비 증액 필요	계(수)
전체		45.3	54.7	100(86)
학력	고졸	75.0	25.0	100(4)
	전문대졸	57.1	42.9	100(14)
	4년제졸	42.60	57.4	100(54)
	대학원이상	35.7	64.3	100(14)
가구 소득	100~199만원	50.0	50.0	100(6)
	200~299만원	38.9	61.1	100(18)
	300~399만원	28.6	71.4	100(21)
	400~499만원	47.8	52.2	100(23)
	500만원 이상	66.7	33.3	100(18)
자녀재원 기관유형	국·공립	65.0	35.0	100(40)
	사립	28.3	71.7	100(46)

유아학비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월 적정 유아학비 금액에 대한 추가 의견을 물은 결과, 월 30만원 미만에 33.3%, 월 30~40만원에 33.3%로 동일하게 응답되었다. 그러나 유치원 교원의 경우 30~40만원(44.4%)이 30만원 미만(33.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 중인 경우 3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사립 유치원에 근무 중인 경우 30~40만원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표 V-2-3 참조).

〈표 V-2-3〉 적정 유아학비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30만원 미만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이상	계(수)
전체		33.3	33.3	22.2	11.1	100(18)
근무 소재지	대도시	25.0	41.7	16.7	16.7	100(12)
	중소도시	60.0	20.0	20.0	0.0	100(5)
	읍면지역	0.0	0.0	100.0	0.0	100(1)
직업	유치원 교원	33.3	44.4	11.1	11.1	100(9)
	학계전문가	33.3	22.2	33.3	11.1	100(9)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50.0	25.0	0.0	25.0	100(4)
	사립	20.0	60.0	20.0	0.0	100(5)

유아학비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적정 유아학비 금액에 대한 추가 의견을 물은 결과, 월 30~40만원에 44.7%, 월 40~50만원에 27.7%로 응답하였다. 이는 유아교육 전문가보다 적정 유아학비 금액의 기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V-2-4 참조).

〈표 V-2-4〉 적정 유아학비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30만원 미만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이상	계(수)
전체		10.6	44.7	27.7	17.0	100(47)
학력	고졸	0.0	0.0	100.0	0.0	100(1)
	전문대졸	16.7	66.7	16.7	0.0	100(6)
	4년제졸	9.7	38.7	29.0	22.6	100(31)
	대학원이상	11.1	55.6	22.2	11.1	100(9)
가구 소득	100~199만원	0.0	66.7	33.3	0.0	100(3)
	200~299만원	27.3	45.5	9.1	18.2	100(11)
	300~399만원	6.7	53.3	26.7	13.3	100(15)
	400~499만원	8.3	25.0	41.7	25.0	100(12)
	500만원이상	0.0	50.0	33.3	16.7	100(6)

(표 V-2-4 계속)

구분		30만원 미만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이상	계(수)
자녀재원	국·공립	14.3	50.0	21.4	14.3	100(14)
기관유형	사립	9.1	42.4	30.3	18.2	100(33)

<표 V-2-5>는 가구소득 대비 방과후 과정을 포함한 적정 유아학비(자녀 1명 기준) 부담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로, 전문가의 경우 가구 소득의 10% 이내(43.9%)를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가구 소득의 5% 이내(35.1%)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가구 소득의 5%이내의 응답비율(50%)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유치원에 근무 중인 유치원 교원의 경우 5~20%까지 고르게 응답된 반면,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원의 경우 가구 소득의 10%이내(52.4%)와 5% 이내(38.1%)에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표 V-2-5> 가구소득 대비 적정 유아학비(방과후 포함)부담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가구 소득의 20%이내	가구 소득의 15%이내	가구 소득의 10%이내	가구 소득의 5%이내	계(수)
전체		12.3	8.8	43.9	35.1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15.0	5.0	45.0	35.0	100(40)
	중소도시	7.7	23.1	38.5	30.8	100(13)
	읍면지역	0.0	0.0	50.0	50.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14.3	8.6	42.9	34.3	100(36)
	학계전문가	9.5	9.5	47.6	33.3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9.5	0.0	52.4	38.1	100(21)
	사립	20.0	20.0	26.7	33.3	100(15)

가구소득 대비 적정 유아학비 비율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는 가구 소득의 10%이내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경우 가구 소득의 5%이내(40.7%)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학부모는 가구 소득의 10% 이내(42.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경우 가구 소득의 5% 이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의 경우, 200만원 이상인 학부모들은 가구 소득의 10%와 5%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V-2-6〉 가구소득 대비 걱정 유아학비(방과후 포함)부담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가구 소득의 20%이내	가구 소득의 15%이내	가구 소득의 10%이내	가구 소득의 5%이내	계(수)
전체		11.6	10.5	37.2	40.7	100(86)
학력	고졸	0.0	0.0	25.0	75.0	100(4)
	전문대졸	7.1	7.1	35.7	50.0	100(14)
	4년제졸	13.0	9.3	37.0	40.7	100(54)
	대학원이상	14.3	21.4	42.9	21.4	100(14)
가구 소득	100~199만원	33.3	16.7	16.7	33.3	100(6)
	200~299만원	11.1	5.6	50.0	33.3	100(18)
	300~399만원	9.5	9.5	23.8	57.1	100(21)
	400~499만원	8.7	13.0	47.8	30.4	100(23)
	500만원이상	11.1	11.1	33.3	44.4	100(18)
자녀재원 기관유형	국·공립 사립	7.5 15.2	15.0 6.5	37.5 37.0	40.0 41.3	100(40) 100(46)

나. 유아학비 적용 범위에 대한 인식

유아학비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기본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에게 물은 결과,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및 방과 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59.6%)이 적절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본 누리과정 차등지원 및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21.1%),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및 방과후 과정 무상지원(19.3%) 순으로 나타났다(표 V-2-7 참조).

〈표 V-2-7〉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추가비용지원에 대한 의견(전문가)

구분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기본 누리과정 차등지원 +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후 과정 무상지원	계(수)
전체		59.6	21.1	19.3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62.5	22.5	15.0	100(40)
	중소도시	53.8	15.4	30.8	100(13)
	읍면지역	50.0	25.0	2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57.1	22.9	20.0	100(36)
	학계전문가	61.9	19.0	19.0	100(21)

(표 V-2-7 계속)

구분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기본 누리과정 차등지원 +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후 과정 무상지원	계(수)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57.1	23.8	19.0	100(21)
	사립	60.0	20.0	20.0	100(15)

유아학비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기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에 물은 결과, 전문가와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표 V-2-8 참조). 즉,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및 방과 후 과정 소득별 차등 지원(58.1%)이 적절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및 방과후 과정 무상지원(26.7%), 기본 누리과정 차등지원 및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8〉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추가비용지원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기본 누리과정 차등지원 + 방과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후 과정 무상지원	계(수)
전체		58.1	15.1	26.7	100(86)
학력	고졸	75.0	25.0	0.0	100(4)
	전문대졸	64.3	14.3	21.4	100(14)
	4년제졸	55.6	16.7	27.8	100(54)
	대학원이상	57.1	7.1	35.7	100(14)
가구 소득	100~199만원	66.7	16.7	16.7	100(6)
	200~299만원	61.1	11.1	27.8	100(18)
	300~399만원	52.4	14.3	33.3	100(21)
	400~499만원	60.9	17.4	21.7	100(23)
	500만원이상	55.6	16.7	27.8	100(18)
자녀재원 기관유형	국·공립	57.5	17.5	25.0	100(40)
	사립	58.7	13.0	28.3	100(46)

다. 유아학비 차등지원에 대한 인식

<표 V-2-9>는 방과후 과정 차등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가장 적당한 변인에 대한 결과로, 전문가의 경우, 가구소득이 94.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자녀수는 3.5%, 부모의 취업 여부는 1.8%로 매우 낮게 응답되었다. 학계 전문가와 유치원 교원 모두 가구소득이 가장 적절한 기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유치원 교원은 자녀수(5.7%)를 학계 전문가는 부모 취업 여부(4.8%)를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2-9> 방과 후 과정 차등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가구 소득	자녀 수	부모 취업 여부	계(수)
전체		94.7	3.5	1.8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97.5	2.5	0.0	100(40)
	중소도시	84.6	7.7	7.7	100(13)
	읍면지역	100.0	0.0	0.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94.3	5.7	0.0	100(36)
	학계전문가	95.2	0.0	4.8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100.0	0.0	0.0	100(21)
	사립	86.7	13.3	0.0	100(15)

유아학비 차등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가장 적당한 변인을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66.3%가 가구소득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자녀수에 19.8%, 부모 취업 여부에 11.6%로 전문가들 대비 두 변인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V-2-10 참조).

<표 V-2-10> 유아학비 차등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가구 소득	자녀 수	부모 취업 여부	기타	계(수)
전체		66.3	11.6	19.8	2.3	100(86)
학력	고졸	75.0	0.0	25.0	0.0	100(4)
	전문대졸	64.3	7.1	28.6	0.0	100(14)
	4년제졸	72.2	7.4	18.5	1.9	100(54)
	대학원이상	42.9	35.7	14.3	7.1	100(14)

(표 V-2-10 계속)

구분		가구 소득	자녀 수	부모 취업 여부	기타	계(수)
가구 소득	100~199만원	66.7	0.0	33.3	0.0	100(6)
	200~299만원	66.7	11.1	16.7	5.6	100(18)
	300~399만원	81.0	9.5	9.5	0.0	100(21)
	400~499만원	69.6	13.0	17.4	0.0	100(23)
	500만원이상	44.4	16.7	33.3	5.6	100(18)
자녀재원 기관유형	국·공립	65.0	10.0	22.5	2.5	100(40)
	사립	67.4	13.0	17.4	2.2	100(46)

3. 유아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가. 국·공립유치원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현재 22.3%인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아 분담률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V-3-1>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8.4%가 '50%' 또는 '50%초과'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유형별로는 국·공립은 '50%초과'(66.7%)가, 사립은 '30%'(66.7%)가 적정한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아 분담률이라고 응답하는 차이를 보였으며, 근무소재지별로는 중소도시 응답자는 '30%'(38.5%)를, 도시지역(대도시 70.0%, 중소도시 56.9%)과 읍면지역(100.0%) 응답자는 '50%' 또는 그 이상을 이상적인 규모의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아 분담률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현장과 학계전문가 집단의 의견 모두 '50%' 또는 그 이상의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아 분담률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표 V-3-1> 국·공립유치원 적정 취원아 분담율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30%	40%	50%	50%초과	계(수)
전체		21.1	10.5	33.3	35.1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17.5	12.5	35.0	35.0	100(40)
	중소도시	38.5	7.7	30.8	23.1	100(13)
	읍면지역	0.0	0.0	25.0	7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31.4	2.9	22.9	42.9	100(36)
	학계전문가	4.8	19.0	52.4	23.8	100(21)

(표 V-3-1계속)

구분		30%	40%	50%	50%초과	계(수)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4.8	0.0	28.6	66.7	100(21)
	사립	66.7	13.3	13.3	6.7	100(15)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육성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아교육 수요 신규 발생지역에 우선 설립에 찬성하였고(91.2%), 중소도시 응답자의 23.1%가 반대하였다. 취약계층 대상 교육서비스 우선 제공 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8.2%가 찬성하였다. 읍면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의 단설 및 3학급 이상으로의 확대 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82.5%가 찬성하였지만, 사립유치원 전문가는 66.7%로 국공립 유치원 전문가의 95.2%보다 비교적 낮은 비율로 찬성하였다(표 V-3-2 참조).

<표 V-3-2>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육성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 수요 신규발생지역(혁신도 시, 택지개발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 역 등에 우선 설립		취약계층 교육서비스(저소득, 다문화 및 장애아 협력교육 등) 우선 제공		읍면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시설(단설 및 3학급이상으로)로 확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91.2	8.8	98.2	1.8	82.5	17.5
근무 소재지	대도시	95.0	5.0	97.5	2.5	82.5	17.5
	중소도시	76.9	23.1	100.0	0.0	76.9	23.1
	읍면지역	100.0	0.0	100.0	0.0	100.0	0.0
직업	유치원 교원	91.4	8.6	97.1	2.9	82.9	17.1
	학계전문가	90.5	9.5	100.0	0.0	81.0	19.0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95.2	4.8	95.2	4.8	95.2	4.8
	사립	86.7	13.3	100.0	0.0	66.7	33.3

나.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표 V-3-3>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정책 관련 4개 하위 문항을 통한 전문가 의견 조사의 결과로, 먼저 '유치원 평가결과를 국가재정지원과 연계해야한다'는 문항에서, 전문가 전체 응답자의 86.0%가 찬성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전문가의 20.0%와 그 중 사립유치원 전문가의 40.0%가 반대하였다.

이 문항은 학부모에게도 의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대부분 찬성하였고(90.7%)으나 낮은 학력일수록 비교적 낮은 찬성율을 보였다(고졸 75.0%, 전문대졸 85.7%). 두 번째, '정보공시제, 운영위원회, 재무회계규칙 등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이 있어야한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7%가 찬성하였으나, 읍면지역 응답자의 절반, 교육현장전문가의 20.0%, 국·공립유치원 전문가의 23.8%가 반대하였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인 '교사인건비의 확대지원'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98.2%가 찬성하고 있으나 읍면지역 응답자의 25.0%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V-3-3〉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평가결과를 국가재정지원과 연계		공공성(정보공시제, 운영위원회, 재무회계규칙 등) 확보된 경우 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		교사인건비 확대지원		유치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 제도 도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86.0	14.0	87.7	12.3	93.0	7.0	98.2	1.8	
근무 소채지	대도시	82.5	17.5	92.5	7.5	92.5	7.5	100.0	0.0
	중소도시	92.3	7.7	84.6	15.4	100.0	0.0	100.0	0.0
	읍면지역	100.0	0.0	50.0	50.0	75.0	25.0	75.0	25.0
직업	유치원 교원	80.0	20.0	80.0	20.0	88.6	11.4	97.1	2.9
	학계전문가	95.2	4.8	100.0	0.0	100.0	0.0	100.0	0.0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95.2	4.8	76.2	23.8	81.0	19.0	95.2	4.8
	사립	60.0	40.0	86.7	13.3	100.0	0.0	100.0	0.0

〈표 V-3-4〉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평가결과를 국가재정지원과 연계		계(수)	
	찬성	반대		
전체	90.7	9.3	100(86)	
자녀재원기 관유형	국·공립	97.5	2.5	100(40)
	사립	84.8	15.2	100(46)

(표 V-3-4 계속)

구분		유치원 평가결과를 국가재정지원과 연계		계(수)
		찬성	반대	
전체		90.7	9.3	100(86)
학력	고졸	75.0	25.0	100(4)
	전문대졸	85.7	14.3	100(14)
	4년제졸	90.7	9.3	100(54)
	대학원이상	100.0	0.0	100(14)

다.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에 대한 의견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지원 강화 방안은 두 가지 문항으로 의견 조사되었다(표 V-3-5 참조). ‘우선, 유치원 평가의 지속적 추진, 결과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대체로 찬성(94.7%)을 보이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전문가의 20.0%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 정책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결과는 학부모의 대부분(98.2%)이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V-3-6 참조). 다른 항목인 ‘유치원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컨설턴트 표준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의 체계화’ 또한 응답자의 98.2%가 찬성하고 있다.

〈표 V-3-5〉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지원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평가의 지속적 추진, 결과 공개 및 활용		유치원 컨설팅 활성화 위한 컨설턴트 표준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체계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94.7	5.3	98.2	1.8
근무 소재지	대도시	97.5	2.5	100.0	0.0
	중소도시	84.6	15.4	92.3	7.7
	읍면지역	100.0	0.0	100.0	0.0
직업	유치원 교원	91.4	8.6	100.0	0.0
	학계전문가	100.0	0.0	95.2	4.8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100.0	0.0	100.0	0.0
	사립	80.0	20.0	100.0	0.0

〈표 V-3-6〉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지원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평가의 지속적 추진, 결과 공개 및 활용		계(수)
		찬성	반대	
전체		98.8	1.2	100(86)
학력	고졸	100.0	0.0	100(4)
	전문대졸	100.0	0.0	100(14)
	4년제졸	98.1	1.9	100(54)
	대학원이상	100.0	0.0	100(14)
자녀재원기 관유형	국·공립	100.0	0.0	100(40)
	사립	97.8	2.2	100(46)

4. 유아교육 질적 수준 개선 방법

가. 교사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일환인,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는 세 가지 문항에 걸쳐 전문가와 학부모 의견이 조사되었다. 첫 번째 문항인 교사 지원 정책 중에서 '1일 5시간은 수업 및 유아지도, 3시간은 수업준비시간으로 한다' 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유치원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고한다' 를 전체 응답자의 52.6%가 각각 가장 우선 항목으로 꼽았다. 교육현장전문가와 국공립유치원 전문가는 '교사가 수업에 충실하도록 행정업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를 2순위 우선 항목으로 꼽았다(표 V-4-1 참조).

〈표 V-4-1〉 교사 지원 정책 우선순위(1+2순위)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52.6	52.6	38.6	28.1	15.8	12.3
근무 소재지	대도시	45.0	50.0	42.5	32.5	17.5	12.5
	중소도시	61.5	61.5	38.5	15.4	15.4	7.7
	읍면지역	100.0	50.0	0.0	25.0	0.0	25.0
직업	유치원교원	48.6	37.1	42.9	37.1	22.9	11.4
	학계전문가	57.1	81.0	28.6	14.3	4.8	14.3
유치원 근무기관유형	국·공립	57.1	23.8	47.6	47.6	19.0	4.8
	사립	40.0	53.3	40.0	20.0	26.7	20.0

주: ① 1일 5시간은 수업 및 유아지도, 3시간은 수업준비시간으로 한다, ②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유치원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고한다, ③ 교사가 수업에 충실하도록 행정업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④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⑤ 유아교사의 복지(안식년제) 수준이 초등과 동일해져야 한다, ⑥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참여를 위해 대체교사 및 연수비를 지원해야한다.

두 번째 항목인 누리과정 담당교사 양성기간에 대한 의견 중 '초등교사 수준인 4년제로 제고해야 한다'에서는 전문가는 전체 응답자의 89.5%가 학부모는 86.0%가 찬성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전문가의 20.0%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유아교육교사자격으로 일원화 해야한다'에서는 전문가의 91.4%가 찬성하였고, '현행 유아교사 및 보육교사 각각의 자격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에서는 전체 응답자 과반수가 (68.2%)가 반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전문가 과반수(66.3%)는 찬성하고 있다(표 V-4-2 참조).

〈표 V-4-2〉 누리과정 담당교사 양성기간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전체		초등교사 수준인 4년제로 제고		유아교육교사자격으로 일원화		현행의 유아교사, 보육교사 각각의 자격에 따라 근무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89.5	10.5	91.2	8.8	36.8	63.2
근무 소재지	대도시	90.0	10.0	90.0	10.0	37.5	62.5
	중소도시	84.6	15.4	92.3	7.7	46.2	53.8
	읍면지역	100.0	0.0	100.0	0.0	0.0	100.0
직업	유치원 교원	91.4	8.6	91.4	8.6	40.0	60.0
	학계전문가	85.7	14.3	90.5	9.5	28.6	71.4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100.0	0.0	95.2	4.8	19.0	76.2
	사립	80.0	20.0	86.7	13.3	66.3	33.3

〈표 V-4-3〉 누리과정 담당교사 양성기간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초등교사 수준인 4년제로 제고		계(수)
		찬성	반대	
전체		86.0	14.0	100(86)
학력	고졸	100.0	0.0	100(4)
	전문대졸	92.9	7.1	100(14)
	4년제졸	83.3	16.7	100(54)
	대학원이상	85.7	14.3	100(14)

(표 V-4-3 계속)

구분		초등교사 수준인 4년제로 제고		계(수)
		찬성	반대	
전체		86.0	14.0	100(86)
자녀재원 기관유형	국·공립	87.5	12.5	100(40)
	사립	84.8	15.2	100(46)

세 번째 항목인 사립유치원 교사의 적정 급여수준에 대하여 전문가의 49.1%가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일 것’에 찬성하였으며 이 중 사립유치원 전문가의 80.0%로 가장 큰 선호를 보였다.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의 90%가 전체 응답자들에게 두 번째로 선호되었으며(24.6%), 유형별로는 읍면지역 응답자의 가장 많은 선호(50.0%), 그리고 ‘국공립교사와 동일한 수준’(42.9%)과 함께 학계전문가의 가장 많은 선호(42.9%)를 받았다(표 V-4-4 참조).

〈표 V-4-4〉 사립유치원 교사의 적정 급여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국공립유치 원의 70%	국공립유치 원의 80%	국공립유치 원의 90%	국공립유치 원과 동일	계(수)
전체		7.0	19.3	24.6	49.1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7.5	10.0	27.5	55.0	100(40)
	중소도시	7.7	46.2	7.7	38.5	100(13)
	읍면지역	0.0	25.0	50.0	2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11.4	22.9	14.3	51.4	100(36)
	학계전문가	0.0	14.3	42.9	42.9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19.0	28.6	19.0	33.3	100(21)
	사립	0.0	13.3	6.7	80.0	100(15)

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 대한 의견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에 이어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일환인, ‘누리과정(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와 관련된 네 가지 문항에 대해 전문가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1%가 ‘누리과정 심화연수’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누리과정 기본 매뉴얼 개발(24.6%), 누리과정 표준모형 개발·시범유치원 운영

(15.8%), 초등 교과 연계 지침서 보급(3.5%) 순으로 응답되었다. 유치원 교원의 경우 누리과정 기본 매뉴얼 개발(24.6%)에 대해 학계전문가(9.5%) 보다 더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4-5 참조).

〈표 V-4-5〉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심화연수	누리과정 기본매뉴얼 개발	누리과정표준모형개발·시범유치원 운영	초등교과 연계 지침서 보급	계(수)
전체		56.1	24.6	15.8	3.5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55.0	22.5	17.5	5.0	100(40)
	중소도시	53.8	38.5	7.7	0.0	100(13)
	읍면지역	75.0	0.0	25.0	0.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48.6	34.3	11.4	5.7	100(36)
	학계전문가	66.7	9.5	23.8	0.0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33.3	42.9	14.3	9.5	100(21)
	사립	73.3	20.0	6.7	0.0	100(15)

이어서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일환인, ‘질적 수준 관리·감독 및 지원체계’ 과 관련된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1%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청 장학지도 필요’ 문항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조금 적은 40.4%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 적용 할 누리과정 운영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이 시급하다고 대답하였다. ‘유아교육·보육이 함께 참여하는 누리과정 컨설팅지원단(가칭) 구성 및 운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17.5%로 가장 적었다.

유치원 교원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적용 할 누리과정 운영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57.1%)’을, 학계 전문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 적용 할 누리과정 운영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46.7%)’을 더 시급한 과제로 선택하였다(표 V-4-6 참조).

〈표 V-4-6〉 누리과정 질관리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청 장학지도 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적용할 누리과정운영평가 지표개발·활용	유아교육·보육 함께 참여하는 누리과정 컨설팅지원단 구성 운영	계(수)
전체		42.1	40.4	17.5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42.5	42.5	15.0	100(40)
	중소도시	30.8	46.2	23.1	100(13)
	읍면지역	75.0	0.0	2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42.9	40.0	17.1	100(36)
	학계전문가	42.9	42.9	14.3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57.1	33.3	9.5	100(21)
	사립	20.0	46.7	33.3	100(15)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일환인, '방과 후 과정 관리'와 관련된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75.4%가 '방과 후 과정 기본 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였다. 그 외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를 통한 민간프로그램의 선정 및 질 관리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7.5%이며, '국가에서 개발 및 보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한 전문가는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V-47 참조).

〈표 V-4-7〉 방과 후 과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방과후특성화프로 그램추천제민간프 로그램의선정및질 관리체제구축	국가에서 개발·보급하는 특성화프로그램 더 많이 제공	계(수)
전체		75.4	17.5	7.0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82.5	10.0	7.5	100(40)
	중소도시	61.5	38.5	0.0	100(13)
	읍면지역	50.0	25.0	2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74.3	22.9	2.9	100(36)
	학계전문가	76.2	9.5	14.3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76.2	19.0	4.8	100(21)
	사립	73.3	26.7	0.0	100(15)

5. 조기 교육격차 관련 지원

가. 조기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 조기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는 두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관련 전문가의 진단 및 지원으로 조기발달지연 유아 지원단(가칭)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87.7%가 찬성하였으나, 읍면지역 전문가의 절반, 국·공립현장전문가의 23.8%가 반대하였다. 둘째, 조기발달지연아의 욕구에 맞추어 개별 지도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전체 응답자의 77.2%가 찬성하고 있으나, 읍면지역 전문가의 75.0%, 교육현장전문가의 34.3%, 그리고 이 중 국·공립현장전문가의 52.4%가 상당한 비중으로 반대하고 있다(표 V-5-1 참조).

〈표 V-5-1〉 조기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관련 전문가의 진단, 지원으로 조기발달지연 유아 지원단 (가칭) 필요		조기 발달 지연아를 맞춤형으로 개별지도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의 지속적 추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87.7	12.3	77.2	22.8
근무 소재지	대도시	92.5	7.5	80.0	20.0
	중소도시	84.6	15.4	84.6	15.4
	읍면지역	50.0	50.0	25.0	75.0
직업	유치원 교원	82.9	17.1	65.7	34.3
	학계전문가	95.2	4.8	95.2	4.8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76.2	23.8	47.6	52.4
	사립	93.3	6.7	93.3	6.7

나.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초기 출발선 평등보장의 일환인 취약계층가정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세 문항으로 조사되었고 그 결과는 <표 V-5-2>와 같다. 첫 번째,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안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63.2%가 찬성하였으나, 읍면지역 응답자의 절반,

교육현장전문가의 54.3%, 국·공립(57.1%) 및 사립(46.7%) 교육현장전문가들은 반대하였다. 두 번째, 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종합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찬성하였다(98.2%). 세 번째, 취약계층 가정유형별(저소득, 농어촌,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각기 다른 양육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98.2%가 찬성하였다.

〈표 V-5-2〉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종합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가정유형별(저소득, 농어촌,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각기 다른 양육여건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63.2	36.8	98.2	1.8	98.2	1.8
근무 소재지	대도시	65.0	35.0	97.5	2.5	97.5	2.5
	중소도시	61.5	38.5	100.0	0.0	100.0	0.0
	읍면지역	50.0	50.0	100.0	0.0	100.0	0.0
직업	유치원 교원	45.7	54.3	100.0	0.0	100.0	0.0
	학계 전문가	90.5	9.5	95.2	4.8	95.2	4.8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42.9	57.1	100.0	0.0	100.0	0.0
	사립	53.3	46.7	100.0	0.0	100.0	0.0

6.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육아정책연구소 및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의견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안에 대해 응답한 전체 전문가의 80.7%가 찬성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읍면지역 응답자 각각의 20.0%와 25.0%, 학계전문가의 23.8%, 사립유치원 전문가의 20.0%가 반대하고 있다.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인, '지역교육청별 지역 유아교육 지원센터 설치로 교사 연수 및 체험시설 공간 마련'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96.5%)(표 V-6-1 참조).

〈표 V-6-1〉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지역교육청별 지역유아교육 지원센터 설치로 교사연수 및 체험시설 공간 제공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80.7	19.3	96.5	3.5
근무 소재지	대도시	80.0	20.0	100.0	0.0
	중소도시	84.6	15.4	84.6	15.4
	읍면지역	75.0	25.0	100.0	0.0
직업	유치원 교원	82.9	17.1	97.1	2.9
	학계전문가	76.2	23.8	95.2	4.8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85.7	14.3	95.2	4.8
	사립	80.0	20.0	100.0	0.0

나.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인,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표 V-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역 유아교육 지원센터에서 유아와 부모가 함께 해야한다는 항목 선택이 가장 많았고 그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0.9%,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응답자 각각이 57.5%와 50.0%, 교육현장과 학계 전문가 각각이 45.7%와 57.1%,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 57.1%가 선택하였다. ‘유아의 다양한 놀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교육기부사업’이 전체 응답자등 중 두 번째 시급한 과제로 선택(26.3%)되었지만, 중소도시 응답자(54%)와 사립유치원 전문가(40%)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대도시 응답자(17.5%)와 학계전문가(19.0%)들에게는 가장 덜 시급한 과제로 선택되었다. ‘유치원에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활동을 의무화한다’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가 가장 덜 시급한 과제로 선택(22.8%)하였으나 대도시 응답자(25.0%)와 학계전문가들(23.8%)에게는 두 번째로 시급한 과제로 선택되었다.

〈표 V-6-2〉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에서 유아와 부모가 함	유아의 다양한 놀이지원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교육기부사업	유치원에서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을 의무화함	계(수)
전체		50.9	26.3	22.8	100(57)
근무소재지	대도시	57.5	17.5	25.0	100(40)
	중소도시	30.8	53.8	15.4	100(13)
	읍면지역	50.0	25.0	2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45.7	31.4	22.9	100(36)
	학계전문가	57.1	19.0	23.8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57.1	23.8	19.0	100(21)
	사립	33.3	40.0	26.7	100(15)

다. 부모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

<표 V-6-3>과 <표 V-6-4>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인, '대국민 홍보 및 부모역량 강화'에 대한 전문가 및 학부모 의견 조사로 세 항목에 걸쳐 조사되었다. 첫째, '올바른 조기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바른 인성형성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에 전문가(98.2%)와 학부모(98.8%)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둘째,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격 인증제(가칭)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7.2%와 학부모의 89.5%가 찬성하였으나, 사립유치원 전문가는 53.3%만 찬성하였다. 셋째,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기능 강화'에 대해 전문가(98.2%)와 학부모(96.5%) 대다수가 찬성하였으나, 고졸학력의 학부모의 25.0%는 반대하였다.

〈표 V-6-3〉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올바른 조기 유아교육과 바른 인성형성 중요성을 대중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격 인증제(가칭) 도입		유아교육홍보 및 지원 위한 EBS 교육방송의 기능 강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98.2	1.8	77.2	22.8	98.2	1.8
근무 소재지	대도시	97.5	2.5	77.5	22.5	97.5	2.5
	중소도시	15.4	0.0	76.9	23.1	100.0	0.0
	읍면지역	100.0	0.0	75.0	25.0	100.0	0.0
직업	유치원 교원	100.0	0.0	74.3	25.7	100.0	0.0
	학계전문가	95.2	4.8	81.0	19.0	95.2	4.8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100.0	0.0	90.5	9.5	100.0	0.0
	사립	100.0	0.0	53.3	46.7	100.0	0.0

〈표 V-6-4〉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올바른 조기 유아교육과 바른 인성형성 중요성을 대중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격 인증제(가칭) 도입		유아교육홍보 및 지원 위한 EBS 교육방송의 기능 강화		계(수)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98.8	1.2	89.5	10.5	96.5	3.5	100(86)
학력	고졸	100.0	0.0	100.0	0.0	75.0	25.0	100(4)
	전문대졸	100.0	0.0	100.0	0.0	100.0	0.0	100(14)
	4년제졸	98.1	1.9	83.3	16.7	96.3	3.7	100(54)
	대학원이상	100.0	0.0	100.0	0.0	100.0	0.0	100(14)
자녀재원 기관유형	국·공립	97.5	2.5	87.5	12.5	92.5	7.5	100(40)
	사립	100.0	0.0	91.3	8.7	100.0	0.0	100(46)

7.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가. 취학전 교육·보육의 체계화에 대한 의견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정책의 일환인,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단계별 체계화'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은 두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다. 우선, '만 0-5세 유아교육·보육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고'라고 시작되는 문장을 완성시키는 문항에서는 이어지는 문장 예를 두 가지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표 V-7-1>과 <표 V-7-2>와 같다. '만 0-2세 과정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두 단계로 체계화한다'로 선택한 전문가는 전체의 82.5%이고 학부모는 70.9%로 나타났다. 단 학부모는 학력에 따라 의견을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만 0-5세 교육·보육 협력 일원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고졸 50.0%, 전문대졸 42.9%, 4년제졸 27.8%, 대학원이상 14.3%).

<표 V-7-1> 취학전 연령 단계별 체계화 방식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만0-2세 과정과 만3-5세 누리과정 두 단계로 체계화	만0-5세 교육·보육 협력 일원화	계(수)
전체		82.5	17.5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80.0	20.0	100(40)
	중소도시	92.3	7.7	100(13)
	읍면지역	75.0	25.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82.9	17.1	100(36)
	학계전문가	81.0	19.0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90.5	9.5	100(21)
	사립	73.3	26.7	100(15)

<표 V-7-2> 취학전 연령 단계별 체계화 방식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만0-2세 과정과 만3-5세 누리과정 두 단계로 체계화	만0-5세 교육·보육 협력 일원화	계(수)
전체		70.9	29.1	100(86)
학력	고졸	50.0	50.0	100(4)
	전문대졸	57.1	42.9	100(14)
	4년제졸	72.2	27.8	100(54)
	대학원이상	85.7	14.3	100(14)

(표 V-7-2 계속)

구분		만0-2세 과정과 만3-5세 누리과정 두 단계로 체계화	만0-5세 교육·보육 협력 일원화	계(수)
자녀재원	국·공립	70.0	30.0	100(40)
기관유형	사립	71.7	28.3	100(46)

취학전 유아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두 번째 문항은 바람직한 관할 부처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인데, '만 0-2세 복지부, 만 3-5세 교과부' 안을 전문가와 학부모 전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전문가 70.2%, 학부모의 36.0%). '만 0-5세 교과부'안은 두 번째로 선호되었는데 특히 4년제졸 학력의 학부모(35.2%)와 국·공립유치원 학부모(37.5%)는 이 안을 가장 선호하였다(표 V-7-3, 표 V-7-4 참조).

〈표 V-7-3〉 취학전 연령 단계별 바람직한 관할부처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만0-2세 복지부, 만3-5세 교과부	만0-5세 교과부	만0-5세 복지부	만0-5세 제3의 부처	기타	계(수)
전체		70.2	28.1	0.0	1.7	0.0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67.5	30.0	0.0	2.5	0.0	100(40)
	중소도시	76.9	23.1	0.0	0.0	0.0	100(13)
	읍면지역	75.0	25.0	0.0	0.0	0.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68.6	28.6	0.0	2.8	0.0	100(36)
	학계전문가	71.4	28.6	0.0	0.0	0.0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71.4	23.8	0.0	4.8	0.0	100(21)
	사립	66.7	33.3	0.0	0.0	0.0	100(15)

〈표 V-7-4〉 취학전 연령 단계별 바람직한 관할부처에 대한 의견(학부모)

단위: %(명)

구분		만0-2세 복지부, 만3-5세 교과부	만0-5세 교과부	만0-5세 복지부	만0-5세 제3의 부처	기타
전체		36.0	32.6	20.8	2.3	8.1
학력	고졸	50.0	25.0	25.0	0.0	0.0
	전문대졸	42.9	28.6	21.4	0.0	7.1
	4년제졸	33.3	35.2	20.4	3.7	7.4
	대학원이상	35.7	28.6	21.4	0.0	14.3

(표 V-7-4 계속)

구분		만0-2세 복지부, 만3-5세 교과부	만0-5세 교과부	만0-5세 복지부	만0-5세 제3의 부처	기타
자녀재원 기관유형	국·공립	32.5	37.5	22.5	0.0	7.5
	사립	39.1	28.3	19.6	4.3	8.7

1) 유아교육·보육의 재구조화 지향

유아교육과 보육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두 가지 선택 항목을 제시하여 조사되었고 그 결과는 <표 V-7-5>와 같다. 전문가의 96.5%가 '누리과정시행 및 일정수준 이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협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7-5> 유아교육·보육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시행 일정수준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협력	누리과정시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협력하여 제3의 기관 명칭을 부여	계(수)
전체		96.5	3.5	100(57)
근무 소재지	대도시	95.0	5.0	100(40)
	중소도시	100.0	0.0	100(13)
	읍면지역	100.0	0.0	100(4)
직업	유치원 교원	94.3	5.7	100(36)
	학계전문가	100.0	0.0	100(21)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90.5	9.5	100(21)
	사립	100.0	0.0	100(15)

실질적인 유아교육·보육 내용 협력인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세 가지 문항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V-7-6> 과 같다. 첫째, '취학직전 1년간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상승하였다'에 전문가의 87.7%가 찬성하였으나 응답자 유형별로는 읍면지역 응답자 25.0%와 사립교육현장전문가의 26.7%가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둘째, '모든 만 5세에게 유아학비가 확대 지원됨으로써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성이 보장되었다'에 전문가의 89.5%가 찬성하였으나, 읍면지역 응답자의 25.0%는 반대하였다. 셋째,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에 전문가의 96.5%가 찬성하였다.

〈표 V-7-6〉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견(전문가)

단위: %(명)

구분		취학직전 1년간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단계 상승		모든 만5세 유아학비가 확대 지원으로 생애초기출발점 평등 보장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87.7	12.3	89.5	10.5	96.5	3.5
근무 소재지	대도시	90.0	10.0	92.5	7.5	95.0	5.0
	중소도시	84.6	15.4	84.6	15.4	100.0	0.0
	읍면지역	75.0	25.0	75.0	25.0	100.0	0.0
직업	유치원 교원	85.7	14.3	94.3	5.7	97.1	2.9
	학계전문가	90.5	9.5	81.0	19.0	95.2	4.8
유치원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95.2	4.8	95.2	4.8	95.2	4.8
	사립	73.3	26.7	93.3	6.7	100.0	0.0

8. 요약 및 시사점

전문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정책의 경우 10년 이내 지속 추진과제로 응답된 반면 그 외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5년 이내 정책과제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는 현행 유아학비 지원 금액 및 향후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행 유지가 아닌, 유아학비 지원금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경우 월 30~40만원과 월 3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월 30~4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가구소득 대비 걱정 유아학비 비율에 대해 전문가는 가구 소득의 10% 이내, 학부모는 5% 이내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유아학비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학부모 모두 과반 수 이상기본 누리과정은 무상으로,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는 소득별 차등지원이 적절하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일 기준 5시간은 수업 및 유아지도 3시간은 수업준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국·공립 유치원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의 90%와 학부모의 86%가 누리과정 담당교사 양성기간이 4년제로 높여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전문가의 91%가 유아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이 '유아교육 교사자격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의 약 50%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걱정 급여 수준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청 장학지도가 가장 시급하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 적용할 누리과정 운영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도 중요하다고 밝혀졌다. 더불어 방과후 과정 관련 정책에 대해 전문가의 75.4%가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지침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네 번째, 교육현장 및 학계전문가 모두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아 분담률이 50%가 적당하며, 유아교육 수요 신규 발생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한 읍면지역의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의 단설 및 3학급 이상으로의 확대 안에 대해 전문가의 83%가 찬성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평가결과가 국가재정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전문가(86%), 학부모(90.7%)가 찬성하였으며, 정보공시제·운영위원회·재무회계규칙 등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 87%가 찬성하였으며, 전문가 대부분(98.2%)이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확대지원 질문에 찬성하였다.

다섯 번째, 유치원 평가의 지속적 추진 및 결과 공개와 활용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94.7%)와 학부모(98.8%)로 찬성하였고, 유치원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파트 표준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의 체계화 또한 전문가의 98.2%가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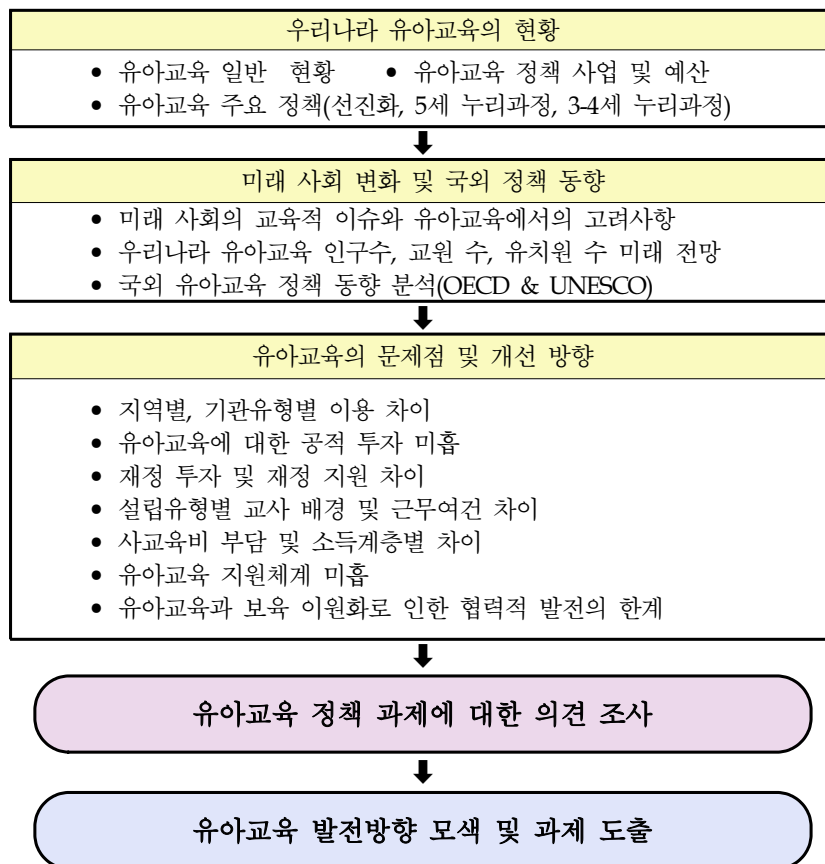
하였다. 이어서 조기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조기 발달 지연 유아 지원단(가칭)을 구성의 필요성에 전문가의 87.7%가 찬성, 조기 발달 지연아의 욕구에 맞추어 개별 지도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전문가의 77.2%가 찬성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위한 '엄마봄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안에 대하여 전문가 전체의 63.2%가 찬성하였고, 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종합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하여 전문가 대부분(98.2%)이 찬성, 취약계층 가정유형별(저소득, 농어촌,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각기 다른 양육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98%가 찬성하였다.

여섯 번째,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81%가 찬성하였고, 지역교육청별 지역 유아교육 지원센터 설치로 교사 연수 및 체험시설 공간 마련 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전문가(96.5%)가 찬성하였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역 유아교육 지원센터에서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올바른 조기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바른 인성형성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해야한다는 의견과,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기능 강화에 전문가의 약 98%가 찬성하였으며, 자녀발달 단계별 부모자격 인증제(가칭) 도입의 경우 전문가의 약 77%, 학부모의 약 90%가 찬성하였다.

일곱 번째, 취학전 교육·보육의 행정 체계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학부모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82.5%)와 학부모(70.9%) 모두 '만 0-2세 과정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두 단계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로 응답하였고, '만 0-2세 복지부, 만 3-5세 교과부' 안을 전문가와 학부모 전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전문가의 70.2%, 학부모의 36%), 전문가의 96.5%가 '누리과정 시행 및 일정수준 이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만 5세 누리과정 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87.7%가 취학직전 1년간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상승,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성 보장 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89.5%가 찬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항목에 전문가의 96.5%가 찬성하였다.

VI.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을 전망하고, 국내·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의견조사를 통하여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관련 정책과제의 도출 절차는 [그림 VI-1-1]과 같다.



[그림 VI-1-1]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과제 도출 절차

1. 유아교육 발전 방향

유아교육 정책은 서비스에의 접근성(Availability),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 서비스의 질(Quality)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모든 유아들에게 지역차, 소득차, 개인차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의 보편성과 균등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 방향은 첫째, 유아교육 기회 제공의 보편성과 균등성 확보, 둘째, 유아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확보, 셋째, 유아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 해소이며, 넷째, 유아교육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협력 지향이다.

유아교육 발전 과제 선정의 첫 번째 근거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유아학비 지원(바우처 방식)과 더불어 교사, 교육과정, 시설을 포함하는 주요 변인의 질 제고 및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 인프라를 우선 확대한다는 것과, 네 번째는 소득계층별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도가 차이가 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시행으로 사실상 의무교육을 이룬 현 시점에서 학부모의 부담 정도, 교사의 학력, 자격 및 근무 여건, 지원체계 등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것이다.

2. 유아교육 정책 과제

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이어서, 제 2절에서는 각 정책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 과제(총 15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고(표 VI-2-1 참조), 차기정부가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2-1〉 유아교육 중장기 정책 영역 및 정책 과제 요약표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차기정부 추진 과제 (단기:2~3년)	지속 추진과제 (중기:5년)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1)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	
	2)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 관리·지원 강화	1)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	
	2)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	
	3)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1)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2)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조기 교육격차 해소		○
	2)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정부의 전달체계 강화		○
	2) 육아정책연구소의 국책연구기관 역할 강화	○	
	3)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
	4)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1)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
	2) 누리과정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	

이어서 유아교육 정책 영역별로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1) 유아학비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누리과정 운영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함.
- 정부 지원금액과 표준교육비와의 차액 부분(학부모 일부담)은 소득별 차

등 지원 고려

- ※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은 2012년 20만원에서 점차 증액하여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될 예정
- ※ 표준유아교육비는 400,000원 수준(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⁸⁾ 제시)

2)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 기본과정외의 방과후 과정 추가 비용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함.
 - 정부 지원금액과 표준교육비와의 차액부분(학부모 일부담) 및 방과후 과정 추가 비용 등 자녀교육비 부담을 가구소득의 5-10% 이하로 유지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 관리·지원 강화

1)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원아 분담율을 매년 2.5%p씩 증가시켜 35%까지 확대함.
 - ※ 2012년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분담률은 564,834명의 22.3%, 사립은 77.7% 수준임.
-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유아교육 수요 신규 발생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함.
 - 저소득, 다문화 및 장애아 통합교육 등 취약계층 교육 서비스 우선 제공
- 공립단설유치원 설치와 함께 읍면지역에 집중된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을 2~3개씩 통폐합하여 적정규모(단설 및 3학급 이상으로)로 확충함.

2)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함.
 - 사립유치원 특례 문제(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설립자 보상, 가업 승계 등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 유치원의 규모와 특성이 초·중등학교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8) 우명숙 외(2012).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미출판 자료.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재무회계규칙의 제정 보류 상태임.

- 공공성이 확보된 일정수준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를 30%까지 지원함.
 - 2012년에 도입된 정보공시제, 운영위원회 및 향후 도입될 재무회계규칙을 모두 시행하는 유치원이 대상이 되며, 유치원평가 결과를 고려함.
 - ※ 2016년에 사립 교사인건비를 30%수준까지 지원하게 하게 되면, 표준 교육비 400,000원에 근거 사립유치원 원비가 300,000원 내외로 낮아질 것이며, 이 경우 학부모 지원금액은 300,000원 수준에서 추가 증액하지 않아도 됨.

3)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 유치원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 결과를 공개·활용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가 재정 지원과 연계함.
- 유치원의 교육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함.
 - 컨설팅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하여 표준 컨설팅모형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컨설턴트 표준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활성화함.

다.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1)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유아교사의 양성 기간을 초등교원 수준인 4년제로 제고함.
 - 2, 3년제의 전문학사가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이나, 방송대학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양성기관 및 체제가 동일함.
- 교사가 기본과정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일 8시간 근무시간 중, 5시간은 수업 및 유아 지도, 3시간은 평가 및 수업 준비 시간으로 보장함.
 -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 방과후 과정 전담 교사를 배치함.
 - 행정 및 잡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이나 보조인력을 배치·지원함.
-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공립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함.

-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에 대한 기본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함.

2)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함.
 -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을 4년제 교사 자격으로 통일함.
 - 실내·외 시설·설비 및 환경 기준을 마련·제시함.
- 방과후 과정의 기본 운영 지침을 마련·제시함.
 - 방과후 과정의 운영시간, 교사배치, 시설, 프로그램 등 포함
 -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를 정착 및 확산시킴.
- 누리과정 담당 교사 심화 연수를 실시함.
 - 3-5세 누리과정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및 지도 방법에 대한 심화 연수(기본 생활습관, 인성교육, 민주시민의식 등 강조 내용 포함)
- 운영시간 및 학급구성형태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함.
-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관리·감독 및 컨설팅장학 지원을 강화함.
 -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누리과정 컨설팅장학지원단(가칭)' 구성·운영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적용할 누리과정운영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라.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조기 교육격차 해소

- 유아기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및 '조기 발달지연 유아 지원단(가칭)'을 구성·운영함.
 - 조기 발달 지연 평가도구 및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교육인적자원부, 2008, 일명 '한국형 헤드스타트'로 칭함)의 현장 활용 지원 및 활성화
 -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조기 발달지연 유아 지원단(가칭)'을 구성·운영함.
-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 맞춤형으로 개별 지도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을 지속함.

2)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양육환경 차이, 유아 및 부모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일반 저소득층가정, 농어촌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별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함.
 -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문제와 양육부담이 자녀의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약계층 부모의 양육 역량 및 정서적 안정감 등을 지원하는 부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

〈표 VI-2-2〉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영역	저소득가정	농어촌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가정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연계·지원	-언어, 인지발달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유아의 사회, 정서 안정 및 기초 학습 지도 -영양 관리 -부모자신의 정신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	-인지학습지도 및 기본생활 습관 -성인동반활동, 문화체험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유아 한국어 및 이중언어 지도 -부모 역할 강화 및 정보·자료 제공 -한국 문화체험 및 학습지도 지원
인력 지원	-기본적인 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 지도 인력 지원	-취약한 교육 여건 보완 및 문화 프로그램 정보·자료 제공지원 인력	-방과후 보호 및 학습 지도 인력 지원	-부모역할 대행 및 보완, 인지 학습 지도 인력 지원	-다문화이해강사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 지도 인력

- 유치원의 취약계층가정 유아를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 취약계층가정 유아를 위한 건강 및 안전, 교육·보육,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보장, 건강·안전 등 교육복지서비스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관련 사업들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엄마품 은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활성화 함.

마.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정부의 전달체계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
 - 현재 유아교육과를 '유아교육정책관(가칭)'으로 승격하고, 가칭 '유아교육 선진화추진과', '누리과정지원과', '유아교원정책과'를 두며 각 과별로 최소 10명씩 총 30명의 인력을 배치함.
 - ※ 교과부 유아교육과 2012년 11월말 현재 인력은 11명(파견자 4명, 근무지원 1명 포함시 16명)임.
-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대함.
 - 시·교육청에는 교육정책국내 유아교육과에 유치원설립운영팀, 누리과정 지원팀, 교원정책팀에 전문인력을 최소 5명씩 총 15명 내외로 확충함.
 - 지역교육청에는 교육국내에 유아교육지원과(또는 팀)를 별도로 두고, 유아 담당 전문직 인력을 최소 3명이상 배치함.

2) 육아정책연구소의 국책연구기관 역할 강화

- 정부의 누리과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함.
 - 누리과정 추진 지원 및 유·보 협력 방향 정립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 연구수행 기능을 더욱 강화함.
-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수행 강화 및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
-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의 교류·협력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유·보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누리과정 발전 포럼, '12. 7. 26 발족).
 - 향후 상기 누리과정발전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유·보간 협력 및 누리과정 모니터링을 활성화함.

3)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가정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실시함.

- 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함.
-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함.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바른 인성 갖춘 부모되기, 책읽어주기, 함께 놀이하기, 인성체험 활동 등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게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유아의 다양한 놀이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교육기부체제 구축 및 기부 사업을 활성화함.

4)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 대중매체를 통하여 올바른 유아교육 및 바른 인성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함.
 - 일반국민 대상, 예비부모 대상, 현 유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함.
 - 영유아기부터의 가정교육, 부모역할,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
- 유아교육 홍보 및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자격 인증제(가칭)를 도입·시행함.
 - 대중매체(TV, 라디오 등)를 활용한 부모교육 강의 및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사이버 강의 실시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및 지역 센터에서 실시하는 집합 부모교육에 참여토록 함.
 - 수강을 마친 부모(예비부모 포함)에게 자격 인증서를 발급함.

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1) 취학전 교육·보육의 체계화

- 0-2세 보육과정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교육내용 단계를 체계화함.
 - 만 0~5세 유아교육·보육을 전체적인 연속성상의 단일 체제 내에서 조망하고,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발전적인 연계·협력을 통하여 0-2세 표준보육

과정 → 3-5세 누리과정 →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교육·보육 내용의 체계화를 이룸.

- ◆ UNESCO는 초기 아동교육을 2개 단계로 구분하는 ISCED 2011 개정안 채택 ('11.11.5).
- 유네스코가 제정하는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ISCED level 0” 단계는 0세-취학전 교육 포함
- ① 0-2세 아동 교육적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
- ② 3세-초등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ISCED 02)

2) 누리과정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강화함.
 - 누리과정 사업을 총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함.
- 누리과정의 성공적 시행 및 유·보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누리과정 추진 TF'를 구성·운영함.
 -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의 국장급이상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추진 TF'를 구성·운영함.
 - 누리과정 추진 및 유·보 통합 방향 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법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함.

3. 재정 소요 추정

이상에서 제시한 유아교육 정책 과제의 재정 소요 예산(2013~2017년)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재정 소요 추정의 기준

첫째, 정부의 기존 정책에 따라 이미 확보된 재정 소요액은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제안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만을 산출하였다.

둘째, 장기적인 지속 추진과제는 제외하고,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단·중기과제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셋째, 기관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추정하지 않았다.

넷째, 재정 소요 기준 단가나 금액 기준은 2012년도 현재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1억 미만의 소요액은 제외하였다.

나. 유아교육 발전 세부내용 및 재정소요 제시 항목

유아교육 발전 정책 영역, 정책과제별 세부내용 중 재정 소요 제시 항목은 다음 <표 VI-3-1>과 같다.

<표 VI-3-1> 유아교육 발전 세부내용 및 재정소요 제시 항목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재정 소요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기본 누리과정 지원금액 현실화 지원	유아학비 지원금액과 표준교육비와의 차액부분 소득기준 차등 지원	○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차등 지원	기본과정외의 방과후과정 추가비용은 소득기준 차등 지원 자녀교육비 부담을 가구소득의 5~10% 이내로 개선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 관리·지원 강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원아 분담율을 매년 2.5%p씩 증가시켜 35%까지 확대함. 유아교육 수요 신규발생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 읍면지역 소규모공립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적정규모로 확대 육성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 도입 공공성 확보, 표준교육비 준수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 30%까지 지원	○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유치원 평가 지속 추진, 결과를 국가 재정 지원과 연계 유치원 컨설팅 지원 강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교원의 근무 여건 및 전문성 제고	유아교사 양성기간을 4년제로 강화
교사가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및 행정인력 배치·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공립 교사 수준으로 제고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표 VI-3-1 계속)

발전 방향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재정 소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교육과정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누리과정 운영 인적·물적 요건 강화	
		방과후과정의 기본 운영 지침 제시	
		누리과정 담당 교사 심화 연수 실시	
		운영시간 및 학급구성 형태별 누리과정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 관리·감독 및 컨설팅장학지원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 적용 누리과정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조기 교육격차 해소	유아기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및 '조기 발달지연 유아 지원단(가칭)' 구성·운영	
		발달지연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희망유아교육사업 지속 추진	○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가정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치원의 취약계층가정 유아 대상 종합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정부의 전달체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의 조직과 인력 확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조직과 인력 확대	
	육아정책연구소의 국책연구기관 역할 강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수행 강화 및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유·전문가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유치원에서는 가정과 연계,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 실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가 부모 함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유아교육 기부체제 구축 및 기부사업 활성화	
대중매체 통한 올바른 유아교육 대국민 홍보 EBS 교육방송의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기능 강화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격인증제(가칭) 도입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취학전 교육·보육의 체계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교육내용 단계 체계화	
	누리과정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3-5세 누리과정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 관리 강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누리과정 추진 TF' 구성·운영	

다. 정책 과제별 재정 소요 추정(안)

1)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 대상아는 만 3-5세 총 유아수 1,400,000명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률 95%수준까지 고려, 누리과정 금액 차이 지원 대상은 1,330,000명 -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취원율을 95%수준으로 추정함.
- 현 지원금액(5년간 지원금액의 평균 250,000원)과 표준교육비(400,000원) 차액 150,000원 기준
- 공립 유치원 유아수 증가 정책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대상 사립 유아수 증가는 1,330,000명의 50%(665,000명) 고려
- 추가 비용 금액은 소득기준 차등 지원 고려하여 50%(75,000원)로 책정
▶ 665,000명 x 75,000원 x 12개월 x 5년 = 29,925억원

2) 국·공립유치원 확충

-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분담률 35%까지 목표로 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 신설 소요만 고려함.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 87% 재원('12. 3월 현재)하고 있으므로, 목표 취원율 95%기준으로 하면 약 112,000명 증원 예상
- 112,000명 증원 기준,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2씩 수용 고려
- 즉, 3-5세 유아 약 56,000명 추가 수용 고려
 - 단설 국공립유치원 평균 원아수 150명 기준으로 약 370개원 필요
 - 적정학급규모 육성 및 기타 기관 흡수 발전 등 제외하면 신설은 1/2인 185개 신설 필요
- 단설 국공립유치원 신설 비용 단가 30억원 기준
▶ 185개원 x 3,000,000,000원 = 5,550억원

3)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지원

- 향후 취원을 상승에 따른 학급수를 고려한 교사수를 총 30,000명으로 추정
- 공립 대 사립의 원아 분담율을 35% : 65% 고려시, 사립교사는 20,000명 추정
- 장기적으로는 공립교사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되, 1차적으로 공립 교사의 90%수준까지 제고할 경우
 - 공립과 사립교원의 평균경력차이 10년(10호봉)을 감안, 사립 교사 급여는 약 3,000,000원 책정가능, 이의 90% 수준은 2,700,000원
- 2,700,000원의 30%수준은 약 800,000원
- 현재 정부의 사립 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은 460,000원이므로, 차액은 약 340,000원 수준임.
- ▶ $340,000원 \times 20,000명 \times 12개월 \times 5년 = 4,080억원$

4)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 정부의 기존 취약계층 지원 사업외에 신규사업 추가 비용
- 시·도교육청별로 담당전문인력 10명씩 배치시, 인건비 연 20,000,000원
- 만 3-5세 유아 1,400,000명의 약 10%인 140,000명 대상 개별 프로그램지원, 자료 단가 연간 100,000원
 - ▶ 담당인력 인건비 17개 시·도 $\times 10명 \times 20,000,000원 \times 5년 = 170억원$
 - ▶ 자료 지원비 $140,000명 \times 100,000원 \times 5년 = 700억원$

라. 재정 소요액 종합

〈표 VI-3-2〉 신규 추가 정책 과제의 재정 소요 추정안

사 업 명	총소요액
1)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29,925
2) 국·공립 유치원 확충	5,550
3)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지원	4,080
4)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 담당 전문 인력	170
▪ 자료 지원비	700
계	40,425

단위: 억원

4.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 전망, 국내·외 유아교육 정책 동향 분석, 유아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유아교육 중장기 정책 영역과 과제를 제시하고, 신규 및 추가 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정책의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및 실시 과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문회의 결과, 새로운 정책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가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이나 현장 교원들의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사업은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는 시범적용 연구를 추진한 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최근 현장 교원들의 업무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 실천하고 관리하는 교육청 전문직 또한 업무 부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정책과제의 추진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원만한 현장 착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의 일정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 적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부처의 전달체계와 유아교육 지원기관들간의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과의 업무 중 현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유아교육지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유아교육지원 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본 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의 전달체계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집중하며, 유아정책연구소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 정책연구와 누리과정 지원 연구사업을 담당하며,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⁹⁾ 유치원 현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시·도간의 정책 실행 및 성과면에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모든 정책은 전국 공·사립유치원들에게 공히 적용하여 지역간, 설립유형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유치원의 교육력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 단독의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지방정부 및 시·도교육감에게 정책 추진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업무 담당자 및 교육위원회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시·도간에 정책 실행과 성과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교육감의 권한하에 전문직의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¹⁰⁾, 교육감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 인력의 확충과 유아교육 사업 추진의 결정되게 되었다. 이에 유아교육 정책 핵심과제별로 시·도의 정책 실행 목표와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각 시·도의 사전 추진계획과 정책 실행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시·도간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도간 차이 발생 사유를 점검함은 물론, 타 시·도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 담당자들간의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도 해당 시·도의 유아교육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중앙부처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유아교육 정책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유치원과 유사기관과의 교육적 차별성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제고하게 됨으로써 유치원의 취원율을 더욱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가 학부모의 만족도에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매체 및 전달체

9) 2012년 11월 15일 개원 예정으로, 육아정책연구소와 연계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유치원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됨(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TF 협의 자료).

10) 2013년 1월 1일부터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직(일반직, 기능직 등),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인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계를 통한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등은 유치원 현장에서 실제 실행되고 정착되도록 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유치원 교원들과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를 점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모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단에는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교육청 담당자 등 전달체계의 관계자는 물론 무엇보다도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보다 실제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 개선 및 정책 구체화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의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흡수·발전시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6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흡수·협력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인식과 평가 결과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화 정책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 강화·추진해야 할 과제, 또는 보완·추진해야 할 과제, 폐지해야 할 과제 등으로 구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선진화 도입 계획.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 국회예산정책처(201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 김영옥·박은혜·장명림·신은수·문무경·조형숙·박동인·김은영·김은설·신광수·안정은(2009).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운진·김경미(2011). 2010 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 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조혜주·이보라(2011).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주철(2004).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과제: 유아교육법 제정에 관한 토론.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문무경·서문희(2012). 유네스코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조정 국제비교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서문희·김문정(2011).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조정을 위한 국제비교 기초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 박영숙·박경준·김진화·김성기·김기수·정유숙(2006).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 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2011). 출산 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은수·정미라·박은혜·권정운·전홍주(2008). 미국과 영국의 유아교육 효과연구 결과가 한국 유아교육 발전에 주는 시사점. 유아교육학논집, 12(5), 451-471.
- 육아정책연구소(2012). 육아정책 Brief(9월)- 영유아 교사의 근무여건을 진단한다.
- 이옥·서문희·유희정·장명림·이미화·김은설·신나리 외(2007).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명림·김진영·김현숙·박창언·신은수·이연승·김명순·이미정·양승실·이신동·민용성·서문희(2011).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박수연·이세원·김주연·정주희·송윤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미라·천세영·신은수·문무경·정명경(2005).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비전 2010).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진미석(2008). 국가 교육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욱·전경원·민병철·최보윤(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석준·김병수·서영웅·이지혜(2010).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최윤경·문무경·원종욱·김재원(2011). 육아지원인력 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05). 전국 장애인구 추계.
- 통계청(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 한국교육개발원(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 한지원·황동연·김성국·박은지(2008). 미래교육을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 실천전략 연구: 소집단 과학심화활동 참여교사 인식조사 중심. 서울: 교육과

학기술부.

Barnett(2000). Economics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In J. P. Shonkoff, &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589-61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ga, Y., Bennett, J., & Moss, P. (2010). *Caring and Learning Together: A cross-national study on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ithin education*. Paris: UNESCO.

OECD(2011a).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1*.

OECD(2011b).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한국어 번역본)*. 한국개발연구원.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bstract

A Study on Mid-Long Term Development Dire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2013 ~ 2017

Myung-Lim Chang Sung-On Hwang Mi-Na Kim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plor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s in overall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from 2013 to 2017 and further to suggest concrete political tasks. Literature review offered analy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overall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luding features and tasks in the current governmental policies and on the recent tren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abroad including OECD and UNESCO suggestions to Korea.

Two consultative meetings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ionals from academic and administrative circles were conducted to elicit directions for proceeding policies for mid to long term. Surveys with parents as well as professionals were followed to examine appropriate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tical tasks suggested. The directions suggested for future polic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to ensure universality and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to secure quality and public release; to close the gap bred; to activate involvement of homes and communities; and to pursue gradual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detailed political tasks include 1) expansion of tuition support, realization of tuition, income-based support for after-curriculum expense; 2)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for teachers, support for teacher training, upgrading teaching certificates; 3) expansion of public kindergarten, support on private kindergarten implementing public release; 4) empowerment of the vulnerables, 5) enhancement of governmental support system expanding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public advertisement and parent empowerment, and 6)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newly organizing by age etc.

부 록

부록 1. 질문지(전문가용)

부록 2. 질문지(학부모용)

부록 1. 질문지(전문가용)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국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인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2013~2017』 수행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질문지의 응답 결과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장명림 선임연구위원 (010-6340-6455) (mlchang@kicce.re.kr)
- 공동연구진: 황성온 부연구위원 (010-2853-5236) (kinder81@kicce.re.kr)
김미나 부연구위원 (010-4092-7771) (mkim@kicce.re.kr)

전문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원장/원감
2. 교사
3. 학계(교수, 강사)
4. 교육청 유아담당 전문직
5. 학부모
6. 기타

전문1-1. (전문1의 1, 2 응답자만) 설립 유형을 구분해주세요.

1. 국·공립
2. 사립

전문2. 근무기관 소개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대도시(광역시)
2. 중소도시(도지역의 시단위)
3. 읍면지역(도지역의 군단위)

전문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1. 다음은 「유아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다음 아래 표는 유아교육 정책과제입니다. 15개의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순서대로 5개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정책 방향		정책 과제
A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①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②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지원
B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③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④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C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관리·지원강화	⑤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⑥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⑦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D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⑧ 조기 교육격차 해소
		⑨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E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⑩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⑪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 시설 확대
		⑫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⑬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F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⑭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⑮ 유아교육·보육의 재구조화 지향

문2. 다음 유아정책 과제의 적절한 추진 시기를 체크해주세요.

정책 방향		정책 과제	향후 5년 이내	향후 10년 내외
A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①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①	②
		②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지원	①	②
B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③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①	②
		④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①	②
C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관리·지원강화	⑤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①	②
		⑥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①	②
		⑦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①	②
D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⑧ 조기 교육격차 해소	①	②
		⑨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②
E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⑩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①	②
		⑪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 시설 확대	①	②
		⑫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①	②
		⑬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①	②
F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⑭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①	②
		⑮ 유아교육·보육의 재구조화 지향	①	②

II. 다음은 「A.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 2012년도 만 5세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월 20만원)
- 2013년부터 만 3, 4, 5세 유아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확대(단계적으로 증액 2016년에 30만원)

문3.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누리과정 적정 지원금액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정부 지원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유아학비 증액이 필요하다

문3-1. (문3의 2응답자만) 유아학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비지원금 월 _____ 만원

A2. 기본 누리과정외의 추가 비용 지원

문4. 유아학비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사항을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1.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 후 과정 무상지원
2. 기본 누리과정 무상지원 + 방과 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3. 기본 누리과정 차등지원 + 방과 후 과정 소득별 차등지원

문5. 유아학비 차등지원이 적용된다면, 적합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가구 소득
2. 부모 취업 여부
3. 자녀 수
4. 기타()

문6.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유아학비 부담(방과 후 포함)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방과후 과정 비용도 포함하여 말

씀해주세요.

1. 가구 소득의 20%이내
2. 가구 소득의 15%이내
3. 가구 소득의 10%이내
4. 가구 소득의 5%이내

Ⅲ. 다음은 「B.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문7. 다음 보기의 교사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1일 5시간은 수업 및 유아 지도, 3시간은 수업 준비 시간으로 지켜져야 한다
2. 방과후 과정 전담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3. 교사가 수업에 충실하도록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4. 유아교사의 복지(안식년제) 수준이 초등과 동일해져야 한다
5.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6.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참여를 위해 대체 교사 및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문8.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사항별로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의 양성 기간을 초등교사 수준인 4년제로 제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을 유아교육교사 자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현행대로 유아교사, 보육교사가 각각의 자격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문9.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의 70%
2.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의 80%
3.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의 90%
4.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의 100%

B2.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보급]

문10.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만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적용을 위한 심화연수가 필요하다.
2. 운영시간 및 학급구성형태에 따른 누리과정 기본 운영 매뉴얼(혼합/복식포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구체적인 연계 지침서가 보급되어야 한다.
4. 누리과정 표준운영모형 개발 및 시범유치원 운영이 필요하다.

[방과후 과정 관리]

문11.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지침(운영시간, 교사배치, 시설,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국가에서 개발·보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를 통한 민간 프로그램의 선정 및 질관리 체제 구축되어야 한다

[질적 수준 관리·감독 및 지원체계]

문12. 누리과정 질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적용할 '누리과정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해야 한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필요하다
3. 유아교육·보육이 함께 참여하는 '누리과정 컨설팅지원단(가칭)'이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4. 누리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학부모 모니터링단 포함)이 강화되어야 한다

IV. 다음은 「C.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관리·지원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문13.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아 분담율(현재 22.3%)이 ____%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30% 2. 40% 3. 50% 4. 50% 이상

문14.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유아교육 수요 신규 발생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한다.	①	②	③	④
2) 저소득, 다문화 및 장애아 협력교육 등 취약계층 교육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3) 읍면지역에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시설(단설 및 3학급 이상으로)로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C2.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문15.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 재정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공공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정보공시제, 운영위원회, 재무회계규칙 등)에 대해서는 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한다.	①	②	③	④
3) 사립유치원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C3.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강화

문16.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유치원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2) 유치원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컨설턴트 표준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체계화해야 한다. .	①	②	③	④

V. 다음은 「D.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조기 교육격차 해소

문17.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 지원하는 '조기 발달지연 유아 지원단(가칭)'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유치원 조기 발달 지연아를 맞춤형으로 개별 지도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D2.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문18.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종합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일반 저소득층, 농어촌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별로 각기 다른 양육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VI. 다음은 「E.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E1.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문19.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별로 ___개가 설치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이상

문20.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국가의 유아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E2.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 시설 확대

문21.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사연수 및 체험시설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E3.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문22.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치원에서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2.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에서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 유아의 다양한 놀이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교육기부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E4.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문23.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올바른 조기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바른 인성 형성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자격 인증제(가칭)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Ⅶ. 다음은 「F.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F1.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문24. 취학전 연령 단계별 체계화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뒷 문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만 0~5세 유아교육·보육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고 ().

1. 만 0~2세 과정과 만 3~5세 누리과정 두 단계로 체계화한다.
2. 만 0~5세 교육·보육을 협력 일원화 한다.

문25. 취학전 연령 단계별 체제화를 위해 바람직한 관할부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만 0~2세 복지부, 만 3~5세 교과부
2. 만 0~5세 교과부
3. 만 0~5세 복지부
4. 만 0~5세 제 3의 부처
5. 기타()

F2. 유아교육 · 보육의 재구조화 지향

문26. 바람직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누리과정 시행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협력한다
2. 누리과정 시행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협력하여 '제 3의 기관' 명칭을 부여한다

Ⅷ. 다음은 「만 5세 누리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7. 만 5세 누리과정 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표준보육과정의 협력이 이루어져, 취학직전 1년간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2) 만 5세 모두에게 유아학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이 보장되었다.	①	②	③	④
3) 만 5세 유아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	①	②	③	④

응답해주신 이외 다음 15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응답해주세요. 정책과제는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 각 영역당 1개 과제씩 응답)

정책 방향		정책 과제
A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및 실질적 형평성 확보	① 기본 누리과정 지원 금액 현실화 지원
		② 기본과정/외의 추가 비용 지원
B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③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④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C	공공 인프라 확대 및 기관관리·지원강화	⑤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⑥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및 지원 확대
		⑦ 유치원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D	조기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⑧ 조기 교육격차 해소
		⑨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E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⑩ 육아정책연구소의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⑪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 시설 확대
		⑫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⑬ 대국민 홍보 및 부모 역량 강화
F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	⑭ 취학전 교육·보육의 연령 단계별 체계화
		⑮ 유아교육·보육의 재구조화 지향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설문지(학부모용)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국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인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2013~2017』 수행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장명립 선임연구위원 (mlchang@kicce.re.kr)

· 공동연구진 겸 문의처: 황성온 부연구위원 (kinder81@kicce.re.kr) (02-398-7779)
김미나 부연구위원 (mkim@kicce.re.kr) (02-398-7776)

· 조사진행 문의 : 한국리서치 강연지 사원 (02-3014-1047) (이메일 넣어주세요)

선문1. 귀하의 자녀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우는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만을 말씀해 주세요

- ① 다니고 있다
- ② 다니지 않는다 면접중단

선문2.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유치원 교원 근무기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공립
- ② 사립

※ 누리과정이란?

▶ 정책 배경

- 정부는 2011년 5월 2일, 취학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만 5세 공통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관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 주요내용

-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
- 2012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4세 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소득하위 70%이하 가구) 가정의 유아와, 모든 만 5세 유아(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에게 다음과 같이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됨.
 - 만 3세 (월 197,000원), 만 4세 (월 177,000원), 만 5세 (월 200,000원)
- 2013년 3월부터는 만 3, 4, 5세 유아 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

문1.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액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2012년도 만 5세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월 20만원) 시행중
- 2013년부터 만 3, 4, 5세 유아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확대(단계적으로 증액 2016년에 30만원) 전망

1. 정부 지원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유아학비 증액이 필요하다

문1-1. (문1의 ②응답자만) 유아학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 : 월 _____ 만원

문2. 현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은 '기본 교육과정'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귀하께서는 유아학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1. 기본 교육과정(무상) + 방과 후 과정(무상)
2. 기본 교육과정(무상) + 방과 후 과정(소득별 차등)
3. 기본 교육과정(소득별 차등) + 방과 후 과정(소득별 차등)

문3. 만약 유아학비가 차등으로 지원된다면, 차등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가구 소득
2. 부모 취업 여부
3. 자녀 수
4. 기타()

문4. 자녀 1명의 월 유아학비 비용부담은 가구소득의 몇 %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 가구 소득의 20%이내
2. 가구 소득의 15%이내
3. 가구 소득의 10%이내
4. 가구 소득의 5%이내

문5. 유치원 교사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현재 유치원 교사 양성 기간은 교육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 2010년 기준으로 유치원 교사 중 35.2%는 4년제 대학 졸업자임.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유치원 교사의 양성기간을 초등학교 교사 수준(4년제 대학졸업 이상)과 동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6.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1주기 유치원 평가제도가 2008~2010년에 진행됨.
- 현재 2주기(2011~2013년) 유치원 평가 진행중.
- 평가 1주기 동안 국공립 유치원은 100%, 사립유치원은 99.5% 평가됨.
- 1주기 평가 결과를 통한 유치원 서열화를 우려하여, 평가결과는 비공개 됨.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정부의 유치원 평가제도는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7.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사립유치원 교원이 전체의 76%임.
- 사립유치원의 질관리가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교사 1인당 월 35만원 지원(처우개선비)
 - 교사 1인당 월 11만원 지원(담임교사).
 - 한 학급당 월 25만원 지원(운영비) (단, 수업료와 입학금 등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유치원 평가 결과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금액이 달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8. 다음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정부주도로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정책 시행중.
(내용: 유아 발달 특성 이해, 누리과정, 유아기 중요성 및 의미,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교육방법)
- 다양한 매체 이용하여 홍보함(TV, 전국순회 설명회, 박람회, 신문, 전광판, 인터넷 광고 등)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1)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올바른 조기 유아교육 및 바른 인성 형성의 중요성' 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유아교육 홍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EBS 교육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격 인증제(가칭)'를 도입하여 자녀의 발달 단계를 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4)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을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문9. 우리나라의 육아관련 행정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뒷 문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현재 육아지원기관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음.
- 유치원은 교육과학부 관할임(만 3, 4, 5세 이용).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임(만 0, 1, 2, 3, 4, 5세 이용).
- 만 3, 4, 5세 유아는 유치원·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음.

질문 : 만 0~5세 과정을 ()한다.

1. 두 개로 보고, 만 0-2세 과정과 만 3-5세 과정으로 분리해야
2. 하나로 보고 통합해야

문10. 현재 만 0-5세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고, 만 3-5세 유치원은 교과부 관할입니다. 유아 관련 관할 부처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이 좋을지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1. 만 0~2세 보건복지부, 만 3~5세 교육과학부
2. 만 0~5세 교육과학부
3. 만 0~5세 보건복지부
4. 만 0~5세 제 3의 부처
5. 기타

다음은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배문2.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만 20~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59세
 ⑤ 만 60세 이상

배문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대도시(광역시 이상)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배문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4년제 대졸 ⑤ 대학원 이상

배문5. 귀하는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 ① 농업종사자 ② 상업·자영업 ③ 공장근로자
 ④ 사무직근로자 ⑤ 서비스직근로자 ⑥ 전문직종사자
 ⑦ 기타

배문6. 귀 닥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배문7.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소속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만 3세 반 ② 만 4세 반 ③ 만 5세 반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2012-18

2013~201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유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26-8 93370